

발간등록번호

11-1540000-000378-10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2010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이용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보고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행내용보고서는 '95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의 구조조정사업 시책의 내용을 담아 첫 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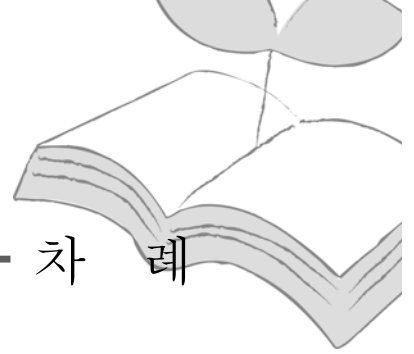
이번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2010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가 기존 시행내용보고서와 다른 특징은 그 동안 시행내용보고서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상반기의 성과를 담았으나 이번 시행내용보고서는 전년도 성과(2009년)만을 담는 방향으로 개편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시행내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내용보고서는 ▲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2장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책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09년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 주요시책 및 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행내용보고서 개편에 따라 '09년 연간 성과만을 담은 만큼 표제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로 하는 것이 적합하나 '09년 발간한 시행내용보고서 표제와 동일하게 되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2010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로 표제를 정하게 되었으니 독자들의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년 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보고서 표제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내용보고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우리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의 시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0년 12월



제 1 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2009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_ 3
 - 가. 농수산식품 부문 _ 3
 - 나. 임업부문 _ 5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_ 8
 -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_ 8
 - 나. 임업부문 _ 10
 -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_ 13
3. 2009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_ 14
 - 가. 2009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_ 14
 - 나. 2009년 임업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_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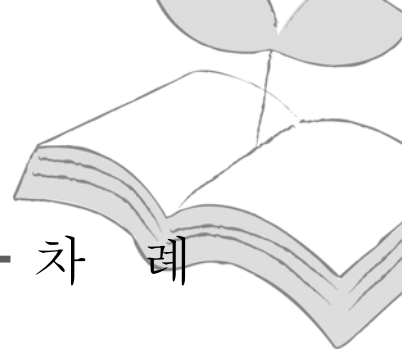
제 2 장 구조개선을 위한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_ 23
 - 가. 농업협동조합 개혁 _ 23
 - 1) 농협 개혁 추진 _ 23
 - 2) 일선조합 구조개선 추진 _ 25
 - 나. 산림조합 개혁 _ 27
 - 다.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_ 30
2. 농림수산물 유통 개혁 _ 34
 - 가. 농산물 유통 개혁 _ 34
 -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_ 34
 -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_ 35
 -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_ 36
 -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을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_ 37
 -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_ 39

-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_ 40
 -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_ 43
 - 나. 임산물 유통 개선 _ 45
 - 다. 수산물 유통 개선 _ 49
3.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추진 _ 51
- 가. 농수산식품 분야 _ 51
 - 나. 산림분야 _ 53

제 3 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_ 59
- 가. 영농규모화 촉진 _ 59
 -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_ 60
 - 다.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_ 61
 -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_ 64
 -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_ 66
 -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_ 66
 - 2)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추진 _ 69
 - 3) 농업교육훈련 _ 70
 - 4) 경영컨설팅 지원 _ 73
 - 5) 농업벤처 육성 _ 74
 - 바. 농지은행제도 _ 76
 - 사. 농지제도 개선 _ 79
 - 아.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_ 80
 - 1) 전문임업인 육성 _ 80
 - 2) 기능인 영립단 육성 _ 81
 - 자.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_ 83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_ 85
-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_ 85
 -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_ 85
 - 2) 밭 기반 정비사업 _ 86



차 례

- 3)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사업 _ 87
- 4) 수리시설 개보수 _ 88
- 5)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_ 90
- 6) 농촌용수 개발 _ 91
- 7)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_ 94
- 나. 농업의 기계화 _ 97
-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_ 98
 -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_ 98
 -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_ 99
 - 3) 축산시설 현대화 _ 100
- 라.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_ 102
-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_ 104
 -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_ 104
 - 나.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_ 105
 - 다. 종자산업의 육성 _ 108
 - 라. 종축산업의 육성 _ 110
 - 마. 사료산업의 육성 _ 113
 - 바. 동물보호·복지 추진체계 확립 _ 116
 - 사.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_ 118
-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_ 121
 -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_ 121
 - 나.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_ 123
 - 1) 농업분야 _ 123
 - 2) 임업분야 _ 126
 - 3) 수산분야 _ 128
- 5.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_ 130
 - 가. 수출 진흥대책 _ 130
 -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_ 130
 - 2) 수산물 수출 진흥 _ 130
 - 나. 수입관리 대책 _ 135
 - 1) 농림분야 _ 135



2) 수산분야 _ 137

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_ 139

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_ 139

1)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_ 139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_ 141

3)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_ 142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_ 144

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_ 145

나.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_ 146

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추진 _ 146

2)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 미생물방제) 지원 _ 148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_ 149

다.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_ 150

7. 농어가소득 증대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_ 151

가. 농어가소득 증대 _ 151

1) 농림분야 _ 151

2) 수산분야 _ 153

나.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_ 155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_ 155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_ 158

3) 농공단지 조성 _ 161

4)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_ 162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_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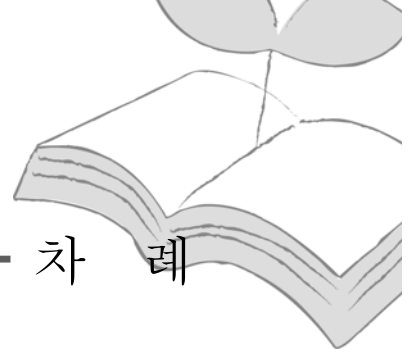
1)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_ 165

2)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_ 168

3) 산림 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_ 170

제 4 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 산업 _ 175



차 례

- 가. 제도 개선 _ 175
- 나. 효율적인 수급조절 _ 176
-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_ 178
-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_ 179
- 마. 쌀 소비 촉진 전개 _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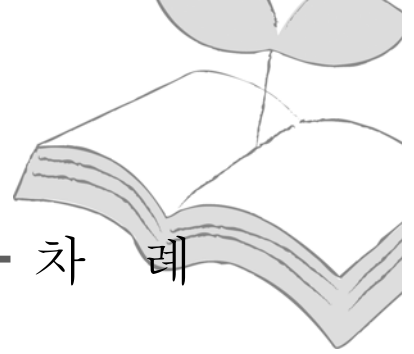
- 2. 채소산업 _ 184
 - 가. 노지채소 _ 184
 - 나. 시설채소 _ 185

- 3. 과수·화훼산업 _ 187
 - 가. 과수산업 _ 187
 - 나. 화훼산업 _ 189

- 4. 축산업 _ 192
 - 가. 한우산업 _ 192
 - 나. 낙농산업 _ 194
 - 다. 양돈산업 _ 197
 - 라. 양계산업 _ 199
 - 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방안 _ 200
 - 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_ 202
 - 사.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_ 204
 - 아. 가축질병 방역대책 _ 208
 - 자.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_ 211
 - 차. 쇠고기 이력제 추진 _ 214
 - 카.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_ 216

- 5. 임업 _ 219
 -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_ 219
 - 1)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_ 219
 - 2)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_ 223
 - 3) 경제림 단지 육성 _ 226
 - 4)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_ 228

-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_ 234
 -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_ 234
 - 2)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_ 236
 - 3)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_ 242
 - 4)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_ 244
 - 5) 산림의 녹색담 기능 제고 _ 248
 -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_ 250
 -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_ 252
 -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_ 260
 - 1)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_ 260
 - 2) 임업 기계화 촉진 _ 262
 -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_ 266
 - 4)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_ 268
 - 5) 국산재 이용 촉진 _ 271
 - 6)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_ 273
 - 라.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_ 274
 -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_ 274
 -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_ 276
 -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_ 278
 -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_ 280
 -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_ 284
 -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_ 287
 -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_ 295
 -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_ 295
 - 2) FTA 협상에 적극 대응 _ 297
 - 3) 해외조림 확대 _ 298
6. 수산업 _ 301
- 가. 연근해어업 _ 301
 -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_ 301
 -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_ 303
 - 나. 해면양식어업 _ 305
 - 다. 내수면어업 _ 306
 - 라. 원양어업 _ 309



제 5 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_ 313
 - 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_ 313
 - 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_ 315
 - 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_ 317
 -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_ 320
 - 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_ 321
 - 바. 읍 지역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중추 소도시로 육성 _ 323
 - 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_ 324
 -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_ 325
 - 자.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_ 327
 - 1)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_ 327
 - 2)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사업 _ 327
 - 3)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_ 328
 - 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_ 329
2. 교육여건 개선 _ 332
 -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_ 332
 -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_ 333
 - 다.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_ 335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_ 337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_ 339
 -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_ 339
 -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_ 340
 -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_ 340
 - 2)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_ 341
 - 3)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_ 342
5.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_ 343

- <표 1-1> 2009년 투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_ 8
- <표 1-2> 회계별·부문별 투융자 내역 _ 11
- <표 1-3>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_ 16
- <표 1-4> 회계별 투융자 내역 _ 18
- <표 1-5> 부문별 투융자 내역 _ 18

- <표 2-1> 종합유통센터 건설 현황(2009년 말) _ 38
- <표 2-2> 연차별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실적 _ 42
- <표 2-3> 하역기계화 및 소모성물류비 조사결과 _ 42
- <표 2-4> 국고보조율 변동 _ 43
- <표 2-5> 2009년 안전성조사 추진 실적 _ 44
- <표 2-6> 2009년 안전성조사 결과 _ 45
- <표 2-7>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_ 46
- <표 2-8>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_ 48

- <표 3-1>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_ 65
- <표 3-2>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_ 65
- <표 3-3> 2009년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_ 67
- <표 3-4>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_ 74
- <표 3-5> 제8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_ 75
- <표 3-6>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실적 _ 77
- <표 3-7>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_ 78
- <표 3-8>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_ 82
- <표 3-9>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_ 83
- <표 3-10> 어업인후계자 지원 실적 _ 84
- <표 3-1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_ 86
- <표 3-12>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_ 87
- <표 3-1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_ 88
- <표 3-14>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_ 89
- <표 3-15>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_ 89
- <표 3-1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_ 90
- <표 3-17>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_ 92
- <표 3-18>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_ 92
- <표 3-19>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_ 93
- <표 3-20>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_ 93
- <표 3-21>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지구 개발유형 _ 94


<표 3-2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_ 95
<표 3-2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_ 96
<표 3-24>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_ 99
<표 3-25>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_ 102
<표 3-26>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_ 103
<표 3-27>	중자산업육성 자금지원 실적	_ 108
<표 3-28>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_ 109
<표 3-29>	주요 가축개량 추세	_ 111
<표 3-30>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_ 114
<표 3-31>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_ 119
<표 3-32>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_ 119
<표 3-33>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_ 121
<표 3-34>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_ 122
<표 3-35>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_ 122
<표 3-36>	정보화교육 실적(1998~2009)	_ 124
<표 3-37>	농림수산정보망 현황	_ 125
<표 3-38>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2009년까지)	_ 127
<표 3-39>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_ 131
<표 3-40>	최근년도의 세부 수출동향	_ 131
<표 3-4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_ 147
<표 3-42>	국내 직불제 현황	_ 151
<표 3-43>	직불제 개편방향	_ 152
<표 3-44>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예산 현황	_ 154
<표 3-4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_ 157
<표 3-46>	농촌활력증진사업비 지원 현황	_ 159
<표 3-47>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_ 160
<표 3-48>	부처별 지원 현황	_ 161
<표 3-49>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_ 163
<표 3-50>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_ 163
<표 3-51>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_ 164
<표 3-52>	어촌관광모델개발 사업내용	_ 164
<표 3-53>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_ 167
<표 3-54>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_ 172
<표 4-1>	우량 품종 개발 및 보급 현황	_ 189
<표 4-2>	우유 수급상황	_ 194

- <표 4-3>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_ 195
- <표 4-4> 최근 3개년 우유급식률 변화 _ 196
- <표 4-5>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종 _ 220
- <표 4-6> 산림분야 신품종보호 출원현황 _ 220
- <표 4-7>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_ 221
- <표 4-8> 종자 공급원 조성실적 _ 223
- <표 4-9>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_ 223
- <표 4-10>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실적 _ 226
- <표 4-11>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_ 227
- <표 4-12> 민유림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 _ 227
- <표 4-13>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09) _ 229
- <표 4-14> 1단계 숲 가꾸기 5개년(2004~2008) 추진실적 _ 230
- <표 4-15> 2009년 숲 가꾸기 추진실적 _ 231
- <표 4-16>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일자리 제공 실적 _ 231
- <표 4-17> 2010년 숲 가꾸기 추진계획 _ 232
- <표 4-18>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2009~2013) 추진계획 _ 233
- <표 4-19>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_ 234
- <표 4-20>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_ 237
- <표 4-21> 재선충병 발생현황 _ 237
- <표 4-22> 사업시행 실적 _ 242
- <표 4-23> 사방댐의 효과성 입증사례 _ 243
- <표 4-24> 사방댐 시설 연도별 추진계획 _ 244
- <표 4-25> 수목원조성·운영 현황 _ 245
- <표 4-26> 산림박물관건립 현황 _ 246
- <표 4-27>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_ 247
- <표 4-28>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추진실적 _ 249
- <표 4-29>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_ 252
- <표 4-30> 백두대간 보호지역 자원실태조사 현황 _ 253
- <표 4-31> 남한지역 6대 정맥 자원실태조사 현황 _ 254
- <표 4-32> 백두대간지역 사유토지 매수실적 _ 256
- <표 4-33>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 _ 257
- <표 4-34> 임도시설 장기계획 _ 261
- <표 4-35>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_ 262
- <표 4-36>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_ 263
- <표 4-37>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_ 264

<표 4-38>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_ 265
<표 4-39>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개발 현황	_ 265
<표 4-40>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_ 267
<표 4-41>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_ 268
<표 4-42>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 현황	_ 269
<표 4-43>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_ 270
<표 4-44>	2009년 목재 수급 실적	_ 272
<표 4-45>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및 계획	_ 275
<표 4-46>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운영 현황(2009년 말)	_ 276
<표 4-47>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_ 277
<표 4-48>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_ 277
<표 4-49>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성요소	_ 288
<표 4-50>	최근 4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_ 290
<표 4-51>	학교숲 조성 실적	_ 295
<표 4-52>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소요	_ 302
<표 4-5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_ 304
<표 4-54>	낙시어업권 현황	_ 307
<표 5-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_ 314
<표 5-2>	도시민의 연도별 귀농현황	_ 318
<표 5-3>	전원마을조성사업 연차별 추진실적	_ 319
<표 5-4>	상수도 보급현황	_ 321
<표 5-5>	하수도 보급률	_ 322
<표 5-6>	연도별 예산 반영현황(국고)	_ 322
<표 5-7>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_ 325
<표 5-8>	연도별 65세 이상 농가인구 고령화율	_ 329
<표 5-9>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_ 332
<표 5-10>	학자금 융자 현황	_ 334
<표 5-11>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_ 335
<표 5-1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_ 338
<표 5-1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실적	_ 338
<표 5-1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_ 339
<표 5-15>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변동 추이	_ 344
<표 5-16>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_ 344

- [그림 3-1] 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_ 107

- [그림 4-1]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_ 181
- [그림 4-2] 제정된 종별 특성조사요령 _ 221
- [그림 4-3] 자생식물 재배시험 포지 조성전경 _ 221
- [그림 4-4] 한국의 치산녹화 _ 224
- [그림 4-5] 바이오순환림 조성 _ 225
- [그림 4-6] 숲 가꾸기 및 산물수집 _ 233
- [그림 4-7] 솔잎혹파리 발생상황(2005년 ~ 2010년) _ 238
- [그림 4-8] 솔껍질깍지벌레 연도별 발생현황 _ 239
- [그림 4-9]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_ 250
- [그림 4-10]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_ 260
- [그림 4-11] 생활권 도시숲 현황(2007년 말) _ 287
- [그림 4-12]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현황(2009년 말 현재) _ 289
- [그림 4-13] 가로수 시도별 현황(2009년 말 현재) _ 291
- [그림 4-14] 수종별 신규조성(2009년 말 현재) _ 291
- [그림 4-15]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_ 292
- [그림 4-16] 특색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해외사례 _ 293
- [그림 4-17]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모식도 _ 293
- [그림 4-18] 학교숲이 미치는 영향 _ 294
- [그림 4-19]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_ 307
- [그림 4-20] 논 생태 양식 개념도 _ 308



제 1 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2009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가. 농수산물 부문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박선우)

1) 서론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대외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와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WTO/DDA 협상 진전 등에 따른 개방경제 추세로 인해 농어업분야 경쟁도 가속화되었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사료·비료 등 농자재 가격의 불안요인 상존과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환율인상,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여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농수산물의 과잉생산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라 소비위축 등 농림수산물 연관 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중 식품제조업 부문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식품구입시 안전성과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농정에 미치는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식품의 시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농정변화와 개혁, 농어업 역량 강화, 농수산물 수요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농어업 선진화 기반 마련, 농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식품안전 유통투명성 제고, 식품산업 발전 기반 마련,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강화, 해외자원개발 및 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2009년도에 추진된 농정 시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농어업 선진화 기반 마련

정부는 농어업계·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발표문을 채택('09.7월)함으로써 소통과 거버넌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농협개혁의 1단계로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4월)을 추진하였고, 2단계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12월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11월)하여 한계농지 소유·전용규제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등이 완화되었다.

3) 현장 수요자 중심의 농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4월)하여 농식품 R&D의 총괄조정 및 평가 기능체제를 구축하였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 R&D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였다.

4) 식품안전 및 유통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 향상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강화 및 쇠고기 이력제 확대 등으로 인해 '08.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GAP·HACCP 등 생산단계 위해관리 시스템 및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성 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5) 식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및 농식품 수출확대

정부는 식품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추진과 우리술 산업대책 및 쌀 가공산업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막걸리가 2009년도 히트상품 1위로 선정되는 등 한식세계화 붐을 조성하는데 노력함과 아울러 농식품 수출도 48억 불로 7%나 증가하는 등 식품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었다.

6)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강화

지역농협에 임대 전담센터 670개소를 설치하여 논농사용 중고농기계 매입 및 28천ha 농작업을 대행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였으

며, 경영이양직불 지급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각종 직불제를 확충하였다.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해 농가 경영회생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28개 품목('08)에서 3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면세유, 화학비료, 사료 등에 대한 농어가 긴급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하였다.

7) 해외농어업자원개발 및 국격제고를 위한 해외협력 강화

정부는 민간주도의 식량 및 사료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6월)하였다. 또한, 한·러 정상회담('08.9월)의 성과로 양국간 불법어업 방지 협정을 체결('09.12월)하고 '10년도 명태쿼터 45천 톤을 확보하였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에 40만ha의 조림지를 확보하였으며, 아시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에 합의(6월)를 완료하여 '10년도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임업부문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강혜영)

2009년도는 고유가와 전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WTO 협상 진전, FTA 체결국의 확대 등 세계 경제 통합은 지속되어 국내적으로도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 분야의 노력이 요구되었던 한 해이다. 산림 분야에서도 임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이고,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집행 등 국가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IT, BT, NT의 융합기술 발전은 국내 자생식물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기회가 되었고,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은 국가 전체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 환경 위기를 맞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쇄수단으로서 산림의 탄소흡수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커졌다.(일본의 경우, 교토의정서 1차 의무기간의 국가 감축의무 6% 중 3.8%를 산림에서 인정) 국내에서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국가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면서, 조림이나 산림경영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통계기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을 통한 심신의 치유, 숲길 조성, 안전한 등산로 시설, 도심 내 녹지공간의 확충 등 새로운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과 산림청 녹색성장 추진계획(2009~2013)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산림자원 육성,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웰빙산업 육성, 건강한 산림만들기, 글로벌 산림협력 등 5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벌기령에 다다른 리기다소나무림을 경제성 높은 용재수, 특약용수로 갱신하고,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장이 빠르고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은 수종 위주의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였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용 종자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종자공급원 및 우량 묘목 공급을 위한 시설 양묘를 확대하여 신품종 출원 등으로 신품종보호제도(UPOV)에 대응해 나가고, 숲 가꾸기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숲 가꾸기 산물 등을 활용한 목재 펠릿 제조를 위해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여주) 이외에 펠릿 제조공장을 추가 조성하고, 산촌 생태마을, 농어촌 뉴타운을 중심으로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였다.

둘째로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 표고, 산지약용식물 등을 활용한 건강식품과 식음료 등 가공품을 개발하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15개소를 확충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였다. GAP, 지리적 표시제 확대 등으로 임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의 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및 친환경 방제 등 지원확대, 표고버섯 재배시설 신규조정, 우량종균 개발추진, 송이버섯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관수시설 확대 등 청정 임산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10ha이상의 대면적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재배·체험·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산약초 타운을 조성하는 등 국내 산지약용식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셋째로 산림휴양시설을 늘리고,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였다. 자연휴양림 등 28개소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운영하고, 2016년까지 전국 1,500km 숲길 조성을

목표로 (2008년까지는 71km 조성) 2009년에는 지리산 숲길 70km와 금강소나무 숲길 20km를 조성하고, 낙동정맥 오백리 숲길 200km를 설계하였다. ‘치유의 숲’ 제도 정착을 위하여 산림의 치유 효능 검증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산음휴양림 내 치유의 숲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시숲·산림공원을 조성하고, 도시숲과 산림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가로수를 확충하고, 학교숲을 신설하였다.

넷째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불방지를 보다 과학화, 전문화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재해위험지역에 사방댐을 설치 확대하여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가 주도의 재해방지사업 이외에도 시민과 지역민이 참여하여 숲을 지켜 나가는 ‘숲사랑 협약’ 및 ‘숲지킴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학교숲 지키기, 1사 1산 지키기, 마을숲·백두대간 숲 지키기, 내고장 숲 지키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섯째로,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확대하였다.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2008~2017)에 따라 2만ha의 해외조림을 실시하고, 해외조림 지역을 아프리카, 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양자간 산림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투자 여건 조사 등의 추진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림녹화기술을 바탕으로 양묘장 조성, 황폐지 복구조림 등 산림 분야 개도국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국, 몽골 등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산림협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의 창설을 위하여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였다.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정책평가담당관실 사무관 이정길)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09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 원 투융자 계획 시행 6년차로서 2009년 투융자규모를 14조 5,572억 원으로 계획하여 89.7%인 13조 549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난 6년간('04~'09) 「119조 투융자 계획」으로 집행한 금액은 63조 5,052억 원으로 계획 66조 8,116억 원 대비 95.1%가 집행되었다.

<표 1-1> 2009년 투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2009년 예산(A)	2009년 집행내역				집행율 (B/A)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 이월	불용액	
합 계	145,572	149,166	130,549	3,092	15,525	89.7%
[분야별]	145,572	149,166	130,549	3,092	15,525	89.7
농업경쟁력 강화	84,580	86,182	75,805	1,729	8,648	89.6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	24,152	24,275	17,962	456	5,857	74.4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17,186	17,599	16,426	372	801	95.6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19,654	21,110	20,356	535	219	103.6
[품목별]	145,572	149,166	130,549	3,092	15,525	89.7
쌀	25,503	25,783	23,818	-	1,965	93.4
특작.원예	12,757	12,589	11,231	-	1,358	88.0
축 산	11,153	11,650	9,473	756	1,421	84.9
임 업	14,790	15,321	15,044	140	137	101.7
공 통	51,847	51,975	41,896	714	9,365	80.8
기 타	29,522	31,848	29,087	1,482	1,279	98.5
[지원대상별]	145,572	149,166	130,549	3,092	15,525	89.7
농업인 등 지원	74,241	75,785	58,422	2,256	15,107	78.7
SOC 사업	34,403	35,763	35,132	551	80	102.1
정부사업	36,928	37,618	36,995	285	338	100.2

분야별로는 전체 집행액 13조 549억 원 중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8조 4,580억 원(58.1%),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에 2조 4,152억 원(16.6%),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에 1조 7,186억 원(11.8%),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1조 9,654억 원(13.5%)이 투자되었다.

품목별로는 쌀에 2조 5,503억 원(17.5%)이 투입되어 가장 많았으며, 지원 대상별로는 농어업인 등에 5조 8,972억 원(40.5%)이 투입되어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4. 5월 수립된 농업·농촌분야 119조 투융자 계획은 2007. 12월 FTA 확대 및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보완·발표되었으며, 금액으로는 당초 119.3조 원에서 123.2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1단계 42조 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1992~1998), 2단계 45조 원 농업농촌발전계획(1999~2003), 15조 원 농특세사업, 119조 원 투융자계획(2004~2013)에 따라 1992~2009년 국고기준 약 132조 원이 투융자 되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투융자 효율성 및 체감도가 낮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실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농업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 진전
 - 경지 3ha 이상 농가 : ('04) 82천호(6.6%) → ('09) 90천호(7.5%)
 - 양돈 1천두 이상 농가 : ('04) 2.7천호(20.3%) → ('09) 3.1천호(39.5%)
 - 한우 50두 이상 농가 : ('04) 5.0천호(2.7%) → ('09) 10.4천호(6.2%)
-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 공영도매시장 : ('04) 32개소 → ('09) 33개소
 - 친환경인증 농산물 : ('04) 461천 톤 → ('09) 2,358천 톤
 - 안전성기준 부적합률 : ('04) 3.8% → ('09) 2.4%
- 중·장기적인 농림예산 투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속 확충
- 농촌지역의 다양한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도농 상생 토대구축 및 지역개발 촉진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 ('04) 76개소 → ('09) 442개소

-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 ('04) 4개소 → ('09) 22개소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전기 정비율	57.9	62.3	66.3	70.4	74.5	77.7
수리답율	78.0	78.5	79.2	79.3	79.5	79.8
농로 포장율	43.1	46.7	50.1	53.0	57.4	60.6

-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 읍·면단위 상·하수도 시설 등 확대로 생활여건 개선
 - ※ 상수도 보급률 : ('04) 55.8% → ('08) 68.6%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09년 27천명),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경감 등 추진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 등 경영안정장치 강화
-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감소를 직불금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업예산에서 직불제 비중 확대
 - 직불금 비중 : ('04) 8,675억 원(13.1%) → ('09) 15,914억 원(15.9%)

나. 임업부문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박도환)

1) 임업부문 투융자 실적

2009년도 임업부문 투융자 지원 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08년도 13,187억 원보다 17.3% 증가한 15,474억 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10억 원, 농특회계 6,094억 원, 균특회계 2,172억 원 및 책특회계 31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소요예산 81억 원이 새로 반영되었다. 부문별로는 숲 가꾸기, 조림 및 묘목생산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4,494억 원을 투자하였고,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전통산지 약용식물 소득원화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등 산림경영·소득확충에 4,085억 원, 산불방지, 헬기운영, 산림병해충방제 및 사방 등 산림자원보호에 3,269억 원, 자연휴양림·생활림 조성, 산림문화·휴양증진 및 식물자원보전관리 등 휴양·녹색공간 조성에 2,108억 원, 행정정보화 등 산림행정지원에 1,518억 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회계별·부문별 투융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2> 회계별·부문별 투융자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 감 (B-A)	%	
계	13,187	15,474	2,287	17.3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5,680	6,810	1,130	19.9
	■ 농 특 회 계	5,252	6,094	842	16.0
	■ 균 특 회 계	1,967	2,172	205	10.4
	■ 혁 특 회 계	-	81	81	순증
	■ 책 특 회 계	288	317	29	10.1
부 문 별	■ 산 립 자 원 육 성	3,839	4,494	655	17.1
	■ 산 립 경 영 · 소 득 확 충	3,769	4,085	316	8.4
	■ 산 립 자 원 보 호	2,514	3,269	755	30.0
	■ 휴 양 · 녹 색 공 간 조 성	1,695	2,108	413	24.4
	■ 산 립 행 정 지 원 등 기 타	1,370	1,518	148	10.8

2) 임업부문 투융자 성과

가) 대내·외 정책여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조림 등 산림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을 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10.1.13. 공포).

또한,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걸맞게 산림자원협력 등 임업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녹색일자리 및 산림휴양·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나) 투융자 성과

임업부문은 그동안 국토녹화와 산림자원화 기반조성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단계로 발전해 왔으며, 기간별 성과는 아래와 같다.

- 1·2차 치산녹화기간('73~'87)에 국토녹화 달성
- 3차 산지자원화 기간('88~'97)에 녹화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기반 조성
- 4차 산림기본계획기간('98~'07)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ha당 임목축적 : ('79) 17.9m³ → ('00) 63.5m³ → ('07) 97.8m³ → ('08) 103.4m³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ha당 임목축적은 109.4m³로 증가하였으며, 국산재 생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9년도 목재자급률은 11.9%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유림 확대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국유림률 24%를 달성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방향에 따라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해 펠릿제조 시설 조성(4개소) 및 펠릿보일러 보급(3천대)을 확대 추진하였다. 안정적인 펠릿 원료 공급을 위해 숲 가꾸기 산물수집을 41천ha까지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바이오순환림 조림을 신규 추진(200ha)하였다.

임업기계·장비를 확대 보급 지원하여 효율적인 산물수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임도시설 223km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을 신규 지원(100억 원) 하는 등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임업부문 녹색일자리를 확충하여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서 6,230명, 숲가꾸기 사업에서 2만 2,498명 등 2만 8,728명을 고용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2008년도 하반기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임업부문 추경예산 편성(1,590억 원)을 통해 11,386명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여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였다.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를 유치('11년)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에 아세안 국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산림자원외교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수산정책과 서기관 윤석홍)

2009년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9,333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673억 원(7.8%)이 증가하였다.

회계별로 보면 바다목장 조성, 수협경영정상화지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어업 인정책보험 사업 등 일반회계에 3,148억 원(33.7%), 수산연구 개발사업,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연근해어선 감척, 어촌관광개발, 국가어항건설, 바다숲 조성 등 농특회계에 4,049억 원(43.4%),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인공어초사업,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건설 등 광특회계에 2,137억 원(22.9%)이 편성되었다.

수산발전기금 운용은 2009년 5,996억 원으로 2008년 5,990억 원과 유사 규모로 운영되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에 1,318억 원(22.0%),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에 1,400억 원(23.3%),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사업으로 1,475억 원(24.6%)이 지출되었다.

3. 2009년 농림수산물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가. 2009년 농수산물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재형)

1) 예산편성 방향

2009년도 농수산물식품예산은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은 농어촌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농업·농촌 종합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유통개선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일원화된 수산분야, 식품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으로 확정 발표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와 한미 FTA 보완대책 소요를 별도로 확보하여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2) 예산편성 규모

2009년도 농수산물식품분야 예산 및 기금은 총 14조 6,363억 원으로 2008년보다 4.9% 증가하였다. 이 중 예산은 9조 7,278억 원이며, 기금은 4조 9,085억 원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3,240억 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3,330억 원, 식품업 4,718억 원 등을 투자하였다.

농수산물식품분야 예산편성 내역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어업 분야의 GDP가 24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개발(R&D) 및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FTA 협상에 대비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농업 체질강화를 위해 2조 4,950억 원을 편성하였다. 영농규모화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농자재 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 예산을 투입하였다. 생산·수입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였고, 가축질병의 예방·근절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식품분

야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둘째, 농어가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조 6,811억 원을 편성하였다. 쌀 관련 직접지불제 뿐 아니라 공익형 직불과 농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직불제 예산을 반영했으며,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정책보험과 재해대책비 등의 투자를 내실화 하였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 복지 증진을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분야에 1조 7,485억 원을 편성하였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넷째,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양곡관리 및 농산물유통 분야에 3조 2,354억 원을 투입하였다. 기존에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유통 지원을 촉진하고,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의 직접구매자금 지원도 반영하였다. 농수산물 거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이버거래소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생산물의 1/3 이상을 수집·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적정 농업생산 기반의 유지 관리를 위해 대단위 농업개발 및 농촌 용수 개발과 농지 기반 정비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예산을 2조 1,640억 원 편성하였다. 새만금 방조제 내부 및 외곽시설 건립 등 간척지 개발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소요를 반영하였다.

여섯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된 수산분야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에 필요한 어장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어가경영 지원에 역점을 두고 1조 3,330억 원을 반영하였다. 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사업과 백화현상으로 황폐해가는 해역의 수산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였다.

일곱째,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식품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4,71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농어

업인이 출자하는 식품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해 식재료의 가공처리 및 공동조리 시설비를 신규로 지원하였다.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키우기 위해 시장개척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계 수준의 한식조리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을 확대하였다.

2009년도 농수산식품 분야 예산 14조 6,363억 원의 부문별 재정배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2008년 (A)	2009년 (B)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39,549	146,636	7,087	5.1
• 예산 일반지출	89,083	97,278	8,195	9.2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I. 농림수산	135,237	141,970	6,733	5.0
• 농업·농촌	116,670	123,240	6,570	5.6
- 농업체질강화	22,628	24,950	2,322	10.3
- 농가소득·경영안정	31,306	26,811	△4,495	△14.4
- 농촌개발·복지증진	13,121	17,485	4,364	33.3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0,124	32,354	2,230	7.4
- 농업생산기반	19,491	21,640	2,149	11.0
• 수산업·어촌	14,139	13,330	△809	△5.7
• 식품업	3,757	4,718	961	25.6
• 기타사업비	671	682	11	1.6
II. 기본적 경비	4,312	4,393	81	1.9

3) 예산 및 기금 결산 개요

2009년 세출예산 규모는 15조 8,938억 원이며, 집행과정에서 이월, 이체 등으로 예산현액은 16조 4,50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15조 1,91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3,69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887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이월액은 이차보전 사업 연말분 정산자금의 차년도 이월, MMA 수입쌀 반입 연기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저금리에 따른 이차보전액 감소 등 미집행액, 사업계획

축소,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다.

2009년 농림수산물분야 9개 기금의 운용실적은 7조 6,182억 원으로 계획액 6조 6,577억 원보다 9,605억 원 증가하였다. 일반지출 계획 4조 9,514억 원 중 4조 4,551억 원은 지출하고 4,963억 원을 미집행하였다. 미집행액 중 75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4,205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나. 2009년 임업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박도환)

1) 편성방향

2009년도 산림예산은 첫째 산림의 서비스 기능 증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집중 지원과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 및 녹색일자리 지원 확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재정사업 성과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재원 배분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림산업 경쟁력기반 구축, 효과적인 산림재해방지로 피해 최소화, 산림서비스기능 제고와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증진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2) 예산규모

2009년 산림예산은 총계 규모로 1조 9,957억 원으로 2008년 1조 6,435억 원 대비 21.4%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 4,483억 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규모는 1조 5,474억 원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0.6%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10억 원, 농특회계 6,094억 원, 균특회계 2,172억 원 및 책특회계 31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항공관리본부의 혁신도시 이전 소요예산 81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표 1-4> 회계별 투융자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2008년 예산 (A)	2009년 예산 (B)	증 감 (B-A)	%
계	13,187	15,474	2,287	17.3
○ 일반회계	5,680	6,810	1,130	19.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252	6,094	842	16.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67	2,172	205	10.4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81	81	순증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88	317	29	10.1

3) 부문별 투자실적

부문별로는 산림자원육성에 4,494억 원, 산림경영·소득 확충에 4,085억 원, 산림자원보호에 3,269억 원, 휴양·녹색공간조성에 2,108억 원 및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사업에 1,5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대비 증액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1-5> 부문별 투융자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2008년 예산 (A)	2009년 예산 (B)	증 감 (B-A)	%
계	13,187	15,474	2,287	17.3
○ 산림자원육성	3,839	4,494	655	17.1
○ 산림경영·소득 확충	3,769	4,085	316	8.4
○ 산림자원보호	2,514	3,269	755	30.0
○ 휴양·녹색공간 조성	1,695	2,108	413	24.4
○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1,370	1,518	148	10.8

첫째,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고,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관련 사업 지원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2단계 숲 가꾸기 계획(2009~2013, 125만ha)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3,136억 원)하여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감리 예산을 증액하고, 산물수집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촉진에 기여하였다. 한편,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에 따라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723억 원)하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산림서비스도우미(1,450명), 산림재해감시원(4,780명) 등 녹색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산림분야 신제품 보호제도 조기 정착에 필요한 실 소요를 반영하였다.

둘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사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산업 경쟁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임업인 소득기반조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확대(10→15개소), 전통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 신규 지원(100억 원) 등 관련 투자를 확대(1,113억 원, 23.3% 증액)하였다. 또한, 산림경영관리가 미흡한 사유림 매수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1,108억 원)으로 국유경영임지 및 산림서비스림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임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 보급, 기능인 양성·임업기술지도 및 산림조합구조개선을 지속 지원(301억 원)하였으며,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임도시설 신설(223km), 구조개량(479km) 등 관련 예산을 반영(678억 원)하였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방지에 온 힘을 다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산불방지사업의 지자체 부담경감 및 국가책무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였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확대 및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등 진화장비 보강 등 사전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362억 원, 26.1% 증액)하였다. 또한, 산림재해 취약지 중심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사방댐(363개소→720개소) 등 사방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1,739억 원, 72.1% 증액)하였으며, 효과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확대 개편(74개단→250개단)하는 한편 병해충별 적정 소요를 반영하였다.


넷째,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휴양·녹색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산림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국가·지자체 자연휴양림의 각종 편의시설을 보완·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형 산림휴양·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1,460억 원)하였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산 수요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 등산로 정비 및 체험형 숲길 조성 등 관련 예산을 확대(106억 원, 53.6% 증액)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과 산림생태계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실소요(542억 원)를 반영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09~'13년) 및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복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다.

다섯째, 범정부적 황사방지대책에 따라 몽골 그린벨트 조림 및 중국 사막화 방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산림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 및 해외조림 투자에 대응하여 해외인턴(20명)과 해외조림 투자기업을 신규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를 유치('11년)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에 아세안 국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432억 원)을 지원하고 산림행정정보화로 업무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산림항공관리본부의 혁신도시 이전(김포→원주)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신규 지원하였다.

4) 향후계획

2010년부터는 미래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 식품 개발사업'을 분리하였고, 농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장기 R&D 프로그램인 농업연구센터(ARC)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 2 장

구조개선을 위한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가. 농업협동조합 개혁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이시혜, 사무관 최봉순)

1) 농협 개혁 추진

가) 시행배경

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이에 이어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실질적인 농협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협개혁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2009. 6. 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5백억 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 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을 검토·반영하여 정부안(입법예고안)을 마련(2009. 10.27 발표)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으며 2009.12.16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농협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지 유통구조 개선 등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및 정책사업,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고, 농협중앙회 경제부문의 기존 13개 자회사와 함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 자회사화 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 농협보험(손해, 생명)을 설립하고, 이들 신설 법인과 기존 신용부문 자회사를 지배

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NH)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향후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애 이어 지체 없이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1·2차 모두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홍보 등으로 쟁점의 많은 부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농협과의 견해차를 크게 줄였다. 특히 1단계 개혁에서 국회 여·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농협법 개정을 완료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2009.12.16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애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지원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실사 등의 실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농협은행, 금융지주회사 및 경제지주회사 설립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시 실무 준비에 1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선조합 구조개선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박중신)

가) 시행배경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 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적기 시정조치 대상조합이 편법으로 우선출자금을 조성하여 적기 시정조치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협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는 적기 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순자본비율 5%로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전년 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7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 등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8년도의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도 23개 조합에 총 245억 원(출연)의 자금을 지원하였는 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5개의 조합에 출연 21억 원을 지원하였고, 15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20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3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17억 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9년도에도 1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으며 5개 조합은 정리 중에 있다. 또한 13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2009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적자조합의 적자규모는 46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6억 원 증가하였으며, 적자조합 수는 전년에 비해 16개 조합이 늘어난 21개 조합이다. 그러나 전체 조합의 당기 순이익은 12,28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668억 원이 증가하였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 실적은 38조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68조 2,4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성장하였고, 상호금융대출도 123조 4,0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성장하였다.

다) 향후계획

부실예방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 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조합 개혁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기환)

1) 시행배경

산림조합은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리·동 단위의 산림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1980년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진 협동조합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임명제였던 산림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과 조합장이 선출하

는 직선제로 전환하였으며, 1993년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가 2000년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라 산림조합체제로 환원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직되며,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향상을 목표로 2009년 현재 전국에 142개 산림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산사태 등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같은 국가 산림정책을 수행하여 험벗었던 국토를 녹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78년도부터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880명)을 통해 산림경영 기술지도, 임업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기계 보급, 임업정책자금 대출취급 등 국가사무를 충실히 대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산림휴양 등 국민들의 산림수요 증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체도의 도입, 산림사업법인의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새로운 요구 등으로 인해 산림조합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 마련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마련과 산주와 임업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13개 조합에서 상호금융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9년 현재 133개 조합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여건 미흡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신용사업을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신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고금리 조달구조의 지속, 부실채권의 증가, 유가증권 투자실패 등 일부 조합에서 부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서 부실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중앙회는 2005년도에 최초로 중앙회소속 144개 회원조합 전체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실사결과 2004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조 3,165억 원, 부채는 2조 1,200억 원, 자본은 1,965억 원으로 나타났다으며, 고흥 등 28개 조합에서 274억 원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진단위원회는 경영진단결과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수협이 사례와 같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산림청은 건의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정부안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2007. 8. 3 법률을 제정하고 6개월 후인 2008. 2. 4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법률시행일 이전에 각각 제정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 신규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예산 5,562백만 원을 확보하여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부실조합 등을 선정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25개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이 2008년 말 기준으로 재무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는 16개 조합을 부실조합 등으로 심의·의결하였다. 16개 조합 중에서 산림청은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15% 미만인 3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였고, 중앙회는 순자본비율 기준 -15% 이상 2%미만인 11개 조합과 자산건전성 등이 취약한 2개 조합을 합쳐 모두 16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였다.

부실조합은 2007년 말 기준에 비해 3개 조합이 감소하였으며, 고흥조합은 2009년에 신용사업의 양도를 완료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 1일자로 인근 순천조합에 양도 완료하고 부실액 4,915백만 원을 지원하여 동반부실을 방지하였다. 또한 울릉조합은 규모가 작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회생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김제조합은 자체적인 경영개선조치를 추진하되 2010년도에 회생가능성을 검토하여 합병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판단할 계획으로 구조조정을 유예하였으며 추가 부실방지를 위한 적기 시정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하였다.

부실우려 13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별 부실원인을 분석한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경비절감, 자기자본 증대, 이익배당 제한, 신용사업 활성화, 불용자산 처분과 같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조치를 2009. 4월 해당조합에 각각 명령하였다. 이 중 순자본비율이 낮은 10개 조합은 2012년까지 정상조합 기준인 순자본비율 2%를 목표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개 조합과 중앙회는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으로 1,20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국고 1,053백만 원, 중앙회자금 150백만 원). 앞으로 경영개선대상 조합은 분기별로 경영개선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추진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임업과 산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간 국고 186억 원을 지원하여 2012년까지 구조개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성래)

1) 시행배경

수협은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등 자생력 부족으로 어업인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 적용('14년부터) 등 금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과 부실수협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수협의 경영구조 개편과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9.4)된 후 '10. 4월 공포(시행 '10.10.13)되었다.

개정 수협법의 내용은 중앙회의 경우 회장 비상임화와 연임을 제한하면서 교류협력사업 등 상징적 대외적 역할에 전념토록 하되 실질적인 경영권을 배제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임원선출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이사의 경영평가 및 해임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중앙회 공

적자금을 출자에서 출연의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중앙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일선수협이 중앙회에 배당권만 가지는 우선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선조합의 경우 경영 정상수협은 조합장 비상임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영개선이행약정(MOU) 목표를 2회 연속 미 이행한 조합장은 비상임화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정상조합은 현행 선출방법(조합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상임이사를 선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비조합원에게만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경영능력이 있는 조합원도 가능하게 상임이사 자격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수협 등 금융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채무 연체자와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는 임원자격을 제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였다.

나) 중앙회 경영혁신 추진

중앙회 인력·조직 감축 및 부실사업장 폐쇄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상경비 20% 절감과 임직원 급여반납(3~20%), 7개 조직 축소(특관사업부, 경영지원부, 홍보실, 조합리스크관리실, 외환사업실, 카드사업실, 수매사업단) 및 8개 부실사업장(바다마트 2곳, 신용영업점 6곳)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신용사업부문에서 IB 영역 확대 및 자산운용업 진출을 통한 미래 신 성장동력 확보, 저원가성 예금 증대 및 고비용 시장성 예금 감축을 통한 예수금 조달 구조 개선, 적극적 프로모션을 통한 비이자 사업이익 증대, 고객관리시스템(CRM)의 업무활용도 증가 및 고객 유치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관리 역량 제고,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를 5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당기순이익 330억 원, 예수금 10조 3,731억 원, 대출금 13조 1,621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3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순 자본비율 산출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40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5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제재 및 재

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목표 등 적기 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라) 부실수협 구조조정 추진

2009년 6월 10일 개최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5개 부실조합 중 흑산도수협은 순자본비율과 이월결손금의 지속적 악화로 조합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미 이행하였으므로 2008년도 적기 시정조치(조건부합병)에 의거해 관리인선임 및 합병을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4개 조합중 장흥군수협은 2008년도 말 경영평가 결과 2002년 9월 대비 순자본비율과 이월결손금이 악화되어 조건부합병 및 구조조정 추진시까지 부실우려조합에 준하는 최소 이행목표 부여 등 자구노력 목표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동해시수협은 이월결손금과 순자본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영개선 정도가 미미하고,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상호금융사업 미취급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채권부실화 위험이 상존하여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함에 따라 조건부합병 및 자구노력 목표를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하고 회계법인의 부실조합 지속가능성 평가용역결과(2009년 7월)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등 경영정상화 추진 또는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결정 및 추가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일선수협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 등 34개 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다.

2009년도 34개 조합에 총 483억 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바) 부실책임조사 실시

일선수협의 부실 책임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조사대상 : 52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조합 임직원 245명(부실책임액 589억 원)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

3) 향후계획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중앙회는 인적·조직 축소 및 부실사업장 정리 등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수협은 순자본 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조합 등에 대해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별 취약부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잠식 해소 및 확충을 위한 자본적정성 목표, 무수익 채권 감축을 위한 자산건전성 목표, 자본 고정화 방지를 위한 유동성 목표, 장기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수익성 목표를 신설하여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 부여하였으며, 경영개선목표 이행률에 따라 추후 견책, 감봉, 상임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말로 대다수 조합의 MOU가 해지됨에 따라 MOU 해지 조합 중 MOU 약정상의 순자본비율 목표 미달 조합의 경우, 순자본 비율 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계획 목표를 별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 농림수산물 유통 개혁

가. 농산물 유통 개혁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유통정책과 사무관 안형덕)

가) 시행배경

생산계획 단계부터 사전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29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측정보(과종의향·작황·가격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표본농가는 14,241호, 모니터 요원 1,842명이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그 동안 계약재배를 통한 채소수급 안정사업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2001년부터는 사업대상 품목을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업주체를 일선 농협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현재 계약재배 물량은 채소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24% 수준으로 사업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 계약출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단감(2002년)과 감귤(2003년)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2005년에는 사과, 배, 감귤 농가의 사업참여 기준 물량을 200톤에서 300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년도에는 사과, 배, 감귤, 단감을 대상으로 총 208천 톤의 계약출하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같은 규모의 자금을 1:1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시행 당시의 대상 품목(파프리카, 참다래)을 26개로 확대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조금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적립된 자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 향후계획

향후 생산자단체 스스로 해당 품목을 확대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시장개척 등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신재)

가) 시행배경

최근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형 SSM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소포장 및 전처리 편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 패턴도 안전성, 편의성 및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지의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의 산지 유통에서 소비지 유통에 이르는 각 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크게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비지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주로 생산자의 거래 교섭력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별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다품목 소량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물량과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를 조직화,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군 단위 이상의 대형 산지조직 3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생산량의 36% 수준이 산지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2009년 말 기준)

도매단계에서는 농산물의 수집, 분산 등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의 노후화 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11개 도매시장에 대하여 시

설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서울 가락시장, 광주 각화시장, 대전 오정시장 등 3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다양한 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정례화된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온라인 방식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산지조직과 기업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 향후계획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 투명성 확보 등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지의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가야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제고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신재)

가) 시행배경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지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

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방문객 수 29만 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밖에도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이외에도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부터는 소비자 유통·식품·외식 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 상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이버거래소는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정산소를 설치하여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현재 시점에서 직거래가 농산물 유통의 주류를 형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유통망으로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거래장터는 Local food 개념에서 생산지 인근에 장터를 확대해 나가고,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대량 수요처 간의 B2B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을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신재)

가) 시행배경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예약 수의거래 방식에 따라 산지

와 직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업인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종합유통센터는 물류, 도매 및 소매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유통시설로, 유통단계를 단축할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이후 전국 16개소에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까지 양산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져 2009년 3조 1,1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 도·소매 종합유통 시설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유통센터에 전속 출하하는 산지 조직을 육성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슈퍼마켓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매취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표 2-1> 종합유통센터 건설 현황(2009년 말)

설치지역	개장일	설치지역	개장일	설치지역	개장일	설치지역	개장일
양재	1998. 1.	천안	1999. 9.	고양	2001. 6.	수원	2003.10.
창동	1998. 5.	전주	1999.12.	대전	2002. 1.	김해	2005.11.
청주	1998. 9.	성남	2000. 8.	대구	2003. 6.	금산	2006.8.
부산	1999. 3.	군위	2001. 1.	목포	2003. 8.	울산	2009.5.

다) 향후계획

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 물류 및 유통의 핵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운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여 선진 유통모델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종합유통센터 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도매유통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전국단

위 판매회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하여 산지 조직과의 직접거래를 확대하고, 수집된 농산물이 소비자 및 대도시 유통망에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물류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소비자 유통망으로 공급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유창상)

가) 시행배경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로 개장되었다.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유통주체 간 거래규제완화, 도매시장기능 복합화, 도매시장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법인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매시장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반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중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07년부터 도입된 전자거래와 함께 농수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정·신속한 경매를 위해 도매시장에 전자경매를 도입하여 2001년 33%수준에서 2008년 86%까지 제고되어 도매시장의 경매방식이 수지경매에서 전자경매방식으로 탈바꿈 되었으며, 전자경매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락가격의 실시간 제공 역

시 경매절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어 출하자가 안심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현재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한편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09년부터 서울 가락, 광주 각화, 대전 오정 도매시장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정부는 중앙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도매시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6) 물류표준화와 하역 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박윤식)

가) 시행배경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농산물유통단계의 포장, 운송, 보관, 하역을 규격화 및 기계화할 수 있도록 일관수송체계(ULS:Unit Load System)에 적합한 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물류효율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일관수송 체계 구축,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물류기기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기반조성이 필요하여 지난 '97년도에 물류표준화사업(물류기기구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00년도부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 이용 촉진을 통한 물류이용 규모화, 복합운송 실현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물류표준화사업(물류기기 공동 이용)을 확대 지원하였다.

민간 보조형태의 사업으로 국고 보조50%, 자부담50%의 부담 조건으로 물류기기 구입은 '0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였으나, 물류기기 공동 이용과 함께 물류효율화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09년부터 전담 기관을 농협중앙회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자부담율을 감안하여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선택폭을 넓히도록 사업자 선정, 자금지원, 정산 등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전산화를 도입하여 투명·공정성을 높여가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유통비용 증가로 농산물 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물류장비의 표준화 및 공동 이용 기반을 지속 확충하였다.

특히, 07년부터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무, 배추 유통정책을 통한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한 포장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락시장, 구리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에서 플라스틱상자 회수·관리 시범사업('07~'08년, 7~9월)을 실시한 바 있다.

물류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선채소류 특히 무·배추의 기계화, 분산체계가 과제로 대두되어 여름철 고랭지 배추를 시범품목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보았으나, 차량 신선도 유지, 기계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재, 수송, 분산 등 문제점으로 배추포장유통 활성화엔 큰 진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산지, 도매시장 등 유통주체의 역할을 정립하여 플라스틱상자 회수·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 물류표준화사업지원 실적

지난 1997년 농산물의 물류기기 구입 및 공동 이용사업을 지원하여 2009년까지 1,901억 원을 투자하였다.

물류기기 구입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작목반,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까지 1,205억 원을 지원하였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농산물을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에 출하하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작목반, 공영도매시장,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등에 2009년까지 696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2-2> 연차별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04년 이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물류표준화사업	920	143	177	210	225	226	1901
물류기기구입지원	716	67	88	115	115	104	1205
물류기기공동이용	204	76	89	95	110	122	696

(2)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성과

물류기기의 구입비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사업 성격에 정부가 농산물 물류 개선 차원에서 지속 지원해 줌으로써 물류기기 이용량이 '02년도 18백만 매에서 '09년은 49백만 매로 2.7배 증가하였다.

※ 연도별 이용량 : (02)18백만 매 → (06)39 → (08)44 → (09)49

산지에서 포장규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하역 기계화율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송비, 하역비, 청소비, 감모 등 소모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2-3> 하역기계화 및 소모성물류비 조사결과

지 표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하역기계화율(%)	20.2	23.1	25.2	28.0	30.0
소모성물류비비중(%)	54.5	53.5	53.0	52.5	52.0

※ 소모성물류비 : 운송, 하역, 감모, 청소(포장, 가공, 보관, 일반관리비 제외)

다) 향후계획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물류기기 구입자 및 장비 임대자에게 구입비 또는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사업의 결과가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류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특히 한·미, 한·중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농산물 물류시스템을 개선할 사업으로 WTO에서도 허용대상보조(하부구조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산지에서 생산자 조직이 결성되고 유통시설 현대화, 규모화가 됨에 따라 물류표

준화사업에 대한 기계화 증가, 소모성 경비 감소 등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작업공간 부족, 관행거래 방식 등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부피가 크고 부패가 빠른 배추 등의 신선채소류의 물류기계화 대책도 중지를 모아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에 따라 압상방지, 신선도 유지 등 품질 향상과 환경친화 기능이 한층 증대되어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계속하여 관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 정부는 민간 기능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왔다.

따라서, 민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는 지원체계를 유지하겠지만, 보조금개편, 타 사업과 형평성, 물류여건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조건, 보조금액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표 2-4> 국고보조율 변동

	'03년	'04년	'10년	비고
물류기기구입지원	70	50	40	
물류기기공동이용	80	60	50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안전위생과 사무관 도현미)

가) 시행배경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매년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160여 품목의 생산·유통·판매되는 농산물,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사용 금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조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농산물 232품목을 대상으로 64천 건 조사, 계획(57천 건) 대비 113.0% 초과 달성하였다. 유해물질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59,104건, 중금속 3,316건, 병원성 미생물(기생충란 포함) 731건, 곰팡이 독소 331건, 농지·용수·자재 452건을 조사하였다.

2009년 안전성 조사 결과, 1,503건의 부적합 농산물(2.4%)이 조사 되었으며,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발 4건, 폐기 303건, 출하연기 857건, 기타(용도전환 등) 339건으로 조치하였다.

2009년 안전성 조사 물량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률이 '08년도 2.9%에서 '09년 2.4%로 향상되었다. 또한 분석실의 국제공인인증(KOLAS) 인증 취득을 9개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 지원)로 확대하고, 분석실(24개소)의 정도관리를 위 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합률 조사 결과, '09년 적합률은 99.3%로 전년도 99.2%대비 0.1%포인트 증가되었다.

<표 2-5> 2009년 안전성조사 추진 실적

(단위: 품목, 건, %)

구분	전체	곡류	채소류	과실류	기타
조사건수	63,934	9,562	36,575	8,769	9,001
부적합건수	1,503	82	1,257	2,458	106
부적합율	2.4	0.9	3.4	0.7	1.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 2-6> 2009년 안전성조사 결과

(단위: 품목, 건, %)

구분	조사품목 수	조사건수(A)	부적합건수(B)	부적합률(B/A)
2009년 계획	160	56,600		
2009년 실적	232	63,934	1,503	2.4
진도	-	113.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다) 향후계획

2010년에는 조사물량과 조사대상 분야를 64,000건('09년 대비 13.0% 증), 7개 유해물질 분야('09년 4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춘 민간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분석 등을 위탁, 증가하는 안전성조사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토대 구축을 위해 국가잔류 조사(54품목, 14,000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중금속(Pb, Cd) 안전관리 대상 농산물을 10개 품목('09. 12월말 기준)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임산물 유통 개선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이우식)

1) 시행배경

임산물은 대부분 가을에 수확기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이 열악하여 일시에 수출물량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장가격의 불안정은 지속되었으며, 다단계적 유통구조로 생산자는 저가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구매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지속되었다. 또한 친환경 임산물의 수요에 대한 식품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와 FTA 등 국제협약 등으로 국내 임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의 임산물유통체계 기반을 확충하고 원료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유통·가공분야 지원의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통해 임산물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임산물 정보제공으로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물 먹을거리 제공 등을 통해 국내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WTO 체제 출범, FTA 협상진행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재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95개소의 산림조합 유통조직 직매장을 통해 단기임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 집하장 17개소를 조성하여 목재수집·운반·가공기능 확대로 산지별 목재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매 유도를 위하여 현재까지 전국 주요 생산지역에 조경수유통센터 4개소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위한 산채 등 단기임산물유통센터 42개소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2-7>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 분	계		2008년까지		2009년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단기임산물유통센터	46	25,328	21	12,828	15	7,500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m³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어린나무가 59%로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자급률은 낮은 실정에 있어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도에는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조직의 유통 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단지화·전문화된 임산물의 유통구조 조성을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산지와 시장의 출하 조절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자금 등 표준출하자금(2009년 10억 원) 및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매자금(2009년 322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60개소(2009년 32억 원)를 지원하고,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에 대한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 보완시설 8개소(2009년. 5억 원) 및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가공기계장비 330대(2009. 3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임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표준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표준출하규격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흐름을 반영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2005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2006년 3월에 양양 송이를 제1호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장흥 표고, 산청 곶감, 정안 밤 등 30개 품목을 등록 완료하고 태백 곰취, 덕유산 고로쇠수액, 담양 죽순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명품 임산물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하여 현재 4품목(밤, 표고버섯, 뽕은감, 대추)에 대하여 산지 생산현황,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산계획 단

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2009년 4억 원)하고 있다.

<표 2-8>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등록 완료			
2006년(8품목)	2007년(5품목)	2008년(5품목)	2009년(8품목)
제1호 양양 송이	제9호 경산 대추	제14호 영덕 송이	제19호 문경 오미자
제2호 장흥 표고버섯	제10호 봉화 송이	제15호 구례 산수유	제20호 무주 머루
제3호 산청 곶감	제11호 청양 구기자	제16호 광양백운산	제21호 울진 송이
제4호 정안 밤	제12호 상주 곶감	고로쇠수액	제22호 횡성 더덕
제5호 울릉도 삼나물	제13호 창선 고사리	제17호 영암 대봉감	제23호 악양 대봉감
제6호 울릉도 미역취		제18호 천안 호두	제24호 영동 곶감
제7호 울릉도 참고비			제25호 가평 잣
제8호 울릉도 부지깥이			제26호 홍천 잣

※ 등록 추진 중 : 진도 구기자, 태백 곶취, 덕유산 고로쇠수액 등 7품목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임업인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여 2008년도까지 692개(11억 원) 임가에 홈페이지를 완료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여주유통센터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fo.or.kr)을 통한 임산물 가격·유통·생산기술 정보의 전파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 개량사업 등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식용 임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청정하고 안전한 임산물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GAP인증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을 지원(2009년 2억 원)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임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임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원료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다양한 가공 및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유통·가공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리적표시등록 등을 통한 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임산물정보제공과 우수한 국내 임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수산물 유통 개선

(수산정책과 사무관 이상영)

1) 시행배경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주도하여 온 수산물 유통체계가 강제 상장제에서 임의 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을 기점으로 사매매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불안정한 대금결제와 영세어업인의 가격 교섭력 부족 및 생산통계 부정확 등의 문제점 노정으로 공공유통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과거의 생산자 위주 유통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업인의 판로기반을 늘려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유통의 주요 기능인 위판장 건립은 196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3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위한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을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도매시장의 패류 및 선어의 실질 경매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에 직수탁하는 출하자에게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오다가 실질 경매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2005년도 말라카이트 사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관심도가 높아졌

으나, 산지 위판장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산에서 유통으로 전환되는 산지 위판장에서 위생적인 유통처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새로운 유통시설인 먹을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유통시설인 Sea Food Town 조성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수산물 유통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농특예산 세부사업인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으로 27개소 1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수산물위판장 건립(10개소, 41억 원), 수산물직매장시설(7개소, 12억 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1개소, 20억 원),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3개소, 31억 원) 및 전복일류화 상품기지개발 등 기타 유통시설(6개소 37억 원) 건립 사업비로 지원되어 출하중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특히, 농특예산으로 수산시장(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1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더 위생적인 유통시설로 탈바꿈하는 성과를 보였다.

3) 향후계획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취가 제고 및 소비자에게 보다 더 위생적인 유통시설에서의 수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유통시설 개선과 부족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추진

가. 농수산식품 분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이호재)

1) 시행배경

2008년 말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행정규제는 416개이다. 2009년도 규제의 정비방향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전 정부적으로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의 추진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서민보호를 위한 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농어업 성장동력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육성발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농어업환경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한 규제신설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08.12월)에 따른 규제업무의 효율화 및 합리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효과적인 규제정비를 위해서는 과제 발굴을 종전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에만 국한하지 않고 농어업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규제개혁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규제정비 대상과제로 61건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이를 정비하기로 하고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되면 규제개혁 과제로 추가 선정하는 등 규제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였다.

정비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은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 협동조합 자율성 제고, 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농자재산업 자율성, 농식품 인증제도 개선, 어업제도 합리화 및 자율성 제고 등이다.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범위를 설정하여 농지에 대한 개발효율성을 증대시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각 위임을 확대하도록 한 기준을 20만㎡로 정하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행정절차 단계 축소에 따른 사업시행자 편의 제고와 사업 추진기간 단축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생활환경 마을정비사업의 시행자를 민간에 개방한 것과 관련하여 마을정비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운영관리, 주택소유자의 구성요건 등 민간 참여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농협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조합선택권을 읍·면단위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향상 및 조합 규모화를 촉진하고, 일선조합의 사업규모화를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조합 외에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조합에만 한정하던 따른 자금부족, 낮은 경영수준 등 법인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일선조합의 사업을 규모화 하였다.

농축산자재 및 가공·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농약에 대한 품목등록 사항 중 포장단위 등 경미한 사항은 품목변경신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시설 설치기준을 농가에 설치 사용하는 농기계의 경우에는 옥내 작업장 확보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여 옥내작업장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료제조업 등록시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승인토록 한 권한을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농축산 자재산업 및 농축산물 가공·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하여 업종별 허가가 필요한 정치성 구획어업 등 연근해 어업의 유사업종을 현행 13종에서 5종으로 통폐합하여 어

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일정기간(30일) 동안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어업인들을 구제하도록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어선의 출·입항 시마다 신고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서면신고 제외 어선의 범위를 현행 2톤에서 5톤까지 확대하고, 신고도 전화 또는 통신망 등의 신고로 대체하는 등 연근해어선(63천여 척)중 15천여 척이 추가로 신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2010년은 그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성과가 가시화되는 해인 만큼 규제개혁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이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별로 일선현장 집행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개혁 교육을 통한 일선공무원의 행태인식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농어업인의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 과제의 효율적인 발굴과 정비를 위해서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물론 농어업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분야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서기관 이정용)

1) 시행배경

2009년도 현재 산림청 소관 규제는 13개 법률에 근거한 75개의 규제가 있으며, 이 중 산림자원의 육성 및 토지이용 규제가 30건(40%), 산불 등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24건(32%), 산림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규제가 21건(28%)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적·환경적 가치 즉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산림은 한 번 파괴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불가피하게 행정규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국가로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산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규제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도 규제개혁 방향은 산지이용 활성화, 산림자원의 활용 증대, 국민생활 편의 도모,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 지방산림청별로 “규제개혁단” 운영 및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최일선 기관장을 “현장특임관”으로 활용하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규제코너”의 신설 등 다양한 발굴원을 활용하여 산림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불편 해소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2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지이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인 보안림 내에서 대학교를 설립토록 하여 지역교육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제도 폐지 및 타 법령에서 행위 제한이 있는 공익용 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하여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과 산지 이용을 도모하였다.

산림자원의 활용 증대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의 읍·면·동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를 동·리로 축소하여 이 지역에서의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조경수, 원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

국민생활의 편의 도모 분야에서는 보전 산지인 공익용 산지에서 660㎡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자기 소유의 기존임도를 진입도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최소 규모를 폐지하여 농산촌 주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다


기업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경영악화,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산지 전용 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산지 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

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사찰 설치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면제하였으며, 도시지역의 산지복구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산지전용 후 산지복구 시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의무 면제범위를 80㎡에서 660㎡로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국민이 체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산림규제개혁 달성을 목표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수요자에게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폐지를 추구함에 있어 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산림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 3 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가. 영농규모화 촉진

(농지과 사무관 정수경)

1) 시행배경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1990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영농규모화사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쌀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영농규모화사업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로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소유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저리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인간의 교환·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이다.

2009년도에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1,966ha 1,696억 원, 농지임대차 3,238ha 798억 원, 농지교환·분합 16ha 18억 원 등 총 5,220ha 2,512억 원을 6,229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총 6조 1,295억 원을 지원하여 154,587ha의 농지를 208,264농가에 규모화·집단화시켜 호당 평균 약 0.7ha의 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013년까지 6ha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95년부터 쌀전업농을 선정하여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27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전업농 수는 1995년 13천 호에서 2009년 69천 호로 늘어나고, 호당 경영규모는 1995년 2.5ha

에서 2009년 5ha로 2배가 확대되었다.

※ 쌀전업농 호당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09) 5.0

이는 2009년 쌀 재배농가 평균 경영규모 1.12ha의 4.5배의 규모로 2009년 말 쌀전업농의 벼 재배면적(347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924천ha)의 38%로서 쌀전업농 중심으로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계획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한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6ha규모 쌀전업농 7만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2.5~4ha규모 쌀전업농을 중점 지원하고,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비예산) 등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영농규모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 김문갑)

1) 시행배경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97년부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만 원(연간 300만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특히, '09년도에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09년 한시적으로 74세까지 신청 가능)하고,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며,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상향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97~'09년까지 경영이양 농업인 87.6천 명에게 직불금 1,837억 원(1인당 2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61.6천ha를 전업농 59천 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3) 향후계획

그러나, 고령농업인의 강한 농지소유욕, 기계화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편리성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부진에 따른 개선을 통하여 농지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고경만)

1) 시행배경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산지유통주체도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유통조직이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 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상위 마케

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00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자금 융자 지원을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등 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09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26개소) 및 전문조직(288개소) 등을 선정하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297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 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2005년도에 최초로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공모를 통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6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3년간 융자 1%의 유통정책자금, 1년간 무이자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 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 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농협군과 법인군으로 분리하고 상대평가하여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 하고,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산지 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 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 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

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 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05년부터는 매년 산지 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 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계 개선안을 마련('10.7월)하여, 장기 정체 조직의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유인을 제고하고, 합병·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향후계획

산지 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7월)이 마련됨에 따라 장기 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 조직 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중단된 조직이 자력으로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 조직에 원물 공급)하여 상위등급 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상위마케팅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유통 조직의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점유비가 '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조정래)

1) 시행배경

농업종합자금은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 등이 스스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스스로 산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 추진 경과

1999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에는 전업농육성사업 및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원하는 시설자금 13개 사업자금을 통합하였고, 2002년에는 농기업경영자금 및 전업축산경영자금 등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운전자금인 2개 사업자금을 통합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3천만 원 이상),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 지원, 관광농원개발, 농촌민박마을조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2004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2천만 원 이상),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객토자금, 전통식품개발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2005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1천만 원 이상),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경우 인력육성을 위한 집중관리 필요성에 따라 '07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다.

나) 지원현황

지원조건은 연리 3%,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농기계구입자금은 1년 거치 4~7년 상환이며,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에만 20백만 원을 하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2002년에 7,230억 원에서 2005년도에는 7,511억 원, 2007년도에는 10,2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1,0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1>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230	5,400	5,789	7,511	9,567	10,202	12,010	11,050

다) 지원성과

농업종합자금제 도입에 따라 농가의 자율·책임경영이 강조되고, 대출기관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 결과 무리한 과잉투자와 자금의 과수요가 불식된 것은 큰 성과이다. 또한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일괄하여 종합 지원하는 점도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2>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구 분	기존지원체계	종합지원 제도
○ 지원방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농협)
○ 자금지원	연1회 일괄 선정·지원	수시선정·지원, 사업평가 후 추가지원
○ 사후관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3) 향후계획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평가항목 삭제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대출절차를 표준화하고 제출서류 등을 더욱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경영체를 선별 지원 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 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 사전감지 및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희중)

가) 시행배경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업생산인구의 고령화로 향후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확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도전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 외에도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잠재농업인력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선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농의 영농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창업농 멘토제(후견인제) 등을 실

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 농업인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2008년까지는 창업농과 신규 후계농으로 이원화되어 지원 대상자 선발 및 단가책정, 사후관리 등이 복잡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35세와 45세로 구분했던 선발조건을 폐지하여 45세로 단일화하고, 5년과 10년으로 제한했던 농업경력 요건도 폐지하여 농업분야 조기 진입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였다. 2009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은 1,435명이 선정되었다. 농업계와 비농업계로 구분해 보면, 농업계 436명(30.4%), 비농업계 932명(64.9%), 기타 67명(4.7%)이었으며, 이중 남성이 1,229명(85.6%), 여성 206명(14.4%) 이었다. 융자금은 944명에게 총 458억 원을 대출 실행하였다.

<표 3-3> 2009년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명)

	계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특수전문대			대졸이상		
				소계	농업	비농업	소계	농업	비농업	소계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진	소계	농업	비농업
계	1,435	10	57	600	88	514	254	65	189	174	164	12	333	109	227
남	1,229	6	44	486	81	408	224	60	164	165	155	12	299	102	199
여	206	4	13	114	7	106	30	5	25	9	9	0	34	7	28

(1)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창업 후계농업인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이들에게는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장기 저리로 1인당 2천만 원~2억 원의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2009년에는 지원 대상으로 1,435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농업인턴제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인턴제는 만 18세에서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 자격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면서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인턴 1인당 월 60만 원 한도로 농업인턴에 지급하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08년에는 191명, 2009년에는 275명을 선정·지원하였다.

(3) 창업농 멘토(후견인)제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선도농가, 전문가와 협약을 맺어 기술과 경영 등에 대한 조언 및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8년 106명, 2009년에 102명을 선정하여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창업농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4)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인턴 1인당 630만 원의 해외연수비를 19명에게 지원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우수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

기존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1회성 지원으로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지원만 있을 뿐 그 외 일반 후계농업인에 대한 마땅한 추가 지원책이 없었다. 따라서 2006년부터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으로 1,328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

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컨설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 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추진

(경영조직과 사무관 황규광)

가) 시행배경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인 제도는 1994년 농업생산 외에 가공·유통 기능까지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법인의 육성 근거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역할이 컸다.

2000년 이후에는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등의 농지소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과 비농업분야 외부자본 유치 및 확대를 위해 비농업인 출자한도액 완화(비농업인 출자를 총출자의 1/2→3/4)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특히 2009년에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종전,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하고,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농업법인이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법인의 초기 경영부담을 줄이고 조기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지원을 지속

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세의 경우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되는 것을 2010.1.1자로 완전 폐지하였고 그 외 농업법인이 설립등기 후 2년 내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농업법인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 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확대(9/10) 등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09.10.8)하였고, 또한 벤처농, 농기업을 설립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9개소)을 완료 하였으며, 농업분야에 전문 특화된 농업전문투자펀드 200억 원(정부 90, 민간 110)을 조성해 현재 농업전문투자조합(6호 조합)으로 결성, 농업법인 등 농업분야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농업경영체 등 농업분야 우수 아이템에 대해 발굴·시상하는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를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다) 향후계획

농어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2010년에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현재의 최대 90%에서 추가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내부의 자본이나 정부 지원만으로는 농어업 투자에 한계가 있어, 농어업법인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비농업 분야의 인력과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약 600억 원)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법인을 비롯한 한우, 양돈, 양식업 등 생산분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유통분야, 농약, 종자 등 농업투입재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에너지 절감 및 활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고 외부자본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농업교육훈련

(경영조직과 서기관 박영근)

가) 시행배경

FTA 등으로 급변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중요

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 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꾀하고,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실습위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교육체계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도농가 실습장 및 전국대표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교육장 확충과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한다. 품목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과 소득 증대와 연계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한다.

농정 목표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기관과 과정을 선정한 전문 농업경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연수 운영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연수기관 선택을 확대한다.

예비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및 농고 현장체험교육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업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교육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마이스터제도, 농업교육프로그램인증제 등의 도입과 농업교육 인적자원지표 개발, 농업능력 표준점검으로 교육성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선도농가실습장 45개와 전국대표실습장 8곳을 지정하여 농업인·농대생·농고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였고, 축산실습장, IT기반 첨단농업 교육센터,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그린낙농교육장 등의 구축으로 교육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9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 23개 캠퍼스에서 85개 과정의 교육을 2년 동안 40학점을 이수하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농정에 부합하도록 창업·경영·마케팅, 친환경·품목기술, 조직화·리더십·농촌, 소비자·청소년, 농업회계·경영장부, 비용절감,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37개 기관 53개 과정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전문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이주여성농업인의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교육후견인과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이주여성농업인과정을 운영하였다. 귀농자의 귀농

지원을 위한 귀농자 교육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하였다. 또한 해외연수를 9개 기관에서 2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했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되었다. 특성화 농고 10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의 네트워크도 강화하였고,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1개 농고를 대상으로 멘토링교육, 농고비전스쿨을 운영하였다. 또한, 농과대 영농정착 교육과정을 전국 11개 대학에서 농대 2학년부터 졸업 시까지 부전공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준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였다.

공모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과정, 해외연수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 유형 특성에 적합한 교육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체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강의평가/모니터링 등 4단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 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를 실시하였고, 교육기관의 정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교육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으로 인증하기 위한 농업마이스터 시험제도 도입연구, 교육기획단계에서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프로그램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모델개발과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농업교육 관련 현황을 통계로 정리하여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업 인적자원지표 개발 연구와 농업교육 전·후의 농업인 역량(능력표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교육훈련은 농업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어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 운영으로 기존에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문농업인교육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관 간의 경쟁이 발생하여 교육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교육비의 30% 이상을 교육생

이 자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2009년 364억 원, 2010년 364억 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다)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교육 평생학습 체계 확립, 성과중심의 농업교육운영, 예비농업인 육성 교육 강화, 농업교육 기반 및 지원 확충을 통해서 성과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축적과 능력 발전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경영컨설팅 지원

(경영조직과 사무관 홍승길)

가) 시행배경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의 대규모 기업농 대상 민간컨설팅, 민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농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공적컨설팅, 농협 등의 농업인 단체 컨설팅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에게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해양수산부와의 통합으로 2009년 사업부터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업,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어촌계를 사업대상에 추가하고 어업분야 컨설팅을 담당할 컨설팅업체 인증을 통해 어업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하였다. 또한 어선어업은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a 이상 등, 양식어업은 육상수조식 중 어류 등은 250평, 패류는 200평 이상 육상축계식은 2ha 이상 등의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중규모이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농업분야와 균형을 맞추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경과 후 인증기간 준수여부 현지점검 및 사업수행 상황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 및 컨설팅 질 향상을 유도하였다.

일부 서식 및 별표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재하여 지침을 간소화하고, Agrix 운영활성화를 유도하였다.

Agrix에 올려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의 10%를 선정하고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 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 고객관계 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성과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가 소득 증가율이 37.3%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 3-4>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1,009	1,080	1,250	1,448
사업비(백만 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8,640	8,640	9,750	11,200
국 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4,400	4,400	5,000	5,600

다)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으며, 농가, 법인, 조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2011년부터는 자부담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컨설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5) 농업벤처 육성

(경영조직과 사무관 홍승길)

가) 시행배경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

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 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 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 원)를 결성하였으며, 2007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4호(200억 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117억 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8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10점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2005년에 영남지역(경상대), 2006년도에는 호남지역(전남대)에 이어 2007년도에는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표 3-5> 제8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구 분	출품자	시상금	아 이 템
최우수	조석호	6백만 원	보리 발효물을 이용한 비만 예방 식품
우 수 (3)	강성희	4	고추 수확기
	김윤수	4	참쌀국수
	최영근	4	긴조떡 개발 및 생산계획
장 려 (6)	정석화	2	충전식 손수레용 농약살포기
	조호현	2	배즙 부산물을 이용한 고농축 천연 요리당
	성병훈	2	상황버섯 추출물
	임지환	2	대관령 프리미엄 컬러감자
	성삼섭	2	현미와 산뽕잎을 활용한 조청, 고추장
	안필웅	2	항균, 항산화 기능의 폴리페놀 함량 밥

다) 향후계획

2011년부터는 농업벤처업무를 식품산업정책과에서 기존의 농업벤처업무에 식품업무를 추가하여 농식품 관련 창업지원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벤처 업무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바. 농지은행제도

(농지과 사무관 정수경)

1) 시행배경

농촌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지법」 개정(20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2005.12.29)을 통해 농지은행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으로는 농지유통화정보제공,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영농규모화사업이 있으며, 2010년부터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2008.12.29.)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하였다.

가) 농지유통화정보제공

2005.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2006.1월부터 농어촌종합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09년 말 : 회원 수 215천 명, 접속 5,300천 건(3,003건/일)

나)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

여 전업농, 창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10.1.부터 시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과 낮은 임차료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15,975ha의 농지를 임대수탁 받아 27,237농가에 15,956ha를 임대하여 호당 평균 경영규모 0.6ha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3-6>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실적

(단위: ha)

구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가수	51,803	219	6,613	7,997	9,737	27,237
면적	28,877	110	3,372	4,277	5,162	15,956

다)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하여 전업농·창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여 농지 매도를 지원하고 있다.(’09년까지 2.7ha)

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들이 부채를 갚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은 물론,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수준 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감소를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4~19%)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이내)지급으로 농가부담을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파산위기에 처해 있던 농가들이 경영회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농가의 부채기준을 완화(부채 5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하였다.

또한, 매입대상을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로 확대하고 임대기간 연장(5년 → 7년) 및 환매가격을 감정평가액과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하여 환매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경영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강화를 위해 소요예산 25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당초 1,450억 원 → 1,700억 원)하였다.

<표 3-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단위 :호, ha, 억 원)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가수	1,752	183	444	490	635
면적	2,514	311	629	696	878
금액	4,270	422	953	1,195	1,700

3) 향후계획

농지임대수탁사업은 '10년 사업목표를 14,000ha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수탁대상 농지 물색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보다 많은 경영위기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2,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의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고령화 심화, FTA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 이농·전업(轉業)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전업농, 창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 농지제도 개선

(농지과 사무관 안종락)

1) 시행배경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고령농 증가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제도를 보완하였다.

2009년 5월 27일자로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법시행령을 2009년 11월 26일, 농지법시행규칙을 2009년 11월 27일 개정·시행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첫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중심으로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통해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의 농업인 비율을 1/2 이상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축용 농지 소유를 인정하되, 취득 후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둘째, 농지에 간이저장고 부지를 포함하고, 농지에 모든 종류의 다년생식물 재배를 허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식물재배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비농업인 상속농지의 농지은행 위탁한도(2ha)를 폐지하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농지에 양어·양식장 등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기간을 현재 6년(3년 허가, 3년 연장)에서 10년(5+5)까지 확대하고,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타 용도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쇄명령 등으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축사부지에 대한 농지 처분 의무를 면제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전용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농지의 활용

도를 제고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동 위원회가 농지전용 시 확인하던 사항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조치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농지전용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는데, 식물원 부대시설, 건축면적 33㎡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주택,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재감면하고, 수도권에 설치하는 산업단지('10.1.1부터 2년간), 택지개발업자가 의무적으로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였다.

3) 향후계획

농업인 및 일반 국민의 농지 관련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전문임업인 육성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주무관 함홍식)

가) 시행배경

우리나라 전체산림 6,455천ha 중 69%에 해당하는 4,387천ha가 사유림으로 소유 규모가 1인당 2.2ha로 매우 영세하고,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 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유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하는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육 및 육성자금 확대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통해 임업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전문임업인 선발 배경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을 지역사회 임업을 선도하는 산림경영주체

로 육성하기 위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요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수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비와 임도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시설 사업비,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장기수의 조림 및 육림을 위한 임야 매입비, 기타 산림경영에 필요한 제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문임업인은 2009년도에 본인사망 또는 자격포기자 등으로 19명을 취소하고, 신규로 독립가 19명, 임업후계자 348명을 선정(선발)하였으며, 신지식 임업인 2명을 추가하여 독립가 433명, 임업후계자 3,138명, 신지식 임업인 61명을 합하여 총 3,632명을 선정(선발)하였다.

(2) 전문임업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에게 임업경영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국비 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리 1.5%~3.0%로, 상환기간 15~35년으로 융자지원 하였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임업경영 능력향상과 의욕고취를 위하여 임업경영에 대한 교육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전문임업인 12명을 선발하여 일주일 간의 독일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다) 향후계획

전문임업인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지원 확대, 융자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세제감면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기능인 영입단 육성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사무관 한동길)

가)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수령 30년 미만의 나무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어린나무 위주의 숲으로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영립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다.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립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립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기능인력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09년까지 837개단 7,941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43단 1,854명, 산림조합 392단 4,275명, 산림사업법인 302단 1,812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8>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구 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계	757	7,286	800	7,595	837	7,941
국유림 영립단	146	1,712	142	1,681	143	1,854
산림조합 영립단	376	4,164	393	4,324	392	4,275
산림사업법인 영립단	235	1,410	265	1,590	302	1,81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다) 향후계획

앞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의 확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나가고자 한다.

자.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군승)

1) 시행배경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시·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일반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40백만 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50백만 원,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 1인당 ~100백만 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08년까지 17,804명에게 총 425,799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표 3-9>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07년 까지		'08년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7,804	425,799	17,380	410,100	424	15,699
일반후계자('81부터)	15,179	287,275	14,829	275,526	350	11,749
전업경영인('92부터)	2,559	132,799	2,490	129,349	69	3,450
선도경영인('95부터)	66	5,725	61	5,225	5	5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행정통계자료

2) 시행내용 및 성과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도에 200억 원(442명)을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장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수산업인턴제와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3-10> 어업인후계자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08년 까지		'09년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8,246	445,799	17,804	425,799	442	20,000
일반후계자('81부터)	15,413	294,875	15,179	287,275	234	7,600
전업경영인('92부터)	2,727	141,199	2,559	132,799	168	8,400
선도경영인('95부터)	106	9,725	66	5,725	40	4,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행정통계자료

3) 향후계획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후계인력 유도를 위해 일반후계자의 경우, 대상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어업인후계자는 1인당 지원규모를 ~40백만 원에서 50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업경영인은 1인당 ~50백만 원에서 70백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해서도 정착자금지원(2억 원/인) 및 주택구입비(4천만 원/인)를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훈구)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가) 시행배경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 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9년 봄마무리까지 국고 2조 2,438억 원, 지방비 6,884억 원 등 2조 9,322억 원을 투자하여 112.5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3-1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69.6	112.4	66.4	3.8	68.4	53.4
사업비(억 원)	46,886	28,783	61.4	1,059	63.6	17,04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다)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2) 밭 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훈구)

가) 시행배경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 기반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고, 2009년까지 2조 25억 원을 투입하여 1차 목표면적 110천ha 중 85.4천ha를 완료하였다.

<표 3-12>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 표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10	85.4	77.6	4.1	81.4	20.5
사업비(억 원)	25,794	20,025	77.6	923	81.2	4,846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촌정책국

다)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훈구)

가) 시행배경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군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9년까지 1조 7,453억 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1.2천km를 완료하였다.

<표 3-1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 표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km)	35	21.2	60.6	1.1	63.7	12.8
사업비(억 원)	29,689	17,453	58.8	953	62.0	11,28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다)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추진하고, 농업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경구)

가) 시행배경

최근 들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에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시설의 경우 56%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용·배수로의 경우 구조물화 등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흙수로가 61%에

달하여 누수 손실이 많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3-14>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등
계 (개소)	68,688	17,611	7,336	18,127	2,757	22,857
30년 이상	38,169	16,610	2,372	14,192	2,232	2,763
30년 미만	30,519	1,001	4,964	3,935	525	20,09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09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착공 이후 3~5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완료된다. 2009년에는 4,6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10지구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 83지구를 완료하였다.

<표 3-15>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 원, 지구)

구 분	총계획	'66~'08년까지	'09년	'10이후
사업비	109,323	44,301	4,670	60,352
사업량	8,769	5,808	83	2,878

다) 향후계획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정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5)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경구, 사무관 이훈구)

가) 시행배경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까지 3조 3,254억 원을 투입하여 145.1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이상 기후 여건과 지방재정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88천ha에서 232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3-1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 표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232	145.1	62.5	4.3	64.4	83.1
사업비(억 원)	75,610	33,254	44.0	2,131	46.8	40,22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

수압문 교체 및 재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등 3,490지구(국가관리 206지구, 지방관리 3,284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1,467지구를 완료하였다.

다) 향후계획

최근 기상여건 변화와 논에서의 작목 다양화에 따라 '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밭(원예)작물 배수개선 시범사업(4지구)의 중간평가를 통해 재해대비 배수개선 설계 기준 변경(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구축·보전할 것이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6) 농촌용수 개발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가) 시행배경

농촌용수 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여전히 저수지·양수장 등의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를 준공 위주로 추진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면적은 1,010천ha로 농업용수 개발에 의하여 용수공급이 가

능한 수리답 면적은 806천ha(79.8%)이고, 비수리답(천수답) 면적은 204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04천ha(49.9%)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3-17>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연 도	단위	2000	2003	2006	2009
답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1,010
수 리 답(B)	천ha	880	878	859	806
	(B/A)%	76.6	77.9	79.2	79.8
수리안전답(C)	천ha	421	440	478	504
	(C/A)%	36.6	39.0	44.1	49.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1)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80개 지구에 3,098억 원(추경 798억 원 증액 포함)을 투입하여 18개 지구(11개 조기준공지구 포함) 5,309ha를 준공하였고, 2010년도에는 67개 지구에 1,900억 원을 투입하여 347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3-18>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09년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중규모	사업량(천ha)	107.5	61.0	0.3	46.2
	추진율(%)	100	56.7	57.0	

(2)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국고 10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국고 123억 원을 투입하여 239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19>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09년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소 규모	사업량(천ha)	11.0	1.1	0.2	9.7
	추진율(%)	100	10.0	11.8	

(3) 지표수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국고 6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국고 548억 원을 투입하여 1,100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0>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09년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지표수 보강	사업량(천ha)	31.9	26.7	1.1	4.1
	추진율(%)	100	83.7	87.1	

다) 향후계획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 등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농촌경관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으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 부가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강수가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21세기에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목적이 다각화되고 새롭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연간 강수량의 변동폭이 커지고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양한 용수 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되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4대강새만금과 사무관 한준희,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형주)

가) 시행배경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단일 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기존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또는 개량 및 보수 등 단위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는 경지정리사업 등이 후속사업으로 들어갔으나, 사업규모가 400ha이하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고 예산지원도 한정되어 계획된 준공년도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0년대부터 사업구역을 대단위로 권역화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단위사업을 모아서 추진하는 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사업을 한 지구 내에서 동시에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이 국가사업을 위탁·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3-21>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지구 개발유형

구 분	지 구 명	개 발 유 형	재 원
육지부 (4)	금강Ⅱ, 미호천Ⅱ 홍보, 영산강Ⅳ	기존 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농 특 회 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용,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용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 지 관 리 기 금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도입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총 24지구 293천ha를 추진하여

2009년까지 15지구 162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Ⅱ지구 등 9지구 131천ha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중인 사업지구에 '09년까지 총 5,526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5,712ha, 경지정리 10,089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7,353ha 조성 등 부분 준공을 실시하여 한해·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는 '06년 최종 연결공사(물막이)를 완료한데 이어 방조제 완공을 위해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부토지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부토지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 수요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2008년도에 국토연구

<표 3-2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지 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 원)
	시도	시군			
계(15지구)			161,667		1,376,806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70~1976	16,823
평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70~1977	37,657
영 산 강(Ⅰ)	전 남	나주, 담양	34,500	'72~1979	81,238
경 주	경 북	경주	1,140	'74~1977	4,916
계 화 도	전 북	부안	2,467	'74~1979	12,521
창 념	경 남	창녕	2,269	'75~1981	17,358
임 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75~1983	45,807
남 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77~1985	61,903
낙 동 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78~1984	23,029
미호천(Ⅰ)	충 북	음성, 진천	11,554	'77~1989	104,871
논 산	충 남	논산, 공주	9,938	'78~1990	94,035
금 강(Ⅰ)	전 북	서천, 군산	하구둑	'83~1990	101,000
삽 교 천	충 남	아산, 당진	24,574	'75~1994	235,546
대 호	충 남	서산, 당진	7,419	'80~1996	185,630
영 산 강(Ⅱ)	전 남	목포, 나주	20,700	'76~1998	354,472

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반영하였다.

다) 향후계획

2010년도에는 금강Ⅱ지구 등 시행중 9지구에 대해 국고(농특회계) 1,146억 원, 농지관리기금 1,947억 원 등 총 3,093억 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고 시행중지구 부분 준공을 통해 급수면적 확대 900ha, 신규 간척농지조성 895ha 등의 사업성과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10년도에 방조제를 완공하여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네스월드레코드)을 받아 우리의 간척 기술력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10년에 방조제 완공과 함께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공사 착수를 통해 내부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지구별	위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억 원)
	시도	시군			
계(5지구)			72,608		52,405
영산강Ⅲ-1	전 남	영암·해남	13,160	'95~'15(21)	6,278
영산강Ⅲ-2	경 남	해남	7,840	'97~'14(18)	4,071
화옹	경 기	화성	6,212	'91~'12(22)	8,278
시화(대송)	경 기	안산	4,396	'98~'12(14)	4,288
새만금(외곽)	전 북	부안, 김제, 군산	41,000	'91~'10(20)	29,490

한편, 현재 시행중인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착수한 지 14~22년이 경과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 중간성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에도 타당성 재조사, 심층평가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심층평가(2008~2009.7월 KDI 및 시장경제연구원) 및 화옹지구 타당성재

조사(2009년 KDI)를 실시하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당년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 하면서 지구별 부분 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준공 간척지 또는 준공 후 미 처분된 간척지는 기존의 벼농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축산·원에 등 다양한 농업적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 고소득 대규모 농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농업의 기계화

(농산경영과 사무관 이범섭)

1) 시행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기계화는 농기계의 개발, 보급 촉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기계 구입비용의 70~90%를 저금리로 2009년에는 총 620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7개 농업기계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안전장치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확인을 받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기계의 이용 효율을 높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42개소, 지역농협 719개소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의 보급 촉진과 이용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논농업은 건조를 제외하면 거의 완전한 기계화를 달성하였으며, 지역농협 임대사업소를 통해 벼 재배면적의 약

4%인 3만4천ha에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다.

다만, 아직도 품목, 농작업이 다양한 발작물 재배에는 경운, 정지를 제외한 파종,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이 지연되어 밭농업 기계화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으로 농기계의 이용률도 낮은 편이다.

3) 향후 계획

2010년에는 농기계 구입 자금을 융자하여 오래된 농기계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에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각 임대사업소에 임대용 농기계를 더욱 확충하여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이다.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농산경영과 사무관 홍인기)

가) 시행배경

정부는 1991년부터 쌀 주산지에서 벼를 일괄처리(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쌀 품위향상 및 산지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된 RPC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1년까지 328개소(농협200,민간128)가 설치된 후 2002년부터 쌀 가공시설 과잉문제가 대두되어 신규설치 지원은 중단되었다.

한편, RPC의 수확기 농가벼 산물처리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건조·저장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는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을 설치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전국에 1,123개소를 지원하였다.

<표 3-24>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단위 :개 소,억 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사업량	22	25	64	81	90	85	76	81	44	71	50	110	110	110	104	1,123
국고보조	38	36	87	118	164	190	145	157	79	126	93	249	258	253	207	1,400

다) 향후 계획

2010년에도 건조·저장시설 83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국고 2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화된 통합 RPC 시설지원(12개소, 56억 원) 및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위성 증설시설(50개소,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도에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21개소(32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원예·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채소특작과 서기관 박희수)

가) 시행배경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품·흉작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절실하다. 또한, 시장개방이 진행되면서 국내산 원예·특용 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제어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있다.

해마다 기상재해로 인한 시설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7년

부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시설 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도면 45종을 개발·보급해 재해경감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유류값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의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및 고효율 난방기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의 획기적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다) 향후 계획

2010년에는 기존의 내재형 규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07-단동-5~11형의 규격을 폐기하고 측면기둥이 없는 10-단동-4~5형으로 변경하고 07-단동-12~17형의 규격을 폐기하고 10-단동-1형으로 변경 시카래규격 조정 시공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강도 변화기준을 추가하며 딸기, 참외 등 개별품목에 맞는 규격과 남부지방에서 선호가 높은 광폭형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열 냉·난방 설비,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바이오 메스 등 지속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지원의 개발·보급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재활용 시설 등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인삼계열화 사업 등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과 함께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3)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이연섭)

가) 시행배경

2009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한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섬유질 및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도축·가공·판매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을 1994~2001년까지 전국에 총 7개소를 건설·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도축장에서 지육으로 유통되는 낙후된 유통체계를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되었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이 실현되었다. 또한, HACCP 제도 운용으로 도축장 등 축산물 생산시설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었다.

- LPC 건설비 : 총 156,550백만 원(용자 89,612, 자부담 등 66,938)
- 축산물 생산시설(도축장·축산물가공업체 등) 시설자금 예산 :
(2006) 24,450백만 원 → (2007) 18,450 → (2008) 31,041
- 축사 현대화시설자금 지원 예산 :
(2009) 99,539백만 원 → (2010) 114,728 → (2011) 163,255

다) 향후계획

한·미, 한·EU FTA에 대비하여 축산농가가 조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편성된 중장기 자금지원 계획을 2017년까지 조기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모든 번식전문농장 3개소를 지원하여 사육농장의 시스템을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으로 전환하여 양돈농장의 전문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까지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을 70개소 설치하고, 녹색성장 대비 에너지화 시설을 2013년까지 15개소를 확대하고, 퇴·액비 이용활성화 및 수요확대를 위해 음식 잔재물 등의 소화액을 퇴·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선하고 액비살포 지역을 농경지 및 초지 외에 골프장과 임야에 추가할 계획이다.

라.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1) 시행배경

우리 어촌은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인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5>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2013년도	8,795억 원	230개 권역	국비 70%, 지방비3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2) 시행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795억 원 중 2009년까지 6,266억 원(국고지원 3,635억 원)을 투자하여 170개 권역은 완공하고 13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74%)중에 있다.

사업의 지원규모를 보면, 1단계 사업 160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 권역당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하여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 관광기반 시설이 가능토록 하였다.

<표 3-26>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 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	2011년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 업 량	152(24)	8(12)	10(13)	2(13)	58
	사 업 비	562,062	38,653	25,831	21,224	231,761

※ ()내는 계속지원 대상 권역수임.

3) 향후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 사업이면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지역별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어촌을 생산과 휴양이 가능한 『어촌복합생활공간』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최정록)

1) 시행배경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 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식품산업은 농어업 후방 관련 산업으로서 농수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수산물의 가공 및 외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를 출범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존의 산지 가공산업과 전통식품에 대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을 대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식품산업 육성 근거법인 「식품산업진흥법」을 2007년 12월 27일 제정·공포하였고, 2008년 6월 28일 동 법의 시행에 이어 2008년 11월 13일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 기준 100조 원인 식품산업시장을 '12년까지 150조 원으로 확대, 38억 불 수준인 농수산식품 수출을 '12년까지 100억 불로 증가, 우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둘째 세계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강화하며,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

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생산·공급 강화, ② 식품 R&D투자 확대, ③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지원, ⑤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 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 농어업·식품산업 연계 등 7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08.12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토대로 농식품 100억 불 수출계획,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고, '09.2월 식재료 수출활성화 기본계획, '09.4월 한식세계화 세부 추진전략, '09.6월 식품산업 R&D 중장기 계획, '09.8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3) 향후 계획

앞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동 대책 및 분야별 추진과제를 토대로 식품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하고 전략품목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에는 농어업의 2·3차 산업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농어가의 식품가공·외식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어가 식품가공 및 판매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 창업 매뉴얼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정병석)

1) 시행배경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과거 생산 위주의 농정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적 농정시스템을 가동하며, 창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분야는 ①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② 생산기반조성, ③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구분하여 지원 중에 있다.

'05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¹⁾ 3년 동안 총 549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시행 주체의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협력 문화기반 조성,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수요자 중심의 농림사업 패키지화, 지방농정과 농산업체 간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08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클러스터 개념 이해 부족과 추진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07년에 마련한 본 사업추진 방안을 토대로 선정한 22개 본 사업단²⁾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단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08년에는 18개 사업단에, '09년에는 15개 사업단에 추가 지원하였고 그 외 사업단은 지원을 중단하였다.

또한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단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 산업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사업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09년에 12개 사업단³⁾을 선정하였다.

3) 향후 계획

향후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출범에 따라 식품부문을 중점 육성·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정책 Feed back 시스템 강화와 지역 농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 1) 시범사업단(20개) : 안성마춤, 포천 전통한과마을, 하이록한우, 백두대간농업포럼, 영동포도, 괴산 친환경청정고추, 아산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한산모시, 장수사과, 정읍환원순환농업, 임실 낙농(치즈), 보성녹차, 함평 과학농업, 진남 친환경쌀, 경북한우, 풍기인삼, 경남친환경쌀, 하동녹차, 경남양돈, 제주 감귤
- 2) 본 사업단(22개) : 화성 웰빙떡, 강원 영동 한우령, 홍천 늘푸름 한우, 충북 친환경 축산, 서산 생강, 논산 에스민 딸기, 홍성 백년대계 한우, 진안 친환경한방, 무주 반딧불 산머루, 남원 친환경 흑돈, 완주 감, 영암 무화과, 곡성 멜론, 신안 시금치, 구례 산수유, 무안 황토고구마, 경산 종묘, 상주 고랭지포도, 영천 와인, 남해 보물섬 시금치, 경남 서북부 한우, 제주 마(馬)산업
- 3) 광역사업단(12개) : 팔당클린 농식품, 산우리 재래돼지, 육품정 육우,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청보리를 활용한 참예우, 청보리 녹색산업, 녹색한우 명품화, 전남 딸기신산업, 감 고부가가치, 청정 약용작물, 제주 넉치, 우리밀 산업화

[그림 3-1] 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1단계> 클러스터前단계	<2단계> 클러스터구축단계	<3단계> 클러스터산업화단계
발전단계	<p>지역농업 가치발견</p>	<p>클러스터 구축</p>	<p>클러스터 發顯</p>
발전목표	지역농업자원 발굴과 차별화 요소의 극대화	지역농업주체간 네트워킹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산업화 달성과 성과 도출
핵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전략 선택 -생산,특화품목,마케팅,농촌 관광 등 농산업전반에서 특화요소의 전략적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간 역할분담 -지역농업 코어(Core)구축, 핵주체 구축 -핵심 인재(人才)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업 확장 (1차+2차+3차+@) -본격적인 지역농업 마케팅 실천 -신사업(新事業)도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육성 정책 -마케팅조직육성 정책 -생산유통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러스터 구축지원 -지역특성화교육 -브랜드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추가 지원 -패키지(Package)지원 (생산→마케팅)
지원체계			

다. 종자산업의 육성

(종자생명산업과 서기관 김상경)

1) 시행배경

정부는 종자산업을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품종 육성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술·자본 집약산업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여, 2009.10월에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 종자산업 육성대책은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12월말 현재 종자업 등록 업체 수는 817개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종육성기술 수준이 낮고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종자산업 육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27> 종자산업육성 자금지원 실적

(단위 : 백만 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금액	1,935	1,983	870	400	6,000	3,700	3,900

품종육성자의 신품종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19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를 시행중이며, 품종보호제도 시행당시 27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2009년 현재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개 작물을 제외한 전체작물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까지는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신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종자수출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하여 2009.12월말 현재 종자수출액은 22백만 불로 2005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다. 다만, 수출종자 품목 중 채소작물 종자가 99%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품목의 다변화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5년간('04~'08년) 우리나라의 품종보호등록 건수는 2,233건으로 68개 UPOV 회원국 중 8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09.12월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2,932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8>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2009. 12. 31.현재)

등록 작물	국 내						외국			계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 타
화훼류	775	140	47	244	334	10	895	4	891	1,670	144	938	244	334	10
식량작물	550	15	15	26	451	43	2	0	2	552	15	17	26	451	43
채소류	411	11	307	20	56	17	1	0	1	412	11	308	20	56	17
과수류	128	53	17	7	48	3	1	0	1	129	53	18	7	48	3
특용작물	116	1	7	7	99	2	1	0	1	117	1	8	7	99	2
버섯류	36	11	3	15	7	0	0	0	0	36	11	3	15	7	0
사료작물	16	0	0	0	16	0	0	0	0	16	0	0	0	16	0
계	2,032	231	396	319	1,011	75	900	4	896	2,932	235	1,292	319	1,011	75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유중인 농업유전자원은 272천점('09년 말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작물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이용형질 특성평가는 7%('08년) 수준에서 15%('09년)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8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전용 품종개발, 육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품종보호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주변국의 품종보호제도 도입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품종보호제

도를 도입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활용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중인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3년까지 '생명자원 통합 DB'를 구축하여 생명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검색부터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 종축산업의 육성

(축산정책과 사무관 서재호)

1) 시행배경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주요 가축 중심으로 추진한 가축개량 시책을 살펴보면, 한우개량 시책은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의 도입이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된 암소 50두 내외(목표 100두 이상)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호씩 총 50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5,000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여 검정한다.

이 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하여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육종농가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4개소(농가 41, 도센터 3)를 선정하였고, 2009년엔 11개(농가 10, 도센터 1)를 선정 추진하였다.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한다. 2009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실제 참여한 농가 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11,881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관리대상 등록우 중 기록관리가 되는 74,763두와 이 등록우에 생산된 송아지 66,984두에 대하여 4,38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3-29>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우											
-18개월 체중 (kg,♂)	507.3	509.6	512.0	522.1	532.2	542.2	564.5	571	567	575	572
-1등급 출현율(%)	18.8	24.8	29.8	35.2	33.3	35.9	47.9	44.5	50.3	54.0	56.7
○젖 소											
산유량 (kg/305일)	7,629	8,086	8,364	8,761	8,899	8,935	9,014	9,271	9,556	9,598	9563
검정농가 (초산우)	(7,032)	(7,445)	(7,688)	(7,962)	(8,032)	(8,019)	(8,142)	(8,362)	(8,554)	(8,553)	(8527)
○돼 지(요크셔,♂)											
-일당증체량(g)	649	664	647	654	648	642	637	645	649	638	642
○닭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299	279	285	297	307	320	320	312	318	319	319
-육용계 체중 (6주,g)	2,195	2,300	2,127	2,285	2,431	2,544	2,650	2,530	2,644	1,974 (5주)	1,950 (5주)

그밖에 2009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40두와 보증씨수소 22두를 새로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61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2,124천두 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을 받는 낙농가 3,669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234,765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검정비 총 2,411백만 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1두 선발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9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젖소 정액 360천두 분을 생산하

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돼지개량의 성과를 보면 요크셔 수돼지의 경우 농장검정성적을 기준으로 일당 증체량은 1999년 649g에서 2009년 642g으로 0.1% 감소하였다. 돼지의 등 지방 두께는 1999년 11.4mm에서 2009년 2.10mm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1999년도 279개에서 2009년 319개로 14.3% 향상 되었으며, 2000대 이후 산란지수는 310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종돈장, 종계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돼지와 닭 개량은 규모 있는 종돈장의 경우 자체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종축장은 종축을 수입하여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종계의 경우 닭경제능력검정소를 운영하여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 향후계획

닭 개량을 위해 종계 22천수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소요 검정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검정성적은 양계농가들에게 제공하여 양계농가들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09 종축산업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개량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육질 중심의 개량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능력검정두수를 확대하여 선발 강도를 강화하고, 수소 중심의 개량에서 암·수 동시개량으로 개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젖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율을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 하에 6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지원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4년까지 규모화된 청정 육종농가 20

호를 선정하여 고능력 수정란(200~300개/년)을 이식하고, 생산된 송아지 중 암소는 후보송아지 생산기반으로 활용하고 수송아지는 능력검정을 통하여 보증씨수소로 선발·활용할 계획이다.

돼지개량의 경우는 청정화된 종돈장을 대상으로 종돈장별 최우수 종돈을 선발하고, 정액을 여러 농장과 공유 및 평가하여 우량 종돈을 생산하기 위해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종돈장 종합평가제를 도입하여 종돈장 간 자율 경쟁유도 및 양돈농가에 종돈 선택지표를 제공할 계획이며, 우수 종돈장으로 선정된 종돈장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닭 개량은 종계 대부분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계농가에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종돈·종계·종오리업 농가를 대상으로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 중에 있다.

마. 사료산업의 육성

(축산경영과 서기관 이흥철)

1) 시행배경

사료산업은 1960년대에 원료의 단순 가공단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료공장 출범 및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1970~1980년대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료산업의 양적 성장시대 돌입과 더불어 근대적인 사료제조시설을 도입하였다. 1990년부터 현재는 가루사료 중심에서 펠렛, 후레이크 및 TMR 사료로 가공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사료곡물의 수급, 사료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사료 수급

2009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4,547천 톤으로 전년(23,833천 톤) 보다 3.0%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9,344천 톤, 조사료가 5,203천 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6,665천 톤으로 전년(16,323천 톤)보다 2.1% 증가하였다.

축종별로는 양계용 4.1%, 양돈용 0.5%, 한육우용 3.5% 증가한 반면, 젓소용은 4.3%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젓소를 제외한 전 축종의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2009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기타 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4.5% 증가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8년 10월 이후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의 안정과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하락으로 인하여 배합사료가격은 2009년 6차례에 걸쳐 약 33.3% 인하되었다.

<표 3-30>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 톤,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A)	2009년 (B)	증감률 (B/A)
합 계	10,529	14,856	15,105	15,436	15,693	16,323	16,665	2.1
양 계 용	3,274	3,766	3,867	3,907	4,267	4,286	4,463	4.1
양 돈 용	3,551	4,725	5,215	5,663	5,175	5,307	5,332	0.5
젓 소 용	1,790	2,905	1,891	1,774	1,539	1,370	1,311	△4.3
한육우용	1,667	3,681	3,340	2,926	3,574	4,165	4,310	3.5
기 타	247	589	792	1,179	1,138	1,195	1,249	4.5

나) 사료 산업 지원

사료의 품질·안전성 및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09년 500억 원을 사료 제조업체에 용자 지원하였으며, 사료 관련 공무원, 생산자단체, 사료업체 종사자 등

에게 사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등 정책·제도 관련 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사료의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료공장 HACCP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56개소, 2007년 6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83개소로 HACCP작업장 지정이 확대되었다. 이는 전체 지정대상 배합사료공장 98개소의 85% 수준이다.

국내 사료공장 종사자들은 사료공장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욕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자금(융자) 지원시 HACCP 지정 사료공장을 우대하는 점도 보다 원활한 추진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3) 향후계획

가) 사료 수급

가축용 사료 수요량은 국내 가축의 사육동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바, 젖소는 사육두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다른 가축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 또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사료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사료곡물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사료 원료의 수급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료원료의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원료 구매에 필요한 용자 규모를 확충하고 상승폭이 높은 수입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세율 인하와 대상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사료업계에서는 사료원료 구매방식을 개선하여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수입 원료의 종류 및 수입국을 다변화하며, 가능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필요한 원료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사료가격 인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사료 생산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이 축산농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사료 산업 지원

사료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융자 지원,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사료

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지속하는 한편,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실시 및 사료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사료공장 HACCP 지정 업체수도 2009년 83개소에서 2010년 87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정대상을 현행 배합사료공장에서 섬유질사료 가공 공장까지 확대·적용되도록 인증 매뉴얼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바. 동물보호·복지 추진체계 확립

(동물방역과 사무관 안유영)

1) 시행배경

EU와 OIE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04년 EU헌법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이 명문화되었으며, '06년에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발표하였다. 동물실험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EU에서는 개·고양이 가죽제품의 수입이 '07년부터 금지되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은 '09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었다.

OIE에서는 '02년부터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육상·해상·항공 운송, 도축, 질병 방역 목적의 살 처분 등 5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여 '06년에 이를 제정하였으며, 축사시설·사양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소득증대 및 독신 세대 증가 등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문화 미성숙 등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량과 동물학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실험동물은 한해 약 100여만 마리가 사용되나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동물 실험결과와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축산업은 규모화 등으로 선진화를 이루었으나 좁은 국토 여건 등으로 밀집사육 등이 일반화되어 동물복지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의 금지, 동물의 도살방법, 벌칙 등이 대폭 강화·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2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동물등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물판매업 등록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 등 동물보호·복지 증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09년에는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09년 9월에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방안을 마련하였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였다. 동물판매업자 교육 세부 실시요령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고시)을 '09.3월에 개정하였으며,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09년에 광주, 경기, 제주에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3.6억 원을 지원하였다.

'09년에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자·동물판매자 등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TV 프로그램, 동물보호 문화·산업대전, 지하철 영상물 등을 통해 동물보호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하였다.

3) 향후계획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보호법 실효성 증대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하여 기준안 마련 및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동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일반인, 축산농가, 동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캠페인, TV·신문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사.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수산정책과 사무관 이명준)

1) 시행배경

국민들의 소득 증대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어 수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고품질 수산식품산업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가공품의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WTO·DDA 체제 출범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가공품 공급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가공품의 위생·안전 확보는 물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수산물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고, 또한,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지원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39개소, 137억 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7개소, 105억 원), 젓갈타운 조성(3개소, 20억 원), 김 가공공장 현대화(14개소, 12억 원) 및 전북진주산업센터(1개소 4억 원)를 중점 지원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을 위해 노력 하였다.

특히, 지역별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33억 원),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 지조성(30억 원),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관연구센터(5억 원) 등 6개소 97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수 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을 기존 양식수산

물 7개 품목에서 단순가공 3개 품목을 포함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제발전과 식생활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3-31>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구 분	수 산 물 명
양 식 어 류 (2)	넙치, 무지개송어
양 식 패 류 (2)	굴, 홍합
양식해조류 (3)	김, 미역, 톳
해조류가공품(3)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아울러, 전국에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보성별교꼬막, 완도전복, 기장미역, 장흥키조개 등 7개 품목의 수산물이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였다.

<표 3-32>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명칭	등 록 자
제1호	'09. 2. 25	보성별교꼬막	보성별교꼬막영어조합법인
제2호	'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제3호	'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제4호	'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제5호	'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6호	'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7호	'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3) 향후계획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고품질의 안

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현행 동일·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산물 가공업을 등록 및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수산물을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정책과 서기관 박정훈)

1) 시행배경

세계적으로 농림업 분야는 기술경쟁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농림업은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제한을 많이 받아 기술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은 농식품업 관련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림업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FTA 확대, 세계 곡물가 변화 등 글로벌 농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쟁국보다 한발 빠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림업을 IT·NT·ET 등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3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이다.

정부는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사업체계를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연구기획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공모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자유응모형)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3-33>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구 분	기획과제(지정공모형)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내 용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과제 또는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사업내용 등을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농림업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2009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융복합 기술, 농식품 수출증대, 식품 연구개발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연구과제 관리현황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총 4,462개 과제 7,422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3-34>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994~2009	
	과제수	금 액
합 계	4,462	7,422
기획과제	198	1,552
일반과제	4,264	5,531
사업관리비		339

나)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2009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2,557과제이며, 이 중 339과제(13.3%)가 산업체 및 농가에 기술 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 활용에 379(14.8%), 기술교육 및 컨설팅에 753(29.4%), 지식기반조성(특허, 논문, 인력양성)에 965(37.7%), 타 연구 활용에 19(0.7%) 과제가 활용되고 있다.

<표 3-35>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단위 : 개)

구 분	농산업 기술사업화	정책 활용	기술교육/ 컨설팅	지식기반 조성	타 연구 활용	성과활용 추진 중	성과 미활용	합 계
과제수	339	379	753	965	19	18	84	2,557
(%)	(13.3)	(14.8)	(29.5)	(37.7)	(0.7)	(0.7)	(3.3)	(100)

(2009년 12월 31일 기준)

3) 향후계획

2010년부터는 미래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 식품 개발사업'을 분리하였고, 농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장기 R&D 프로그램인 농업연구센터(ARC)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생명산업분야의 중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생명산업기술개발'로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융복합연구센터'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 R&D 기획단」을 운영하여 신규 대형 과제를 발굴·기획할 계획이다.

나.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1) 농업분야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서봉열, 사무관 박태철)

가) 시행배경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농어촌지역 정보이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업·농어촌 정보화 추진 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던 인터넷망의 접근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앞으로는 초고속망의 접근 문제보다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농간 정보 격차로 인해 농업·농어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어업인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업·농어촌 정보화사업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추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가격, 시황·전망 정보, 해외 농어업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1) 농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

도시 소비자 또는 타 산업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수단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정보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98년부터 '09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지역농협, 농업계 대학 등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총 66만 명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09년도에는 농업계대학 및 정보화선도자에 의존한 단발적인 농가 방문교육은 축소하고, 경영효율화와 소득창출로 연결되는 영농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정보화에 무관심한 농업인에 대해 인터넷뱅킹, 온라인쇼핑, 휴대폰·디지털카메라 사용법, 전자 민원서비스 등 정보화시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활용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아울러 일손 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심화·반복학습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IPTV를 이용한 교육을 개발·시범운영하였고, 온라인 교육 전담제(e-Tutor)와 헬프데스크, 원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교육자의 수준별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역량진단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피교육자의 교육 전후 정보화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까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36> 정보화교육 실적(1998~2009)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온라인 교육	5,882	6,842	7,814	7,859	7,761
기초교육(컴퓨터·인터넷활용)	7,144	7,047	5,289	6,901	3,210
중급교육(농업정보활용)	6,607	4,008	4,019	-	-
경영·회계 S/W	1,766	2,139	2,591	2,795	2,504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056	359	604	751	1,024
농업정보 119대학	12,074	10,044	10,044	10,836	2,537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570	512	542	255	-
정보화선도자	23,943	29,858	32,608	35,068	34,563
총 계	59,042	60,809	63,511	64,465	51,5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2)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99년부터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및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농림수산 정보망(옥답, www.okdab.com)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 농수산물 가격유통 정보, 시황·전망정보, 뉴스, 검색 등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농업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도·농간 정보교류를 촉진하였다.

옥답은 '99년 구축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09년 말 현재 회원수 269천 명, 일평균 방문자수 18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72개 유관기관의 one-stop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농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를 위한 244여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옥답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농촌 대표 웹사이트(웹 분석사이트 랭키닷컴, www.rankey.com, 농학분야 1위, 2009년 말 기준)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농어업·농어촌 대표 웹사이트로 자리매김하였고, 초등학교 교과서(5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68쪽)에도 농업정보 제공 웹사이트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표 3-37> 농림수산정보망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회원수(명)	196,198	218,323	239,726	257,646	269,113
연계기관 수(개)	-	-	51	65	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3)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농림사업의 신청·집행·사후관리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다. 2009년까지 5차에 걸쳐 50여개의 농수산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2009년에는 맞춤형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식량·농촌관련분야 12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업신청 농업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킹차단 솔루션 및 DB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지적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 농촌공사의 농지정보를 연

계하여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업무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모바일기기(휴대폰, PDA 등)를 통해 정책정보 및 쇠고기 이력, 반려동물 관리 정보 등을 서비스하여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농가 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교육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관·구축하여 시스템을 통한 중복 및 자격검증을 통해 보조금의 부당신청·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쌀직불사업에서만 1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다) 향후계획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경영·사회·문화 관련 지식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가격분석 서비스 등 정보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확충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업인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농가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과정을 개발하여, 영농에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농어업인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향후 농가기본 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교육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소득안정계정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임업분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 김명중)

가) 시행배경

정보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이용 기회 증가에 따라 식물자원 정보관리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정보화를 위하여 1998년부터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추진 등으로 산림생물자원의 역할 증대 및 정보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림생물정보의 선진화 요구에 따른

산림정보화 시행계획(2010~2014)에 의해 산림청내 및 대외 웹 사이트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산림생물정보 정보망 개발 및 생물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으며 국립수목원 등 식물보유기관 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국내 식물표본관 15개소의 산림생물표본정보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수목원 보유식물의 종 및 이미지 정보의 보완과 식물명의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적용하여 표준화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기 구축된 산림생물자원의 표본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종합생물자원 정보포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표본에 대해 DB구축 확대를 위하여 16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 및 곤충표본 등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DB영문화와 영문웹사이트를 개설하여 117만점의 산림생물종 데이터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네트워크와 연계하였다. 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전국 23개 기관에 산재된 식물 및 곤충 표본정보에 대한 DB구축과 기 구축된 국가 생물종 이미지 정보의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정보 변환작업을 수행중이며, 검색기능 및 서비스강화, DB 성능향상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도화 작업을 수행중이다.

2009년까지 산림생물정보 DB 식물·곤충도감, 표본, 종자, 수목원 보유식물, 균류, 포유류 등 17종류 117만 건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등록된 세계 239개 기관 중 27위, 아시아 1위 수준이다.

<표 3-38>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2009년까지)

합계	식물자원	곤충자원	균류자원	조류	포유류
1,174,782건	764,875	407,352	1,003	1,405	152

다) 향후계획

산림정보화 시행계획(2010~2014)에 의해 산림청 내 산림생물 관련 28개 대외

웹 사이트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전 세계 생물종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여 국외 생물자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국제생물정보 관련 기구·기관 및 국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 구축된 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GIS) 기반의 분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산림생물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Green of IT)하는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으로 “녹색정보화”를 제시할 것이며 아이폰 등을 활용한 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고품질 화상정보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기술기반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3) 수산분야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가) 시행배경

어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도시지역과 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업인 정보화교육을 수행해오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5,698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실시, 2004년부터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매년 어업인과 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였고 어업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지역 493개소에 “어촌사랑방”을 설치하였으며, 원격으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31개소 지방수산사무소와 35개 어촌계에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한 어업인 복지포털(행복海)을 구축해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다) 향후계획

2009년 어촌지역정보화 현황을 보면 컴퓨터 보급률 58.7%, 인터넷이용률 36.2%

정보화수준 60.3%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어업인 정보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과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로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가. 수출 진흥대책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상진)

가) 시행배경

농식품 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농정시책이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파프리카 수출 농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FTA·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부터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 하에서 그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 농식품의 품질 향상과 규격 표준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다.

최근의 농식품 수출 동향을 보면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및 가격 상승, 주요 수출국의 안전성 규제 강화, 구제역 발생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수출 농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수출농업인의 마인드 향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의 성과로 평가되며, 중장기적 수출농업의 발전방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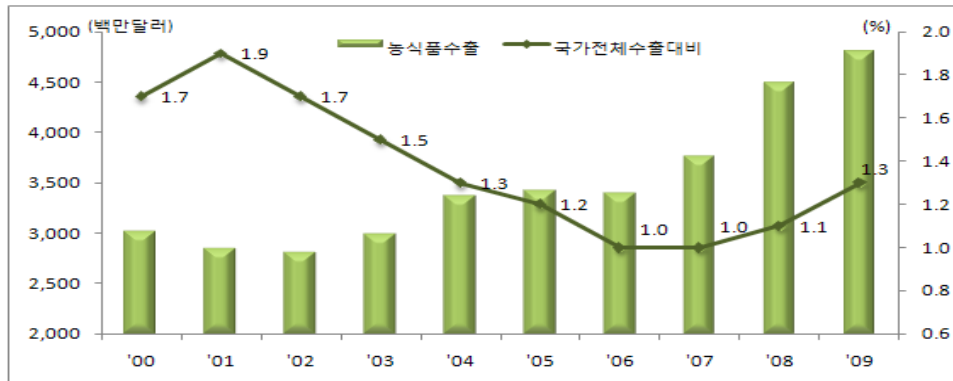
2009년 농림축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4,809백만 불을 기록하였으며, 채소·과실·김치 등은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의 수출액은 전년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의 수출 실적을 통해 우리 수출 농업의 질적 성장 및 미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 소비위축으로 주요국 식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우리 농식품의 수출 물량은 증가하여 해외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 수출 농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

<표 3-39>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 농식품 수출액	3,012.4	2,851.5	2,801.3	2,990.6	3,365.2	3,415.8	3,394.8	3,759.3	4,496.5	4,809.3
(국가전체 수출대비)	1.7	1.9	1.7	1.5	1.3	1.2	1.0	1.0	1.1	1.3
-농림축산물	1,531.9	1,579.9	1,639.9	1,859.8	2,085.0	2,221.5	2,304.4	2,531.0	3,048.2	3,298.1
-수산물	1,503.3	1,271.8	1,161.3	1,130.8	1,280.2	1,194.3	1,090.4	1,227.5	1,448.3	1,511.2

주) 관세청 무역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표 3-40> 최근년도의 세부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증감율 ('09/'08)
합 계	3,415.8	3,394.7	3,759.3	4,496.5	4,809.3	7.0
농식품	2,221.5	2,304.3	2,531.8	3,048.2	3,298.1	8.2
○ 신선농식품	608.2	535.5	597.1	675.0	739.3	9.5
- 채 소	138.5	133.6	121.1	148.6	161.5	8.7
- 김 치	93.0	70.3	75.3	85.3	89.4	4.8
- 인 삼	82.5	88.6	92.1	97.2	108.9	12.0
- 화 췌	52.1	40.4	58.1	76.2	77.2	1.3
- 과 실	120.9	98.4	144.9	154.9	172.6	11.4
- 돼지고기	34.3	23.9	25.6	17.7	11.6	△34.4
- 가 닭 육	9.5	8.5	9.0	12.9	18.4	42.7
○ 가공농식품	1,613.3	1,768.8	1,934.7	2,373.2	2,558.8	7.8
수산식품	1,194.3	1,090.4	1,227.5	1,448.3	1,511.2	4.3
- 어 류	615.9	589.2	717.6	864.7	929.3	7.5
- 연체동물	273.3	202.4	254.1	280.2	284.6	1.6
- 해 조 류	125.5	125.1	113.7	145.4	139.4	△4.1

항이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다양한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1)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첫째,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수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였으며, 둘째, 현장 중심의 수출컨설팅을 매년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 특히,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WTO 체제 하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 물류비 지원(323억 원)과 수출업체의 운영자금 융자(5,170억 원)를 수출 관련 경영체의 자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넷째, 품목별 수출선도조직(16개 품목 19개 조직)을 통합하여 농식품 수출 전문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수출 농산물의 규격화·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2) 해외시장개척 활동

첫째, 2009년 종합식품박람회 참가 지원(26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지원(104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둘째,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MOU 체결(16회) 및 이와 연계한 관측행사 개최,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2회)를 통해 해외시장다변화 및 한국 농식품의 대량수출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셋째,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 브랜드화를 위한 수출농산물 대표브랜드 휘모리(Whimori) 대상 품목 및 업체를 확대(6품목, 11업체)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통합마케팅을 강화하여 휘모리를 통하여 수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넷째, 해외시장에서의 동일 품목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일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들 간의 품목별수출협의회를 구성(식품기업, 김, 쌀 등 12개)하여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을 통한 농가 소득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섯째, 재외공관 연계 홍보(41회), 해외 농식품 홍보대사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실시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여섯째, 국내의 수출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6개국 10개 해외 aT센터 또는 사무소에서 입수되는 수출관련 정보를 인터넷 정보망인 KATI(Korea Agriculture Trade Information, <http://www.kati.net>)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다) 시행내용 및 성과

향후 정부는 농식품 수출이 농어업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별 수출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 수산물 수출 진흥

(원양정책과 사무관 유민석)

가) 시행배경

국제적으로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와 아시아권의 소비 증가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경제상태에 있는 국내 어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수산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보면,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

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의 증가 등의 여건 하에 놓여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시켜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수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452억을 투·융자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추진한 결과, 수산물 수출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5억불을 초과 달성하였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400억 원을 저리로 139개 업체에 융자하여 666백만 불의 우수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8회, 로드쇼 3회, 판촉전 2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체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와 간담회 6회 및 협의회 8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광고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68대의 기기 구입비 6억 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 단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2012년까지 1,390억 원을 투자목표로 2009년에는 기본설계비 등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넷째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Import Quota)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 할당에 대한 수입대행사 제도와 보증금 폐지,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 소진 등 통상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다) 향후계획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위축 등 수산물 수출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추진 및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반영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009년도 국가전체 수출은 361,200백만 불로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으나, 수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 공항 인근에 수출용 활어·패류 항공물류센터가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다는 수출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넓치, 전북 등 수출용 활어·패류 항공물류 센터를 건립·운영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수입관리 대책

1) 농림분야

(다자협상협력과 주무관 박홍진)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1) 시행배경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시장 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배정방식(국영무역),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중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국

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삼, 밤, 대추 등 8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보리, 사료용근채류 등 41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입 추천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무역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 여건 변화로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 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증량품목은 농축산원자재인 종돈·종계, 보조사료 등과 가공용원료인 대두, 유당, 전분류(감자, 고구마, 밀, 매니옥 등) 및 수급조절을 위한 녹두·팥 등 17개 품목이다.

(3) 향후계획

향후에도 시장접근물량 관리를 통해 국내수급을 관리하여 개방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1) 시행배경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관련 산업경쟁력 강화와 저가 수입 등에 따른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탄력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사료용 곡물, 농업용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 9월말 현재 할당 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밀, 근채류 등 사료용 원료 10개 품목, 요소, 농약 원제 등 농업원자재 4개 품목, 가공용 옥수수, 맥아, 원당 등 가공용 원료·식품 6개 품목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농업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010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고추장, 당면, 찌쌀, 메주 등 4개 품목이며, 관세율은 고추장(혼합조미료) 45%, 찌쌀 50%, 당면 32%, 메주는 14%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UR 협정 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땅콩, 녹두, 메밀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수삼, 백삼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향후에도 국내수요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생산 농가보호 및 관련 산업 피해방지를 위한 품목을 선정하여 조정관세와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2) 수산분야

(원양정책과 사무관 유민석)

가) 시행배경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09년 현재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

을 지정·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새우류, 갑오징어 등 5개 품목, 9,300톤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제도 이행을 위해 2009년도 한·아세안 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 85억 원을 징수 후 수산발전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경쟁력에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물수출입조합과 협력하여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수산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였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 품목의 운영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또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 관련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는 등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 하였다.

다) 향후계획

국내시장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도 수산물 수입은 2,895백만 불로 전년도 3,097백만 불 대비 6.5%(202백만 불)가 감소되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금후에도 체계적인 수입관리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정관세 등 수산물 탄력관세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FTA 협정별 TRQ물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TRQ 수입에 따른 부담금을 국내 어업인 등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주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가격 및 해외 현지 가격 조사를 확대하여 저가 신고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과세 정착, 실효성 있는 가격심사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1)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정경석)

가) 시행배경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DDA, FTA 등 개방 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1차('01~'05)·제2차('06~'1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활성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우선,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 공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함으로써 토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유기질비료 210천 톤(1,218억 원)을 공급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하였으며, 토양개량제 584천 톤(634억 원)을 공급하여 토양의 산성도 등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자운영, 청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등) 138천ha(135억 원)를 조성하여 지력 증진과 농촌경관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수입산 녹비작물 종자(호밀)의 국산 녹비보리 대체연구(2007~2009년, 농촌진흥청)를 통해 종자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천적·미생물)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시설원예 농가의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 2,500ha(36.5억 원)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 등에 미생물농약 1,000ha(8.4억 원)를 지원하였다.

셋째로, 시·군단위의 친환경광역단지(1,000ha 이상)와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를 지정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1개소(누계 20),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 43개소(누계 991)를 신규로 조성 지원(143억 원)하였다.

넷째로,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 인증 논 52천ha, 밭 38천ha에 대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401억 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58농가에 대한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 7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섯째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경로를 다양화 하고 학교급식 확산 등 대량 소비처 확보 및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 조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사업자를 선정(8억 원)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 단체에 매취자금과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연중, 448억 원)하였다. 또한, 유치원 원장 및 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27개교 828명)을 실시하고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9년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12.2%('01년도 0.2%보다 60배 증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37,355억 원('01년도 1,500억 원 보다 25배 증가), 화학비료 사용량 267kg/ha('99~'03 평균 375kg/ha 보다 30% 절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향후계획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여 안전농식품을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유기농식품 및 연관 산업을 차세대 녹색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 소비대중화와 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 대신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

(’10년부터)하고, 퇴비의 품질등급제 도입과 차등지원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며, 퇴비의 품질기준 및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의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수입 종자 사용량을 감축하여 ’15년까지 전량 국산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R&D 지원확대를 통해 제제 개발사업 및 수출 활성화 등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천적·미생물)사업의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단지 사업에 대한 성과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생산기반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량유통체계 구축 등 유통기능을 강화하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전처리 가공시설 확충 등 안정적 공급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새로운 농식품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임기창)

가) 시행배경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도입해 지원 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지구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규모의 구분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단지별 2~10ha 규모로 2004년 34개소, 2005년 63개소, 2006년 78개소, 2007년 59개소, 2008년 69개소, 2009년에는 43개소를 조성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정책 추진의 세 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기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단위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며 축산분뇨와 기타 농산부산물을 자원화 하도록 한다.

또한 건강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한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1995년부터 미생물배양시설, 퇴비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하며 마을 단위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왔고, '09년도에는 43개소 88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 사업이 실시됨으로써 사업대상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대상이 아닌 인근지역 및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임기창)

가) 시행배경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단지별 최소 1,000ha 규모로 조성되며, '05년에는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하였고, '06년에는 3개 지역(완주, 순천, 울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07년도에는 6개 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 10%제고 및 농약·화학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방안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04.2)하여 농

업환경개선과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1,0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 중이며, '09년에는 광역단지 조성 11개소 55억을 지원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의 확대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 되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함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하였다.

다)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지구는 2009년 말까지 991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10년에는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29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 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6년까지 읍·면당 1개소를 목표로 총 1,5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광역단지조성은 '09년까지 20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류성모)

가) 시행배경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 보전과 농촌 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 지역 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를 대상으로 매년 5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5천ha에 3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10천ha를 대상으로 30억 원, 2004년에는 13천ha에 45억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21천ha를 대상으로 82억 원, 2006년에는 35천ha를 대상으로 141억 원, 2007년45ha를 대상으로 17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63천ha를 대상으로 263억 원, 2009년에는 90ha를 대상으로 34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141천ha를 대상으로 49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 면적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는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은 2001년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0.2%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2%로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2001년 대비 6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이 1998년에 410kg/ha에서 2009년에는 267ka/ha로 큰 폭의 감소를 이루는 등 농업환경개선에도 일조하였다.

다)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 및 농업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에 설정된 지급단가는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편을 통하여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류성모)

가) 시행배경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구매자금지원, 품질관리강화,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판매 및 유통지원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자조금을 2006년 8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2007년에는 16억 원, 2008년에는 14억 원, 2009년에는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에 15억 원을 조성하여 각종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 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사이버거래소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을 1999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 200억 원, 2007년에 200억 원, 2008년에 360억 원, 2009년에 4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소비촉진홍보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소비처 발굴 등 친환경농산물 홍보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광주시에 건립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09~'12)는 친환경농산물의 중앙시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제

시, 가격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대량수집과 분산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도 일조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유통기능과 더불어 최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추진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기능도 할 것이다.

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수매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나.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추진

(안전위생과 사무관 류평열)

가) 시행배경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2006년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존의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위생시설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용수·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비용지원(국비보조 100%),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보조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인증기관은 신청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6, 권장 24)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 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지하철 광고, 차량랩핑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3-4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증기관(개소)	21	31	38	43
GAP관리시설(개소)	190	316	417	484
인증 농가수(호)	3,659	16,796	25,158	28,562
인증 면적(m ²)	4,535	24,754	36,322	40,081
생산 계획량(톤)	101,354	331,421	419,842	434,04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다) 향후계획

학교·군납·대량급식소 등의 안전·안심농산물 소비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2010년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는 결과적으로 인증 농산물의 공급부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농산물이력추적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GAP인증 농산물의 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GAP인증기관, GAP관리시설, GAP인증심사인력,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컨설팅, 표준화된 재배 방법의 보급,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그룹 조직 육성,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선진적인 보완, GLOBAL GAP와의 관계설정 등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 미생물방제) 지원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임기창)

가) 시행배경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로 친환경농산물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추세에 맞추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구조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동안 친환경농업인 조사결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최대 애로사항으로 병해충방제를 위해 정부차원의 방제대책이 필요하여 '05년도에 천적병해충방제가, '09년도에는 미생물 제재 활용 병해충방제가 도입되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전환하고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실천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통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05년에 원예작물 중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4개 품목 639ha에 대하여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에는 대상 품목을 7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면적도 1,000ha로 늘려 국고보조금 36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천적방제 대상 작목에 참외와 수박을 추가하고 방제면적도 2,000ha, 국고 44억 원으로 지원하였으며, '09년에는 2,500ha에 국고 37억 원을 지원하였고, 미생물 제재 지원 사업은 '09년도에 처음 시작된 미생물제재 지원 사업의 경우 딸기, 토마토, 오이, 고추 등 10개 품목에 대상면적 1,000ha에 8억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이바지 하였다.

다) 향후계획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은 '05년부터 지원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보급되는 천적 및 미생물의 종류를 다양화 하고 효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하게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개별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은 '11년부터 국고지원 사업은 중단하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지원하고,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조병임)

가) 시행배경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 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 시비량 62만 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도 120만 톤 420억 원, 2007년 135만 톤 473억 원, 2008년 200만 톤 1,160억 원, 2009년 210만 톤 1,218억 원, 2010년에는 250만 톤 1,450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였다.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의 노력으로 화학비료 총사용량(성분량 기준)은 화학비료 정부보조 폐지 당시인 2005년에 722천 톤이었으나 2009년에는 친환경농업 확대 등으로 인해 사용량이 500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맞춤형화학비료, 가축분퇴비 등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2010년부터는 기존의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 대신 토양검정 결과와 양분수지를 고려한 맞춤형화학비료(31종)로 전환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고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는 맞춤형화학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퇴비의 품질등급제를 차등지원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자원재활용 및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친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조병임)

1) 시행배경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질은 1957년부터 규산질은 1965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또한, 2008년부터는 농가단위 신청제로 전환하고 살포주기도 3년 1주기 공급으로 개선하였으며, '09년 584천 톤(규산 364, 석회 220)을 지원하였다.

또한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알갱이 형태의 입상제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9년도부터는 전량 입상으로 489천 톤(규산 288, 석회 201)에 이어 2009년에는 584천 톤(규산 364, 석회 220)으로 확대·공급하였다.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3) 향후계획

2010년에는 토양개량제를 811천 톤(규산 643, 석회 168)으로 확대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병해충억제 및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토양검정결과 등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급, 맞춤형비료지원, 유기질비료지원 확대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농어가소득 증대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가. 농어가소득 증대

1) 농림분야

(농업정책과 사무관 정용호)

가) 시행배경

<표 3-42> 국내 직불제 현황

직 불 제 명	주 요 내 용	예산(억 원)	
		'08년	'09년
□ 공익형 직불제		7,837	7,943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01,'05)	○'98~'00논농업이용농지(형상·기능유지), 평균 700천 원/ha	7,116	7,088
○ 친환경농업 직접직불('99)	○친환경인증농가, 217~794천 원/ha, 3년간	263	423
○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04)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200~400천 원/ha	432	336
○ 경관보전 직접직불('05)	○경관작물재배, 마을협약체결, 1,000~1,700천 원/ha	26	96
□ 경영안정형 직불제		6,330	1,076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02,'05)	○벼재배농지, 목표가격-쌀값의 85% - 고정직불	5,330	676
○ FTA피해보전직불('04)	○수입량증가·가격하락시 하락분80%, 시설포도·키위	1,000	400
□ 구조조정 직불제		1,300	1,345
○ 경영이양 직접직불('97)	○65~74세, 진흥지역농지, 250천 원/ha	300	845
○ 폐업지원('04)	○시설포도·키위·복숭아, 33~104백만 원/ha	1,000	500
□ 기타 직불제		1,032	1,537
○ 농작물재해보험('01)	○70, 80% 보장, 20품목('09년 시범사업 5)	596	618
○ 송아지생산안정사업('01)	○두당 10천 원 납부, 최대 30만 원/두	149	641
○ 축산공제료 지원('97)	○공제료 50%지원	287	278
□ 직불성 복지사업		2,976	3,399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04)	○5ha미만농가, 0~5세, 59~260천 원/월	411	406
○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04)	○읍·면 농업인, 50%경감	1,356	1,707
○ 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95)	○연금보험료 일부(최대 50%)지원	884	917
○ 재해공제농업인지원('96)	○공제료 50%지원	278	322
○ 취약농가인력지원('06)	○36,400원/일, 최대 10일 지원	47	47
계		19,475	15,300

WTO 출범 이후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농가 소득안정에는 기여 하였으나, 여러 유형의 직불제 혼재로 집행·관리비용 증가, 품목간 형평성(대부분 쌀에 집중)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직불제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직불제를 전체적인 계획 하에 통합·개편하기로 하였다.(2009.7.27)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각 직불제의 특성과 국내의 도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직불제를 i)공익형 직불제와 ii)경영안정형 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합·개편을 추진 중이다.

<표 3-43> 직불제 개편방향

구 분	공익형 직불	경영안정형 직불
목 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
보조성격	WTO 허용보조	WTO 감축보조
대 상	프로그램 참여 농가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
조건·기반	○ 합리적인 상호준수의무 프로그램, 마을계획 수립, 협약 체결 등 필요 ○ 행정수요·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	○ 농가별 소득정보의 체계적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모니터링 등에 많은 행정수요·비용 발생
대상직불제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예산('09)	7,943억 원	1,076억 원
비 고	EU	미국, 캐나다

(1) 공익형 직불

현재 쌀(논)고정직불을 전체농지로 확대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함께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2) 경영안정형 직불(농가단위 소득안정제)

공익형 직불의 기본적인 소득보전 바탕 위에 농가별 경영위험까지 관리 할 계획이다.

다) 향후계획

현행 9개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통합·개편함으로써 공익적 직불제를 통해 중소농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전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통해 규모화된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경영안정형 직불제는 '10년도부터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 여건을 조성하고 문제점 보완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공익형 직불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실시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산분야

(어업교섭과 사무관 권요정)

가) 시행배경

농업분야에서 1997년 직불제를 본격 도입한 이후 어업인 소득보전 대책으로 수산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확대 등으로 어업인들은 직불제 도입·시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보조금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WTO·DDA 보조금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수산분야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직불제 확대를 위한 대외여건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⁴⁾

이에 WTO·DDA 체제하에서도 지원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어가소득 보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타 분야에서 시행하는 직불제를 참고하여 시장개방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가능 보조금을 수산직불제 형태로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수산직불제는 정부가 예산(국고 보조)을 어항정비, 유통시설 확충, 기반정비 등에 투입해도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 증대와 연결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시혜적이

4) 수산보조금이 논의되는 규범(Rules) 협상그룹 의장이 대부분의 수산보조금(면세유, 영어자금, 어선건조, 어항건설 등)을 금지대상으로 분류한 의장안 발표('08. 7)

고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환경개선, 구조조정, 어업인·어촌 복지 증대 등을 목적으로 발굴한 정책이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어업인 경영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자원보전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의 수산직불제 사업 6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08년 어업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세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D/B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연계된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을 위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9년 수산분야 직불제 관련 예산은 2008년도 524억 원 대비 18% 증가한 616억 원으로, 이는 어선사고 등 재해로 인한 보상 등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보험,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표 3-44> 수산분야 직접직불제 예산 현황

(단위:억 원, %)

사업명	2008년	2009년	'09년/'08년	비 고
계	524	616	117.6	
FTA피해보전직불	51	15	29.4	
FTA폐업지원	80	90	101.1	
수산물재해보험	26	26	100.0	
어선원 및 어선보험	265	364	137.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72	70	97.2	
친환경어구보급	30	49	163.3	
조건불리지역보전	-	2	-	연구용역비

다) 향후계획

현재 기존사업인 수산물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친환경어구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직불제를 도입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09~'12년까지

60억 원을 투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 등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농촌사회과 사무관 이태용, 이명남, 김춘기, 하지은)

가) 시행배경

주5일 근무제 실시, 교통망 확충, 노령연금의 정착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농촌체험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이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도농 교류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농산물직거래로 활력이 넘치는 체험·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행사를 통한 농업·농촌 가치홍보 등으로 설정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2~2009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442개를 조성하였다.

농촌체험마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인1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 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

한 보험가입을 지원(147개 마을)하였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에 27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농산어촌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지역 주민, 공무원,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녹색농촌체험마을 동기화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전원생활체험과정, 농촌마을종합개발 집체·순회교육 등 15개 과정으로 8,3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농촌주민 스스로 아름답게 가꾼 마을을 평가하는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내 고향 잠재 자원 개발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농촌마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3㎡이하의 주말주택 및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도농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농어촌생활·체험기 공모, 도농생활체험캠프, 도농교류유공자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1사1촌 운동은 농협과 전경련 등 민간주도로 기업·단체와 농촌마을 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범국민운동이다. 2009년 12월말 현재 7,712건의 1사1촌 자매결연 체결로 농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606억 원 수준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져 도·농간 교류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소, 천 명, 억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조성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누계	76	123	190	274	364	442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930	990	1,340	1,580	2,810	3,626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매출액	94	111	183	233	374	445

다) 향후계획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9년 78개(총 442), 2010년 74개(총 516)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 간 연계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10년 3,740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할 것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개선한 종합컨설팅 자문 및 세무자문 신설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 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 운동,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어촌생활·체험기 공모,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2008. 6) 중이며 동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계획」을 '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동홍)

가) 시행배경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다양한 농촌자원의 산업화 정책 추진으로 농업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는 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던 낙후지역 신활력지역지원 사업을 관계부처 합의(2006. 8)를 거쳐 농림부로 이관(2007. 1)하였고, 2009년도부터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신활력지원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등을 “농촌활력증진사업”(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통합·체계화 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향토자원의 발굴·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2007~2008년도에 시작한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지원은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2009년도 신규 사업 지구부터는 개소

당 지원규모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지역단위의 혁신역량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실현에 중점을 둔 목표관리 방식의 사업추진체계로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선도 산업 마케팅, H/W 보완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향토·특화·문화·관광자원 등)을 개발하여 1·2·3차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9년도에는 관련예산(국고) 3,291억 원을 142개 시·군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시·군단위 「농촌활력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표 3-46> 농촌활력증진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2008	2009
○ 농촌활력증진사업(국고)	(3,474)	3,291
- 신활력지원 사업	1,882	(1,882)
- 향토산업육성사업	90	(136)
- 특화품목육성사업	1,502	(1,273)

※ 향토산업육성사업비 중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 편성된 예산 제외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당 3년 이내에 총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30개소를 신규로 착수, 개소당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47>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사업량(개소)	79	19	30	30	※ 목표: 2013까지 200
예산(억 원)	419(269)	43(43)	90(90)	286(136)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분 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지원

아울러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202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동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2009년 6월에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회 농어촌산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다) 향후계획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을 위해 2010년도부터는 종전의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여 종전의 농촌활력증진사업 중 “신활력지원 사업”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군 중 “일반농산어촌기초생활권종합개발사업”으로 통·폐합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과 “특화품목육성사업”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도중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2010~2014)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포괄보조사업군 내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3년까지 200개의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0개소씩 신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발전연구원,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향토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컨설팅 전문가에 의한 일시적 모니터링·컨설팅 지원에서 상시 모니터링·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농공단지 조성

(지역개발과 서기관 이낙휘)

가) 시행배경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3-48> 부처별 지원 현황

부처명	지원내용	관련법
지식경제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토해양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신규 사업 15개소, 계속사업 35개소 등 53개소에 598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09년 말 현재 339개소를 조성(완공)하였다. 또한,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하여 전문단지 기준완화,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166만m²→200), 입지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09년 말 현재 5,63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239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23천여 명, 생산액 26조3565억 원(업체평균 73.4억 원), 연간 수출액 90억35백만 불(184만1천 불) 등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 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목표도 조만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가 신규 단지 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노후단지의 기능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개발보다는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가) 시행배경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의 발달,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WTO·DDA, FTA 진전과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촌지원방안

강구 및 어업의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고, 또한 생산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을 관광 자원화를 통해 어업의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표 3-49>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자체	2001년 ~2013	731억 원	112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소,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관광모델 개발사업	지자체	2004년 ~2013	1,040억 원	18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주차장, 해안산책로 등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어촌체험마을조성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체험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조성(총사업비 731억 원)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북 고창 하전 등 전국 102개소에 681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주도의 참여식 관광으로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표 3-50>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년 까지	102	2	5	9	9	8	4	31	7	18	9
2010년 계획	3	-	-	-	-	1	1	-	1	-	-
장래조성계획	7	-	-	1	-	2	1	-	2	-	1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2) 어촌관광모델개발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간형, 어촌관

<표 3-51>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사업별	목표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어촌체험	사업량	112	76	11	8	7	3
마을조성	사업비	73,110	49,722	8,100	5,988	4,300	2,100
어촌관광	사업량	18	(5)	2(8)	1(11)	2(8)	4(6)
모델개발	사업비	104,025	9,075	24,244	15,964	14,268	10,088
							30,386

※ ()은 계속사업

<표 3-52> 어촌관광모델개발 사업내용

구분	어촌·어항복합공간형(I 모델)	어촌관광단지형(III 모델)
개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기간	• 6개년(2004~2013)	• 6개년(2004~2013)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 지자체
대상지역	•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 연안에 국가어항이 없고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어촌
사업대상지	• 7개소(20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11개소(20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규모	• 7개소 1,089억 원 - 개소 당 150억 원 - 기본·실시설계비 29억 원	• 11개소 702억 원 - 개소 당 60억 원 - 기본설계·홍보비등 36억 원

광단지형 등 2종의 시범사업으로 어촌관광 모델개발 18개소 선정,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0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9년도까지 기본설계용역 17개소를 완료하고 635억 원을 투자하여 16개소(5개소 완료, 11개소 진행 중)에 대한 시설 투자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2001년부터 추진해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어촌어항관광개발을 통해 어민들의 어업외 소득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촌 체험마을조성은 2013년까지 계획된 I 단계 112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조기완료하고 II 단계 추진대상마을을 선정하여 개발함과 더불어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관리중심으로 개선하며, 어촌관광모델개발도 2013년까지 18개소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증대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와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1)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가) 시행배경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루사(2002)”, “매미(2003)” 태풍으로 255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재해 발생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이자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파비·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농

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의 거대재해 위험(손해율 180% 초과)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그간 태풍 “루사(2002)” 및 “매미(2003)” 등으로 약 3만 9천여 농가에 2,06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다. 2009년도에는 2008년의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밤·참다래·자두·고추·양파·콩·감자·시설수박” 15개 품목에다 품목개발추진단 등에서 연구·검토한 농작물 중 농업인의 보험수요 및 전업화 정도, 생산액 수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5개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수차례 도상연습만 하였던 “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로 재해보험 확대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벼 재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도 대상재해에 포함시켜 1차년도 가입목표(보험료 35억 원)대비 102.3%를 달성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50%, 보험사업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8년 대비 0.6%P 낮은 5.54%로 인하하여 보험가입률을 2008년 대비 2.9%P 증가한 31.4%로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표 3-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농가가입 기준으로 전년대비 41.0% 증가한 45,884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08년 26,037ha에서 2009년 48,381ha로 가입률 31.4%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2009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었으나, 이들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처별·과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시설 등 농어업 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표 3-53>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상품목 ⁵⁾	6	7 (뽕은감 추가)	10 (밤·참다래· 자두 추가)	15 (콩,감자,고추,양 파,수박 추가)	20 (벼,고구마,옥수수, 마늘,매실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26,335	27,419	29,174	32,538	45,884
	가입면적(ha)	20,301	21,466	23,661	26,037	48,381
	가입률(%)	23.4	24.5	26.5	28.5	31.4
지원 규모	순보험료(%)	61.2	58.4	55.6	52.8	50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49,371	50,783	49,280	49,063	53,351
지급 보 험 금	지급농가(호)	5,877	5,171	7,274	3,383	8,734
	보험금	23,871	21,112	61,464	24,932	66,176
	손해율(%)	43.5	36.6	110.4	45.0	105.8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국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전면 개정('09.3.5)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 향후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2009년까지 51천 농가에 2,97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대상재해의 지속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가입률 및 보험규모면에 있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3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1년 이후에도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로 소규모로 사업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과는 별도로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보험대상에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상재해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야생동물피해·화재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5)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홍근형)

가) 2009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1) 시행배경

최근 농업이 규모화 되면서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FTA진전,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부채구조에 처해 있다.

특히 2009년에는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2조원)의 상환기일이 집중 도래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27일 공포·시행되었으며, 이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농어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 부채경감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04~'05년까지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04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 셋째, '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 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넷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부합산 연간 급여

총액이 31백만 원 이상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기한부예·적금이 1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지원 대상 제외된다. 동 대책의 시행으로 13만여 농어가에서 향후 5년간 1,300여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추진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2009년에는 2,009억 원)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3) 향후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0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2.9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1) 시행배경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3년 시범사업 이후, 2004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을 1년 이상 연체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특별재난지역의 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토록 되어있는 것을 자산 대비 부채비율 기준으로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제외토록 하는 등 심사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08.12월)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는 지원 실적이 점차 증가하여, 당초 지원계획 2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0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 경영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소득분배 왜곡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9월에 농업인당 지원한도를 10억 원(농업법인 15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3) 향후계획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통해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자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은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3%)으로 바꿔줌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2009년은 46억 원)해 주었다.

향후 지원 실적 등을 보아가면서 지원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 산림 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철중)

가) 시행배경

1998년 이후 대형 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산림피해 규모가 대형화되어 임업인의 경영 불안의 주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해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추진

2002년도에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학계·임업계 및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 표준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산림재해공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산림의 공익가치 환원 측면에서 대기정화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숲 가꾸기 등으로 증가되는 탄소흡수가치를 평가하여 산주에게 상당가치 지원하는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추진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보험품목 확대 계획과 적극적인 의지로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 중에서는 최초로 뽕의 감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주산단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보험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중 소득비중이 높고 보험 필요성이 높은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표준수확량과 손해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 연구는 밤 주산단지 중 3개 지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주산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54>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입가, ha, 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입가수	면적	보험료	입가수	면적	보험료	입가수	면적	보험료
뚝은 감	446	242	286	830	481	589	1,313	614	622
밤	173	644	86	126	451	70	51	221	29

다) 향후계획

임산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를 위하여 2008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대추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상품개발을 추진,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주산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복분자 등 임업분야의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제 4 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 산업

가. 제도 개선

(식량정책과 사무관 송태복)

1) 시행배경

WTO 출범 이전에는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WTO농업협정의 국내보조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DDA농업협상 이후에도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쌀 생산량은 4,916천 톤으로 전년(4,843천 톤) 대비 1.5%(73천 톤)감소하였으나, 연이은 대풍으로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되었다. 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양곡연도말 국가 전체 재고는 1백만 톤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정부는 재고 적정유지를 위해 '05~'08년산을 가공용으로 처분하고 있는 등 재고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2004년 쌀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은 2005년 225천 톤에서 2014년 408천 톤까지 증량되고, 그 중 소비자시판은 2005년 TRQ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증가되는 등 외국쌀의 국내 유통물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DDA·쌀협상으로 식량정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2005.7.1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제도를 전환하였다.

한편 기존의 쌀 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어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2005. 7. 1 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쌀값 하락 시에도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 쌀 판별능력이 부족한 점과 밥쌀용 소비자 시판 등을 감안, 음식점 양곡표시제도 강화 등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수입쌀의 경우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 운용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우리 쌀 소비문화를 정착하였다.

3) 향후계획

2005년 양정개혁 이후 제도운영 시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쌀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쌀직불제 개편, 비용절감 등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화 방안과 함께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및 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수급조절방안 및 생산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 쌀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재고미 처분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나. 효율적인 수급조절

(식량정책과 사무관 송태복)

1) 시행배경

2009년 쌀 생산량은 4,916천 톤으로 전년(4,843천 톤) 대비 1.5%(73천 톤) 감소하였으며, 소비량은 4,792천 톤 수준으로 양곡년도 말 총 재고량은 995천 톤 수준이며 이는 적정 비축재고를 275천 톤을 초과하였다.

한편, 2004년 쌀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은 2005년 225천 톤에서 2014년 408천 톤까지 증량되고, 그 중 소비자시판은 2005년 TRQ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증가되는 등 외국산 쌀의 국내 유통물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2005년도가 양정제도 개편 첫 해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농업인의 수확기 벼 판매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확기 시장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44천 톤 많은 576천 톤으로 확대하고 비축물량외 144천 톤 추가매입·격리조치, ② 2006년 정부 일반공매 지양 공표,

③ 2004년산 지역농협 재고(92천 톤)를 시장으로부터 격리 ④ 공공비축 물량 중 산물벼를 농가 희망에 따라 포대벼로 전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6년에는 공공비축제의 연착륙을 위해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다. 산물벼 매입방식을 포대벼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정산토록 하였고,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매입가격을 수확기 전국평균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RPC의 산물벼 인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수하되 포기시 정부 인수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급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수급상황을 알려주는 한편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의 조기 확정발표 및 홍보로 농업인들이 수확기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공공비축 매입물량 축소(2006. 504천 톤 → 2007. 432천 톤)를 감안하여 산물벼 매입물량을 축소하였으며,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톤백 매입사업을 시범 실시(전국 8개소)하고, 출하버 샘플검사를 도입, 검사 대기시간을 감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8년도는 향후 3년 간 적정 공공비축 물량을 재조정하여 비축규모는 720천 톤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08년 400천 톤, '09년 370, '10년 340으로 확정하였다. 2008년도는 태풍·집중호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520kg/10a, 484만 톤이 생산되었고, 2009년도는 2008년 대비 8만 톤이 더 증가된 492만 톤(534kg/10a)이 생산되는 등 사상 최대의 풍년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역계절 진폭이 발생되어 수확기에 높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한 유통업체는 많은 경영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산은 2009년 8월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였으며, 2009년산은 수확기 34만 톤, 이듬해 5월 20만 톤, 금년 수확기 직전 26천 톤을 격리하여 쌀값을 안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격리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수확기 직전인 9.25일 128.408원/80kg까지 하락하였다.

3) 향후 계획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 받은 1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쌀이

외국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함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종합대책에는 쌀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제도화, 쌀가공산업육성, 쌀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홍인기)

1) 시행배경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8년 말까지 총 6,655억 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1,123개소를 설치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전환하고 사업량을 2005년에 50개소에서 2006년도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단가도 4.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율도 30%에서 40%로 변경하는 등 지원조건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우수 RPC 및 구조조정 RPC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 RPC에는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조기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특히 2006~2007년 2년 간 시범 추진 후 시행된 수탁판매사업을 통하여 수확기 쌀 농가의 판매방식 다양화를 통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09년까지 26개소를 육성한 바 있으며, 2019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대표브랜드 쌀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1) 시행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율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 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2007년도까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첫째로 화학비료 사용 억제 및 유기물 시용을 확대하고, 둘째로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 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개발하고, 셋째로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확대, 넷째로 적기 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지도·홍보하고, 다섯째로 농가와 RPC(미곡종합처리장)간의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여섯째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단위 평균적 개념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쌀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들녘·품종별 차별화·정예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녹비작물 재배 확대,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확대(100%) 등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최고 품질 품종(7개)을 육성하고, 셋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50%까지 확대하고, 넷째, 적기 이앙,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대 고품질 쌀 생산·재배기술을 조기 정착하며, 다섯째, RPC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 및 확충하고, 여섯째,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육성 추진 및 쌀 품질 표시방법 개선,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로 소비자 신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쌀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100ha내외의 면적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모델 육성사업을 신규 사업(12개소)으로 추진하였다.

3) 향후계획

그 동안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신뢰확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측면에서는 쌀농가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는 쌀농사 경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4-1]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마. 쌀 소비 촉진 전개

(식량정책과 서기관 이주영)

1) 시행배경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2001년까지 연이은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미래의 쌀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충격 완화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쌀 중심 전통식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쌀 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유명축구선수와 방송 아나운서, 문화계의 대표적인 장인 등을 러브 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TV-CF 공익광고 등을 방영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한 러브 미광고로 젊은 층과 주부들에게 우리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러브 미로고가 국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러브 미 홍보는 2002년 정부업무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대한민국 광고윤리대상 우수상, 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러브 미 공익광고와는 별개로 시중유통 고품질브랜드 쌀 평가, 농촌체험캠프 실시 등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2008년부터는 밥 중심의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식문화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창출이 필요하여 「우수 쌀 가공제품 Top10」을 선정하고 생산자에게는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이 필요하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변화 및 소비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40대 이하 젊은층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쌀 소비 촉진 100인 서명운동 참가자 DB를 활용한 지속적인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동안 TV 등 방송 매체와 오프라인 홍보에 치중하였으나, 온라인 시장에 대한 홍보는 수많은 인터넷 세대와 전파성을 고려할 때 매우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라 생각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G마켓과의 쌀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 업무협력 MOU를 체결(08.10.17)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떡볶이산업 육성대책을 수립('08.11)하여 떡볶이산업페스티벌 개최(10.5.7~9)로 47천여 명 관람과 387건의 상담실적 등 산업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3) 향후 계획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브랜드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12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또한 2040세대의 아침 밥 먹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위젯을 이용한 홍보와 11월 11일이 청소년들에게 ‘빼빼로 day’로 알려져 있으나, ‘가래떡day’가 우리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쌀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채소산업

가. 노지채소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김도범)

1) 시행배경

노지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채소수급안정 사업은 시행 초 무·배추 품목에서 고추, 마늘, 양파, 당근, 감자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다.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협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 현재 채소생산량의 10% 수준인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2017년까지 24%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사업 주체를 사업농협중심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9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3,774호 및 모니터 요원을 1,79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조금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적립한 자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였고, 시행 초년도 2개 품목이었던 것을 2009년도에는 2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3) 향후계획

또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이 우수한 생산자단체에는 사업비 배정에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을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자조금 품목 및 단체수를 늘려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제도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시설채소

(채소특작과 서기관 박희수)

1) 시행배경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의 기반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시설채소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향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화에 따라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기 지원된 시설원예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전문가를 통한 시설원예 작물재배 및 관리 기술·경영 정보 제공과 더불어 현지순회 지도 등을 통해 시설원예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46종의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및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비닐하우스 34, 인삼재배시설 10, 버섯재배사 2)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난방을 하는 시설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9년부터 고효율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유류 사용이 줄어들어 경영비 부담 완화와 함께 온실가스 절감 등 환경 친화적 시설농업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수출선도조직을 평가하여 수출물류비 및 인센티브, 조직 운영비 지원과 함께 수출 농식품 안전성관리 종합대책(2008. 9)을 마련하

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2010년부터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열 및 목재 펠릿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바이오 메스 등 지속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의 활용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국내 시설원에 농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3. 과수·화훼산업

가. 과수산업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기주)

1) 시행배경

과실류는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03년 이후 소폭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과수농가 200천호 중 전업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22.5천호인 11.2%이며, 대부분이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7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과실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국산과실의 소비는 과채류 등과의 소비대체로 정체상태인 반면 과실수입은 증가하여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 낮은 밀식사과원조성 등 생산시설 현대화와 저온 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2004년부터 한·칠레 FTA체결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과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7년간 FTA기금 1조2천억 원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조직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주요 이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

화사업비 606억 원(4,030ha)을 지원하였고, 과수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비 87억 원(540ha)을 지원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과실생산의 근간인 묘목에 대해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않을 묘목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고품질과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사업비 24억 원(11개소)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을 높이고,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09년에는 거점산지유통센터 6개소(사업비 379억 원)를 준공하여 지금까지 총 15개소가 완공되어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과수농가 경영안정 사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서 재배농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을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5,812ha에 대해 폐업지원금 2,377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폐원하고자하는 경우 나무제거비 등을 지원하는 과수원정비지원 사업비 193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386ha를 정비하였다.

3) 향후계획

2010년도에도 FTA·DDA 등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보완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경쟁력제고 대책과 유통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588억 원을 지원하여 3,270ha 규모의 과원에 대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의 생산을 유도하고,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비 132억 원을 지원하여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묘목 공급을 통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수우량모목 지원 사업비 10억 원(8개소, 56ha)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과실브랜드 경영체 24개소를 육성해 나가고, 과실류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화훼산업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을수)

1)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로 화훼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몇 년간 화훼 소비 및 생산규모는 정체상태로 정부에서는 화훼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산 신 품종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낙후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선진 유통체계 도입 및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통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화훼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국내 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가·민간 분야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수한 국내품종 종식 및 시장점유율 향상을 위해 우수품종종식보급사업(화훼종묘보급센터)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진청에 로열티대응 연구단을 두고 '17년까지 장미 보급률을 40%로, 국화는 50%를 목표로 현재 운영 중이다.

<표 4-1> 우량 품종 개발 및 보급 현황

구 분		장 미	국 화	난
'06~'09 품종개발		60	66	37
보급률 (%)	2006년	1	1	-
	2009년	13	12	2.6
주요 우량 품종		펠레드	백마	피플스타

자료 : 농촌진흥청

또한, 조직화·규모화된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노후시설 증개축 및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겹보온 커튼, 지열 히트펌프, 고효율 난방기 등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시설지원으로 생산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 협소하고 노후한 경매시설을 확장하고 현대화함으로써 반입물량을 신속히 분산하고 출하농가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훼공판장경매시설확장사업('08~'09)을 추진하였으며, 공영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처리능력 확대를 위해 '98년부터 소비자유통활성화사업(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절화류의 수확 후 선도 및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습식유통 시스템 정착을 위해 '10년부터 장미(절화)에 대해 습식유통체계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로, 생활 속에서 이용 가능한 꽃 장식 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생활 플라워디자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꽃 사랑 정서 확산 등 꽃 소비촉진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09년도 미스코리아(3명)를 '꽃 사랑 이웃사랑'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꽃 생활화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꽃 가꾸기 교실' 및 '꽃꽂이 교실' 등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 꽃 소비고객을 육성하고 있으며, 생활속 꽃 이용 확대를 위한 '사무실 꽃 가꾸기 시범사업' 및 '꽃 길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넷째로, 연중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수출업체(수출선도조직)를 육성하고,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중심으로 조직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원예브랜드사업)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재배시설 견학 등 상품 우수성 홍보 및 해외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화훼 생산·수출국에 대한 시장정보 수집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3) 향후계획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꽃을 가꾸고 즐기려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화훼 소비확대 등의 화훼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꽃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화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 화훼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화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 우수한 국내품종 개발 육성 및 농가보급 촉진, 집단화된 화훼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분야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전국 3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선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유통효율성 증진을 위한 현실에 맞는 화훼류 표준규격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꽃의 생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화원의 역할 확대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화훼 신상품 개발 및 관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절화중심의 수출에서 분화, 자생화 등으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일본 위주의 수출에서 러시아, 중국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개척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축산업

가. 한우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홍식)

1) 시행배경

한·미 FTA 등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추진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와 향후계획

가)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165만 원으로 인상하여 2009년에는 140천 농가, 1,068천 두가 가입하였으며, 2009년도 6월 가입 암소 사육두수 대비 약 99.4%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브랜드경영체 등에 7개소의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시작하여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송아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였다.

한우의 번식기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은 2017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나)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 체계 구축,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 유전자 보호 및 부정유통시비 방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는 한우판별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762천 두를 판별하였다.

또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도 중점 추진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0개 한우 브랜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중 광역 브랜드는 12개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로 품질이 높고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는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한육우 98천 두와 돼지 267천 두에 품질 고급화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2008.12월에 수립된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대책으로 한우암소개량사업 도입 및 고능력 한우 암소개량센터를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조사료 단지 조성, 송아지 설사 및 유사산 질병 예방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우산업 조직화로 시군 지역별로 한우사업단 162개를 인증하였으며 시도 단위 광역사업단 9개소 및 대형축산물가공유통업체 육성 등 농가조직 중심으로 정책사업 지원체계를 개편 추진하였다.

아울러,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확대 대책은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 직거래 장터, 브랜드가맹점 등 직거래 확대,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공표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2010년도는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쇠고기생산성향상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계획이다.

다) 소비홍보 및 산지 소값 안정대책

한우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지원 상한액인 9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촉진과 교육·홍보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TV광고 제작·방영, 통화연결음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유통감시단 설치,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2009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08.7월) 및 쇠고기 이력제('09.6월)의 전면 시행으로 쇠고기 소비가 늘어 산지 소값이 한·미 FTA 협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

였고, 이에 따라 사육두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나. 낙농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성주)

1) 시행배경

전국적으로 생산조절제도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수급문제가 점차 해소됨에 따라 낙농산업의 핵심과제인 우유수급균형이 점차 실현되고 있어 전국적인 수급조절체계 구축 등을 위한 근원적 제도개편의 적기가 도래했다.

또한 현행 원유 수급체계가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유업체 직접집유 등 다중구조로 되어 있어 주체별 수급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업체의 경쟁력에 따라 제기되는 소속농가 형평성 문제의 해결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외적 환경으로는 FTA·DDA등 수입개방에 따라 낙농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개방에 따른 가공유제품 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은 전국적으로 2,110천 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889천 톤은 원유로 직접 사용(백색시유 1,397, 가공시유 172, 유제품 320)하고 나머지 221천 톤은 분유로 가공한 후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표 4-2> 우유 수급상황

(단위: 만 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생 산	254	237	226	223	218	219	214	211
- 수 요	309	304	311	308	312	310	304	311
· 시 유	150	163	161	154	156	158	158	157
(백색시유)	(131)	(139)	(135)	(132)	(136)	(138)	(138)	(140)
· 유 제 품	159	141	150	154	156	152	146	154

한편, 낙농가의 유질개선을 지도하여 공장 도착 시까지 고품질 원유가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세균수 1등급 비율은 98.1%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유지방 역시 4.01%로 위생 및 유질 측면에서도 향상되었다.

낙농자조금 사업으로 우유음용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반영했으며 전국적으로 유아, 주부, 노인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유 관련 교육체험 행사를 통해 우유의 가치 증진 등 국민들에게 우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작년부터 실시한 낙농체험관광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국에 체험목장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우유와 낙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농체험목장을 학생들의 우유급식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 우유음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 양극화를 해소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우유급식 학교 수를 확대하여 청소년기의 우유음용 습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였다.

<표 4-3>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단위 : 천 명, 천 톤)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학교우유급식 학생수	3,686	3,867	3,938	3,768	3,849
유상급식	3,407	3,493	3,520	3,328	3,463
무상급식	279	374	418	440	386
연간 원유 총생산량(A)	2,229	2,176	2,188	2,139	2,110
연간 백색우유 소비량(B)	1,326	1,363	1,381	1,385	1,397
우유급식 연간 소비량(C)	141	149	152	146	148
대비율					
백색우유 대비 (C/A)	10.6%	10.9%	11.0%	10.5%	10.6%
생산량 대비 (C/B)	6.3%	6.8%	6.9%	6.8%	7.0%

또한,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우유급식 담당공무원 연찬회,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부대행사로 초·중고등학생 참여 경연대회,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유업체의 자율적인 학교우유급식발전사업비 거출(0.5원/팩)을 통해 지속적인 우유급식 확대 및 홍보 실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표 4-4> 최근 3개년 우유급식률 변화

(단위 : 천 명,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초	3,077	77.8	2,996	76.8	2,889	78.4	2,798	80.5
중	483	23.6	567	27.6	518	25.4	622	31.0
고	285	16.3	353	19.5	339	20.6	416	21.2
특수	22	95.3	22	96.1	22	97.2	18	76.3
계	3,867	49.8	3,938	50.5	3,769	51.0	3,854	51.6

소비자 기호 변화, 미국·EU 등 낙농 선진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유 생산·공급체제 구축, 유통비용의 절감, 사료 자급기반 확충, 낙농경영의 체질 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낙농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가) 장기적 수급안정을 위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FTA 등 시장 확대라는 대외 환경과, 다중구조로 되어 있는 원유수급체계의 불안요소 등 대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유수급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낙농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낙농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기초식량자원으로서의 낙농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증가로 국내생산이 감소하더라도 최소한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낙농산업종합대책 주요 내용

이를 목표로 첫째,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집유주체별 계약생산제를 보완하여 전국적인 쿼터운영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연간 20만 톤 규모

의 가공원료유를 국제경쟁가격에 공급함으로써 FTA에 따른 생산감소 피해를 완화해 나갈 것이며 낙농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낙농기구를 설치하여 수급조절 제도, 가공원료유 관리, 쿼터뱅크 등을 운영토록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우유급식을 확대하여 시유 소비를 늘리고 미래의 소비층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신규 유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계층을 다양화하고, 낙농체험목장, 목장형 유가공사업, 낙농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확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로 젖소개량 추진 등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국산원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3) 향후계획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유업체 등 각 이해주체가 서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무T/F 회의 등을 통해 쟁점을 최소화하여 최종 합의를 통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양돈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

1) 시행배경

FTA 등 대외개방 확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유류비 상승, 분뇨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돈 의무자조금 정착,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 돼지고기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양돈산업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09년 12월 현재 959만 두로 작년 동기 909만 두에 비해

5.50% 증가 하였으며, 양돈농가의 경영여건은 좋지 않으나, 국내산 선호도 증가 및 원산지표시 강화 등으로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양돈농가수는 8.0천호로 전년 동기 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산지가격은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3~9월)와 비수기(10~12월)로 구분되어 가격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국내산 선호도 증가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월별 산지가격은 큰 폭의 등락 없이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였다.

수입개방(1997) 이전에는 수매를 통한 수급조절이 가능하였으나 수입개방 이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매 추진이 어려워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양돈자조금과 자율수급조절 사업을 통하여 돼지고기 소비홍보 확대,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돼지고기 수출 추진

'00년 이후 구제역(2000, 2002) 및 콜레라(2003, 2004) 발생으로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중단되고 돼지고기 수급불안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8월에 제주지역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고 내륙지역 열처리가공장 2개소가 일본정부로부터 승인받아 '09년 9월에 9년 만에 일본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리핀, 홍콩, 대만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값이 저렴하고 동남아국가에서 선호하는 부산물(스킨, 지방, 간 등) 등을 수출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주요 수출대상국 검역관 및 수입업체 초청 시찰, 돼지고기 열처리가공품 수출을 위한 시설자금을 수출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서도 해외시장 수출다변화를 위해 수출국 현지 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비 등을 지원하고, 러시아, 대만, 몽골 등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3) 향후계획

정부에서는 생산에서 가공·판매단계까지의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 농가를 선발하여 일반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연구과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돈농가별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일화작업과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돈농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열처리공장 22개소를 육성하여 일본을 비롯한 홍콩, 필리핀, 대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 양계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변동주)

1) 시행배경

2010년 9월 양계 전업규모(3만수이상) 농가는 1,811호로 전체 사육농가 3,537호 대비 51% 수준이며 사육두수 점유율은 81%로 규모화 및 전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2009년 닭고기 소비량은 약 47만 톤이며 이중 수입량이 7만 톤으로 자급률은 85%수준으로 2000년 80%보다 6% 상승하였다. 주 수입국가는 미국(2만9천 톤)과 브라질(3만 톤)로 전체 수입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9년 닭고기 수출량은 11,472톤으로 베트남으로의 수출증가 등으로 2000년 1,710톤보다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FTA·DD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는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아울러, 품질 관리를 위해 등급판정 실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의무화, 사육·유통 단계 HACCP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닭고기 생산 증대와 유통선진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다이어트 열풍에 따른 가슴살 등 부분육 수요급증과 소형닭 위주 출하로 인한 생산비 가중에 따라 대형닭 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대형닭 생산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사육지침서 발간 및 보급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국내 양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 필요

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열악한 기존 사육시설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8월부터는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2014년 백열전구 퇴출에 대비한 고효율 LED 조명 보급사업 추진, 계사에 지열이용 냉난방 기술 보급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 등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기업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09.6월부터는 양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농가교육,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계 D/B 구축을 강화하여 농가경영안정 및 양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양계산업은 과학이 바탕이 되어 종계 품종개량, 사양관리 등의 연구·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나, 육계 계열농가와 계열주체 간의 상생협력 문제, 생산비용 절감, 계란의 위생문제 등 양계산업의 현안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가 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상호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수농가선발 대회 등 생산성 비용 절감대책 추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제 도입 및 표시기준 강화 등 계란의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방안

(축산정책과 사무관 우만수)

1) 시행배경

국제 사료가격 상승 및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국내 부존사료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조사료 공급을 위하여 논을 이용한 하계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소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수요가 늘어 공급량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09년도에는 조사료 공급량이 520만 톤 수준이다. 이중 목초, 사료작물, 볏짚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은 4,373천 톤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수입산은 830

천 톤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09년도 조사료 자급률은 84%에 달해, 전년도(81.3%)보다 2.7% 증가하였다.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 강화 등으로 유희농경지 이용이 증대되어 조사료 재배면적은 '08년 대비 24.9% 증가한 241천ha이다. 다만, 초지면적은 경지의 전용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9년도에는 '08년보다 700ha 줄어든 40.1천ha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장거리 유통비, 기계·장비 구입비, 종자구입비, 볏짚 처리비, 조사료 가공시설 등 예산 지원을 '08년 414억 원에서 '09년도에는 8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겨울철 유희(논·밭)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의 일환으로 국내산 사일리지 품질균일화 및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종·축산농가의 상호신뢰 회복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사업비 지원 단가를 유가(油價) 및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일리지 제조비는 '08년 50천 원/톤에서 '09년도 60천 원/톤(기금 60%, 지방비 40%)으로 경영체에 지원하는 기계·장비 지원 한도액은 130백만 원/30ha에서 150백만 원/30ha(기금 40%, 지방비 40%, 자담 20%)으로, 장거리 운송비는 40천 원/톤에서 60천 원/톤(기금 50%, 자담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사료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하계 사료작물 재배시에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20천 원/ha)을 신설하여 조사료의 연중공급체계 구축하였다.

국립종자원과 농협중앙회의 주관으로 다수확 우량 청보리 전용품종 종자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1년도까지는 전체 소요량을 생산·공급하며 부족 종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채종포를 설치하여 최대한 청보리 종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를 위하여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3) 향후계획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의 확대 및 자급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다수확 우량품종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조사료 연중 공급체계 구축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이용 하계 사료작물 재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산 조사료의 유통활성화,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하옥원)

1) 시행배경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축산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 등에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9년 말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의 98%가 설치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08년에 664억 원에서 2009년 754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비 : ('07) 424억 원 → ('08) 664 → ('09) 754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개정

그 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으나, 가축분뇨를 오수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9)'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규칙(2007.11)'을 제정

하였다.

동 법령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해 액비부숙기간(6개월 → 4), 액비살포 의무면적(640㎡ → 300) 및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200m) 등을 완화시키고, 액비살포 가능지역 확대(골프장·임야 추가) 등 제도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4억 원 이내에서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법인 등 조직체에 대하여는 2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0,454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액비저장조를 930기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26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밀집 사육지역, 중규모(1~3천두) 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직체에 대하여 1일 100톤 처리 기준으로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70개소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07) 5개소 → ('08) 19 → ('09) 39 → ('11P) 70

라)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축사·가축분뇨처리장 등에서 악취제어·관리기술,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작물별·계절별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IT를 이용한 개별농가 및 국가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기술 개발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비료성분, 부숙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도록 액비의 '품질검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의 제조업 등록 의무화 및 액비유통센터는 분기별 액비성분 분석결과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숙이 덜 된 불량액비의 유통 및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환경분야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구성·운영하고, 악취 발생시 소비자 신고가 용이하도록 액비운반·살포차량 실명제 실시 및 표시간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안전위생과 수의사무관 강대진)

1) 시행배경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 사육부터 최종 판매 단계에 이르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홍보자료 배포(상반기) 및 전국 4개 권역별 순회교육(하반기) 등을 통하여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규칙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닭농장에서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로써 농장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 명실상부한 일관적 HACCP 시스템(Farm to Table HACCP system)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성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가들과 몽골의 축산물 위생 전문가 20여 명을 초청하여 HACCP 제도운용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HACCP 담당기관(축산물HACCP기준원)을 2008년 6월 법정법인으로 재탄생시키고 심사전문인력을 68명으로 보강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도축·가공 단계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경우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총 139천 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25두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검출율 0.16%)되었다. 이는 2008년도의 잔류물질 검출율 0.17%에 이어 축산물의 안전성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축장별로 매주 1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오염의 지표가 되는 살모넬라균의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72천 건의 시료 중 523건(0.3%)에서 권장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물 유통단계에서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어, 총 76개소의 판매점 및 보관장에서 HACCP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닭·오리 고기의 유통과정 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한 포장유통 의무화 조치가 2008년에는 일일 5만 수 이상 닭, 오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싸고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BSE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립불능소의 도축에 대해 우려 섞인 견해가 다수 제기되었기 때문에 2008년 5월부터는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해 BSE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식용으로 판매를 허용하였으나, 2009년 11월부터는 부산, 난산, 산육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한 원인으로 발생한 기립불능소에 대해서는 모두 도축을 금지하고, BSE 검사를 거친 후 폐기하고 폐기한 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아울러, BSE가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만을 소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던 종전의 제도를 확대하여 소 사료를 생산할 때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국내에 BSE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제기구(국제수역사무국, OIE)로부터 인정받아 BSE 통제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구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계획

2010년도에도 가축 사육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더욱 감축하여 18종에서 9종으로 줄일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축산물 HACCP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도에도 23명의 심사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농장 및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내성률 감소를 위해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축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더욱 감축하여 18종에서 9종으로 줄일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사육단계 HACCP 적용으로 항생제의 사용절감, 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사육단계의 HACCP 적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축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의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립불능 상태의 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BSE 우려를 감안하여 부상 등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축을 제한하고, BSE 검사 후 사체는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게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수준을 제고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것이다. 검사물량은 잔류물질 120천 건, 미생물 120천 건을 실시하며, 특히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과거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비용을 2009년 18.8%에서 2010년 20%이상으로 높여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 역시 검사건수 증가 등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관리도 강화하며, 특히 식용란의 유통·판매주체에 대해 법적 영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개정하고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 위생감시 및 수거 검사를 확대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사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2008년 법정법인으로 출범하여 HACCP 지정 및 사

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인력을 68명에서 91명으로 보강하여 공공성이 강한 HACCP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 가축질병 방역대책

(동물방역과 사무관 조옥현)

1) 시행배경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에 BSE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별 질병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소독 및 검사 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 소독은 공·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 등을 통해 검색하고 있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 실시로 구제역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002년 6월 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2003년 12월과 2006년 11월에 이어 2008년 4월 전북도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다. 2008년에는 예년과 달리 겨울 철새의 북상이 끝나는 봄철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두 차례(2003년 및 2006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각각 102일간 19건, 104일간 7건이 발생한데 비하여 2008년에는 초기 방역조치 미흡으로 전북, 전남, 경기, 충남, 울산, 경북, 대구, 서울, 강원,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33건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오리에서의 병원성이 매우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운반차량을 이용한 재래시장 및 소규모 중간상인의 이동 등으로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매뉴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으로 11개 시·도(1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전국 규모의 고병원성 AI를 단 42일만(2008.4.1~5.12)에 조기 종식시켜 UN에서는 우리나라를 철저한 방역조치로 AI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지목(2008.6.17)하기도 하였다.

고병원성 AI는 전 세계적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근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 토착화 되어 있으므로 철새와 교역 등에 의한 재유입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AI 재발방지 대책(7. 22)」을 수립하는 등 정책 개선을 통해 강력한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재유입 즉시 검색과 조기 진단에 의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여 AI 발생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 이후 5개월만인 2002년 4월 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조기차단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을 수립('09.1.9)하여 근절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접종 100% 실시, 검사물량 확대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BSE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반추동물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BSE 검사체계를 단순 검사두수에서 2007년부터 OIE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개선하여 2008. 5월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해지하였고 BSE의 국내 발생에 대비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브루셀라, 광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국경검역, 국내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부족해진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인력을 확충,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2006년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433명('08년 132명, '09년 151명, '10년 1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시·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되어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앞으로도 해외 유입질병 및 국내 상시발생 질병 등 가축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등록제 확대 및 농장 출입차량(관계자)에 대한 소독의무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주도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자.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기범)

1) 시행배경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그룹 설치로 시작된 UR다자간 농산물협상은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DDA, FTA, 쇠고기협상 등의 진행에 따라 축산물 수입개방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산물 수입확대 추세와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축산물유통의 표준화·규격화 및 가축개량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축산법에 근거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을 도입하였다. 사업도입 이후 현재까지 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등급화 거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000년)하여 도축되는 전량에 대해 등급판정을 시행하고, 계란(2001년)과 닭고기(2004년)에 대해서는 업체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인 등급판정을 시행함으로써 주요 국내산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유통거래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편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현재 주요 4대 축산물(소, 돼지, 계란, 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축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되어 도축된 후 도체상태로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위생검사에 합격된 도체만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체별로 시행된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도체에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판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유통되게 함으로써 도체의 품질가치가 유통단계 및 소매단계까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의 도소매 가격이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

하였다. 2009년 등급별 가격차등화는 한우의 경우 최고등급인 1++등급과 최하등급인 3등급 간 2,901천 원/두으로 2008년 대비 289천 원이 상승되었으며 돼지는 1+등급과 2등급 간 121천 원/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39천 원이 상승되었다.

이러한 축산물의 품질 간 가격 차등화의 정착은 양축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의욕을 고취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표인 거세율은 한우의 경우 2008년 67.8%에서 2009년 71.1%로 3.3%p, 1등급 이상 출현율은 54.0%에서 56.7%로 2.7%p 증가하였다. 또한 돼지의 경우도 거세율은 2008년 97.5%에서 2009년 97.9%로 0.4%p, 1등급 이상 출현율은 66.9%에서 72.3%로 5.4%p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란과 닭고기의 등급판정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행되며 엄격한 공정과정 심사 결과에 의해 지정된 등급판정시행 작업장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학교 급식법에 납품기준으로 축산물의 등급이 설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판정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계란의 경우 2009년, 27개 시행집하장에서 418백만 개의 계란이 등급판정 되었으며 이는 2008년 판정물량인 346백만 개 대비 20.8%가 확대된 것이다. 닭고기는 2009년 23개 시행 작업장에서 37백만 수가 등급판정 되었으며 2008년 26백만 수 대비 43.9%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계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사업은 축산물의 등급이 학교급식에 이어 2010년부터 국방부 군급식 방침에 의해 군납품기준으로 설정 등 등급판정 결과의 활용도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등급판정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 이후 그 판정결과 및 연계된 가격정보 등을 신속하게 양축농가와 유통업체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축산물의 품질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품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시스템은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시행주체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된 IT인프라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며 등급통계, 출하지원, 확인서 조회, 경락가격 조회, 돈육대표가격, 축산물검수시스템, 부위별 요리방법, 축산물브랜드 등 다양한 축산물생산과 유통정보를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축산물등급판정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이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정보제공시스템(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을 활용하는 이용자수가 월평균 2008년 70만 명에서 2009년 180만 명으로 157.1% 증가하였다.

또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등급판정 대상 품목인 소, 돼지, 계란, 닭에 대하여 등급판정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조사는 축산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동향 변화 등에 맞는 등급제도의 개선, 영농활용 등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실용적 해결과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등급판정사업 현장과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컨설팅 등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 2009년에는 소, 돼지, 가금, 말의 품질평가 분야와 농가수익성 분석, 응취예방백신 투여 돼지의 육질 특성 및 판정현황 등 총 23건의 축산물등급판정 현장 연구조사가 진행되어 활용되었다.

아울러, 축산물등급판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직접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대국민 홍보교육은 소비자 대상 축산업 관련 전시회 3회 참여, 7개 소비자 단체 회원 5,891명,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7,448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이외에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118회, 생산농가 및 대학생 초청 교육 4회, 월간 등급정보지 3,500부 발간, TV 프로그램 PPL광고 3회, TV 프로그램 홍보 3회, 라디오 홍보 2회, 지하철 방송 광고 월간 76회, 농식품부 블로그 게재 2회 14편, 중학교 교과서에 축산물등급제 내용 삽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3) 향후계획

국제적 경제 위기,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내 축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소비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돼지와 소의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고기의 소매단계 등급표시를 점진적으로 유도하여 증가되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며,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등급판정 정보 내에 양축농가 및 유통업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제공이 단절되지 않게 전산장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등급판정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뒷받침하게 할 계획이다.

차. 쇠고기 이력제 추진

(동물방역과 사무관 손경자)

1) 시행배경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이력정보의 전산 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가공·판매 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가) 제도정비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을 지역축협 등 135개소를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 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소의 이력제 등록 및 귀표 부착을 완료하여 이력관리 하였으며, 6월 2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에서도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여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 등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 사업의 조기정착 추진

2009년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 됨에 따라 유통단계 시범 실시를 통해 식육유통업체 등의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제 운영실무협의회를 통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였다.

3) 향후계획

쇠고기 이력제도는 사육 및 유통단계까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육 농가와 영세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이행수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고, 이력제 전산시스템 성능이 낮아 다양한 정보제공, 전산 접속 속도 향상 등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 등록정보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식육유통업체,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DNA동일성검사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검사장비를 확충하여 검사결과의 D/B화로 DNA동일성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며, 단속대상이 많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지자체 등에도 부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력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1년 예산에 이력시스템 고도화

비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통계기능 및 정보제공 기능을 구현하고, 시스템 접속속도 등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리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내산 귀표 개발을 지원·개발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소비자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유통업계 스스로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는 등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카.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

1) 시행배경

축산구조를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육성대책」이 2004년 2월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브랜드 사육 비중이 2004년에 한우가 24.8%, 돼지가 45.0%이던 것이 2009년에는 각각 42.4%, 62.7%로 크게 높아졌다.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는 1단계 브랜드 대책 추진을 통해 기반 형성기를 지나 성장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 성장 단계에 있는 여러 유형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키는데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브랜드 인증, 시설·운영 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 육성으로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 사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브랜드 활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FTA·DDA등으로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 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 11월에 마련되었다.

2008년은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시행 원년으로 ① 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고, ② 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③ 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2009년도는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32개소, 1,140억 원) 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대규모 우수 브랜드에 중점지원 하되, 출하두수 한우 800두, 돼지 80천두 이하 브랜드는 지원에서 제외하여 통합·규모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브랜드 우선순위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처리 사업 등 11개 사업(4,104억 원)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편의 도모는 물론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인증 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2009년 인증 브랜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브랜드 경영체의 재무·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5개소 2억 원),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지원(190백만 원),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4억 원), 브랜드경영체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한 차별화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갔다.

3) 향후계획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국내산 수요 증대를 위한 직거래 기반 확충을 위해 브랜드별 직영 판매시설 지원(12개소, 140억 원)으로 브랜드육 판로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로서 브랜드육 타운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개소를 건립하여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합리적 가격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 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 마케팅시스템을 갖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명품 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컨설팅·교육과 동시

에 브랜드간 협력을 주요 전략 축으로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임업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

1)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임하수)

가) 시행배경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종자의 개발과 이를 건전하고 우량한 묘목으로 육성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목은 농작물과 달리 생장기간이 길어 유전적 우수성이 증명되지 않은 종자와 묘목을 사용할 경우 임목의 생장감소가 수확기까지 누적될 뿐 아니라, 불량한 형질의 임목이 생산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경영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지가 확실한 우수종자를 사용하고, 우량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2008년부터는 산림분야에 신품종 개발 촉진을 위한 품종보호제도와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의 유전자원 관리(이하 ‘산림유전자원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산림용 번식자원 인증규범(CFRM)』에 따른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 종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정착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산림분야는 2008년 3월 1일부터 밤나무, 표고버섯, 썩 등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는 복분자딸기를 제외한 모든 산림식물이 품종보호대상 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품종(임산물)은 현재 약 7,462종으로(표 4-5 참조) 육종

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품종보호제도의 취지로 미루어 향후 산림분야 종자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신품종 출원 유도 및 개인 육종가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강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신품종 요건 심사수행 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2008년 8월 출범시켰다. 그 결과, 2008년 18건, 2009년 45건 등 총 63건의 신품종 출원을 유도하였고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종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 48종을 개발하는 한편, 신속한 품종심사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강원 춘천과 충북 충주 등 2개소에 약 1.8ha의 재배시험 포지를 조성·완료하였다.

<표 4-5>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종

구 분	산 립 분 야
2008. 3. 1(15종)	뽕은 감, 산수유, 천마, 표고, 밤, 느티, 벚, 단풍, 대추, 백운풀,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2009. 5. 1(약 7,462종)	모든 산림식물(복분자딸기 제외)

자료: 농림부 고시 2008-10(08. 2. 21), 2009-28(09. 5. 1).

<표 4-6> 산림분야 신품종보호 출원현황

구 분	산 립 분 야
2008(18)	밤나무(5), 표고버섯(3), 감나무(2), 쑥(3), 기린초(2), 벌개미취(2), 백운풀(1)
2009(45)	표고버섯(10), 밤나무(5), 감나무(5), 곰솔(4), 잔디류(3), 음나무(3), 구절초(2), 주목(1), 대추나무(1), 털부처꽃(1), 소나무(1), 먼나무(1), 산양삼(1), 쯤개미취(1), 지리대사초(1), 등골나물(1), 역새(1), 인동덩굴(1), 주름잎(1), 부처꽃(1)

자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출원등록원부

[그림 4-2] 제정된 종별 특성조사요령



[그림 4-3] 자생식물 재배시험 포지 조성전경



(2)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2008. 8. 5일부터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와 이를 위한 책임기관의 지

<표 4-7>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단위 : 종, 점, ha)

구 분	종수	보존점수
종자	1,678	21,833
영양체	2,230	298,770
미생물	127	960
집단(현지내보존, ha)	65	5,971ha
식물·곤충·미생물 표본	11,646	380,251
합계	15,746	701,814/5,971ha

자료: 농업유전자원 기본계획 - 기관별 유전자원 보유현황 -

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지침 마련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유전자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수집·특성평가 및 보존 등을 수행, 2009년 말 현재 15,746종 701,814건(5,971ha 별도)의 유전자원 실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3) 우량 산림종자 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림 확충·관리

검증된 산림용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채종원 조성·관리 발전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채종원산 종자로의 공급이 어려운 수종에 대해서는 채종림(채종임분 포함)을 확대 지정하여, 채종원과 채종림의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품질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등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8> 종자 공급원 조성실적

구 분	면적(ha)	대상 종	비고
채종원	734	59	
채종림	289	54	지정 · 변경

2009년 9월 현재

(4)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2002년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건전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 종자저장고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한 묘목생산을 지역기반 종자산업으로 발전시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9>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구 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관 정	97공	20	20	22	10	10	10	5	6	9
간이온실	82동	16	14	17	9	9	9	8	12	15
토양개량	358ha	-	96	98	62	51	17	34	42	10
종자저장시설	3동	-	-	1	1	-	1		-	-

산림청, 2009년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다) 향후계획

(1) 품종보호제도 활성화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품종보호제도와 산림유전자원관리, 산림용 종묘 국가관리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자 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설립하여 2009년 신품종 출원(45품종) 유도, 48종의 “종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 제정 및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종자 및 묘목시장에서 불법종자 근절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에 대한 제도 등 종자유통단속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0년도에는 품종보호 누적출원 건수를 97품종으로 설정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30종의 “종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을 제정하여 총 78종의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에는 산림유전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신규예산 확보로 Gene Bank(유전자원 보존·저장 기능 포함) 구축, DNA분석을 통한 원산지 추적기술의 개발, 유통단속 강화 및 백합나무 우수 클론묘 생산(약 30만본 규모)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2)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채종원, 채종림) 확충·관리 및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그 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채종원 등을 1,023ha(113종)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한편 ‘채종원 조성·관리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에서의 품질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우량한 종자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반조성 시설(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 종자저장고 시설 등)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한 종묘생산업이 지역기반의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녹색성장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립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차경희)

가) 시행배경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급속히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1, 2차 치산녹화(’73~’87), 3차 산지자원화계획(’88~’97), 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에 따라 조림사업을 역점 추진하였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09년까지 425만ha에 110억 그루의 나무를 조림하여 세계적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대통령 '08.8.15. 광복절 경축사)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나무심기를 통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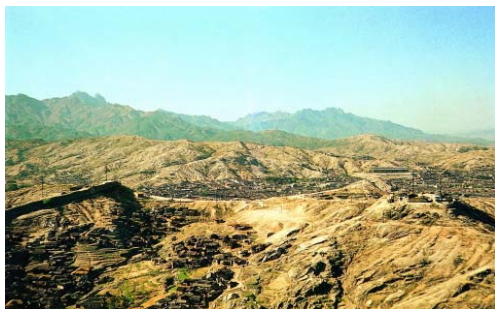
나) 시행내용 및 성과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과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에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하여, 2009년에는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 14천ha(32백만 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4천ha(4백만 본), 유휴토지 조림 2천ha(2백만 본) 등 총 22천ha(40백만 본)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산림녹화시기에 식재하여 벌기령에 도달한 리기다소나무림을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고 있다. 또한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하고, 산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금강소나무를 고품격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확충을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유휴토지 조림 등 산림의 기능과 산주의 경영목표에 따라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4-4] 한국의 치산녹화



▶ '60년대 황폐한 산림('60년대 서울)



▶ 녹화된 산림(강원 횡성)

조림수종은 목재생산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편백, 백합나무 등 용재수종을 기본 수종으로 하여 산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옻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특용수종을 식재하였으며, 생활권 주변에는 이팝나무, 산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과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였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백합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리기테다소나무 등 생장이 빠른 속성수를 바이오순환림으로 식재하고, 조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60~'70년대 치산녹화기에 심어진 리기다소나무는 벌채 시기가 지나 점차 노쇠하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만연되어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이를 벌채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백합나무 등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대체하고 있다. 리기다소나무림을 벌채할 때에는 산림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잔존목을 남겨두는 택벌식 벌채 또는 대상벌채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벌채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11천ha의 리기다소나무 등 불량림 수종갱신(樹種更新)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종갱신을 통해 바이오순환림 등 경제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4-5] 바이오순환림 조성



▶ 백합나무 조림지(경기 양평)



▶ 백합나무 성립지(전남 강진)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유휴지에 나무를 심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탄소흡수원 확보와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7년부터 5년간 2,500ha를 계획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2007년에 1천ha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부터 매년 2천ha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4-10>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실적

(단위:ha, 백만 분)

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면적	64,686	20,775	21,992	21,919
본수	128	44	44	40

다) 향후계획

장기적인 목재자원 공급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08~'17)동안 253천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백합나무 등 속성수를 이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할 계획이다.('20년까지 10만ha)

3) 경제림 단지 육성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주요원)

가) 시행배경

우리는 일제시대와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헐벗고 황폐된 산림을 범국민적 노력으로 불과 30~40년 만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 짧은 기간에 녹화에 성공한 만큼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산림면적의 59%('09년 말)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자원으로서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70~'80년대 국토녹화 이후 산지자원화를 위해 조림수종을 다양화 하는 등 경제림 조성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녹화된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육성할 대상지가 구분되지 않아 집약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인공조림지 등을 대상으로 3년간('99~2002) 경제림 대상지에 대한 산림실태를 조사하여 '02. 7월 경제림 육성대책을 수립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8월 경제림 육성 대상지

를 조사하여 2003.12월 전국 1,221개단지, 245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를 선정하고 수치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제림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경제림 육성단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림 단지를 최종 정비하여 전국 450개단지 292만ha(국유림 105개단지 58만ha, 민유림 345개단지 234만ha)를 확정(2005.9월)하여 경제림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11>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구 분	계	국 유 릫	민 유 릫
단 지 수(개소)	450	105	345
면 적(만ha)	292	58	234

경제림 육성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제림 육성 단지별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여건과 임상, 산림기본계획 등 기존 산림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현가능한 중장기 산림관리계획인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을 민유림에 대하여 2006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09년 8개도 30개 시·군 62단지에 대한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민유림 128개 시·군 345개 단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내재의 지속가능한 목재공급 및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의 목재생산 잠재력 평가와 경영목적별 장기경영계획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표 4-12> 민유림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군 수	128	8	45	45	30
단지수(개소)	345	25	139	119	62
면 적(만ha)	234	24	109	72	29

※ 국유림(105단지, 58만ha는 기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관리)

다)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09년 말 현재 11%로 약 90%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292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를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 말까지 경제림 육성단지에 대한 표준 매뉴얼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와 토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경제림을 육성·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25만ha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목재생산 및 공익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조준규)

가) 시행배경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 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天然林保育), 천연림개량(天然林改良), 산물수집 등으로 구분한다. 숲 가꾸기 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낮고 국토자원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온실가스 감축이행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숲 가꾸기 산물의 바이오매스 활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기간 내에 추진한 숲 가꾸기 사업은 총 3,010천ha로 계획(1,560천ha) 대비 193%를 실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숲 가꾸기 사업은

기능인영립단,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 숲 가꾸기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진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1,554만 명(상시 연평균 1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2009년까지 총 3,911천ha의 숲을 가꾸었다.

<표 4-13>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09)

(단위 : 천ha)

연 도	실 적		
	계	정책사업	공공근로사업
계	3,911	3,475	436
1998	257	214	43
1999	283	154	129
2000	276	159	117
2001	229	134	95
2002	296	244	52
2003	346	346	-
2004	337	337	-
2005	348	348	-
2006	334	334	-
2007	304	304	-
2008	378	378	-
2009	523	523	-

※ 숲 가꾸기 실적은 풀베기, 어린 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을 포함함.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국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청 훈령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제정(2004.02.12)하여 시행함으로써 숲의 기능별로 차등화된 숲 가꾸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숲 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해 숲 가꾸기 설계·감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각종 제도적·법적 개선이 추진되었다.

<표 4-14> 1단계 숲 가꾸기 5개년(2004~2008)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천 명, 천ha, 천㎡)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예 산	8,341	1,200	1,475	1,584	1,981	2,478	
고용 인원	연인원	12,500	-	2,500	3,000	2,750	4,250
	상시인원	13※	-	10	12	11	17
사업면적	934	179	184	179	176	216	
산물수집량	1,723	179	240	274	380	653	

※ 1단계 숲 가꾸기 5개년 추진실적은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의 큰나무가꾸기 추진 실적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09년은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의 첫 해로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생태적인 숲 가꾸기 추진에 주력하였다.

또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능별·경영목적별로 숲 가꾸기 방법을 차별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나무·참나무를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육성해 나가며 간벌재 등의 수집비 지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더욱 촉진하였다. 인공림을 우선하여 숲 가꾸기 실행으로 경제적 가치 제고에 주력하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신규 조직하여 숲 가꾸기 이후 발생된 산물을 수집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숲 가꾸기를 통해 수집된 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숲 가꾸기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도에는 일일 33천 명을 상시 고용해 산림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댐·호수 및 주요 강 유역 등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주변 산림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림을 대상으로 공공산림가꾸기를 추진하였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일일 고용형태로 주 40시간 근무제이며 주차, 월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일일 임금 외에 부대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기술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표 4-15> 2009년 숲 가꾸기 추진실적

(단위 : 천ha, 억 원, 천m³)

사 업 명	2009년		
	사업면적	사업비	산물수집
계	304	4,212	819
정책숲 가꾸기	280	2,267	427
공공산림가꾸기	24	1,945	39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2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희망자에 한해 최대 6주까지의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숲 가꾸기 분야의 기능인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표 4-16>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일자리 제공 실적

(단위 : 명, 억 원)

사 업 명	2007년		2008년		2009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11,972	1,981	14,608	2,478	32,858	4,212
정책숲 가꾸기	8,499	1,546	8,958	1,936	12,392	2,267
공공산림가꾸기	3,473	435	5,650	542	20,466	1,945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다) 향후계획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2009~2013년) 추진계획과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생태적인 숲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0년은 3,132억 원(국고)의 예산으로 230천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22천 명의 상시 녹색일자리 창출과 110만m³의 산물을 수집·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4-17> 2010년 숲 가꾸기 추진계획

(단위 : 억 원, 천ha, 천 명, 천㎡)

구 분	계 획	비 고
• 사업예산	3,132	• 정책숲 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면적	230	• 인공림 숲아베기 위주로 추진
• 일자리 창출	22	• 상시고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산물수집·활용	1,100	• 숲 가꾸기 부산물의 산림자원화 활용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첫째, 2010년도에는 정책숲 가꾸기를 내실화하고, 숲 가꾸기 작업시 베어진 산물의 수집에 주력하여 펠릿 등 산림바이오 에너지자원과 산업용재료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가시권 산림의 경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가시권 산림의 거점별 숲 가꾸기를 우선 실행하여 칩 등 덩굴류를 집중 제거하고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숲 가꾸기 패트롤 3개단을 지방산림청에 시범 운영하여 도로변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과 농경지 피해목 제거 등 산림현장 민원의 조기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숲을 가꾸고 산물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일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숲 가꾸기 대상지역을 보다 집단화·단지화하여 산물수집과 연계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산물수집 및 활용계획을 반영하여 임업기계화를 통한 적극적인 산물수집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원료공급 등 산림자원의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넷째, 2006년부터 시행된 숲 가꾸기 설계·감리 제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사업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숲 가꾸기 사업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과 숲 가꾸기 원가구성 비목별 적용기준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섯째로, 2010년에 9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9,345명을 상시 고용,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주변 생활권산림 등을 대상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창출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림 4-6] 숲 가꾸기 및 산물수집



▶ 잘 가꾼 산림



▶ 숲 가꾸기 산물 수집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 및 숲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꾸는 정책의 기초, 즉 심어서 녹화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숲 가꾸기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기간(2009~2013년) 중 125만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202천 명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650만 m^3 의 산물을 수집·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4-18>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2009~2013) 추진계획

(단위 : 천ha, 천 명, 만 m^3)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면적	1,250	235	240	256	258	261
일자리창출	202	22	33	45	49	53
산물수집량	650	80	110	130	150	180

※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은 숲가꾸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의 큰나무가꾸기 추진 계획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산림청 산불방지과 사무관 고낙삼)

가)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23건의 산불로 3,700여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규모만으로는 미국(9만 건, 281만ha), 캐나다(8천 건 178만ha) 등 임업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산불이 특정시기(2~5월)에 사람의 활동(입산자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해 발생하고 국토의 64%가 산림이라는 점에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4-19>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단위: 건, ha, 억 원)

구 분	10년 평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523	729	785	599	271	544	516	405	418	389	570
면 적	3,726	25,953	963	4,467	133	1,588	2,067	254	230	227	1,381
건당피해	7.1	35.6	1.2	7.5	0.5	2.9	4.0	0.6	0.6	0.6	2.4
피 해 액	94	652	27	90	3	41	75	4	4	4	39

자료 : 산림청, 2009년 산불통계연보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은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방지 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장기가뭄에 대응한 산불방지특별대책, 범정부차원의 산불대응력 보강대책 등 각종 특별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불방지 사업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산림보호법을 제정하여 산불전문조사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불방지 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였다.

(1) 장기 가뭄에 대응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7부터 운영하고, 산불이 집중되는 3.27~4.26까지를 「산불총력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

였다. 또한, 설연휴, 산나물 채취기간, 청명·한식 등 주요 시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갈수기에 대비하여 바닷물을 산불진화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험·연구를 거쳐 바닷물 취수를 위한 씨 스노클(Sea snorkel)을 장착 배치함으로써 산불진화헬기의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진화헬기의 야간산불 진화능력 확보를 위한 야간비행 훈련을 실시하였다.

(2)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력 보장대책 추진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다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공동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림 안에서의 불씨취급 금지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산불대응력 보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산불진화헬기의 가용능력 확충 등 10개 장·단기 과제를 확정하여 소관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다.

(3) 산불방지 조직·인력의 전문화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강릉, 울진)에는 지자체,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이 공동 근무하는 산불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산불원인과 피해 규명, 산불대응 평가분석 등을 통한 산불방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산림보호법(2009.6.9 제정)에 산불전문조사반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청에 산불조사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산불방지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9,950명),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355대), 산불진화차(100대), 산불무인감시카메라(10개소), 산림인화물질 제거(481ha),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200ha) 등 산불방지 자원을 확충하였으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중진화대를 SKY산불기동대로 재편하여 야간산불과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100개)과 산불위치 확인을 위한 GPS단말기(165대) 보급을 통해 산불상황관리의 과학화를 추진하였다.

2009년은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산불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나, 가뭄대비 특별대책 추진과 정부부처, 지자체 등 산불관리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

측으로 인명, 가옥, 문화재 등의 피해를 수반한 재난성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법정부차원의 「산불대응력 보강대책」의 수립 추진을 통해 산불다발의 위기를 산불방지 역량 강화의 기회로 전환한 해가 되었다.

다) 향후계획

향후 산불방지정책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의 도입, 산불상황관리매뉴얼 정비 등 산불상황관리의 체계화와 산림보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등 법령정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조정을 통한 국민생활 공감정책 구현, 산림인접 경작지 DB를 활용한 산불관리 강화, 공익광고 등 산불예방 홍보 강화와 국민 참여 활성화, 산불조사업무의 정착을 위한 산불전문조사반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사무관 이순욱)

가) 시행배경

지구상의 약 150만여 곤충 중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4,000여 종이며, 비교적 산림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주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20여 종이다.

이러한 산림병해충은 우리나라 전체산림 6,375천ha의 약 5%에 달하는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돌발·외래 해충이 점차 증가하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등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지속적으로 예찰·방제를 실행하여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 말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290천ha로 2008년도 372천ha 보다 22% 감소하였으며, 매년 발생 10% 감소목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20>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병해충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ha)	315,607	389,955	371,539	353,125	290,404
소나무재선충병	7,811	7,871	6,855	6,015	5,633
참나무시들음병	109	1,944	3,591	4,087	2,489
솔잎혹파리	148,846	195,759	179,585	183,229	155,897
솔껍질각지벌레	11,988	45,146	47,207	41,210	32,497
흰 불 나 방	25,209	23,308	22,107	19,687	15,478
잣나무넓적잎벌	3,017	4,250	3,397	3,941	4,576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1,603	4,808	9,519	3,161	1,432
밤나무해충	55,308	59,215	53,707	51,411	41,464
기타병해충	51,716	47,654	45,571	40,384	30,938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표 4-21> 재선충병 발생현황

발생년도	발 생 시·군·구
1988	부산 동래구
1990	부산 부산진구
1994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1997	부산 사상구·기장군·북구, 전남 구례군, 경남 함안군
1998	경남 진주시
1999	경남 통영시
2000	부산 사하구, 울산 울주군, 경남 사천시·양산시
2001	부산 서구·동구·수영구·강서구,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밀양시·거제시·진해시
2002	부산 연제구, 전남 신안군
2003	전남 영암군, 경북 칠곡군
2004	울산 남구·북구,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창원시·마산시·창녕군·고성군·하동군, 제주 제주시
2005	부산 남구, 대구 북구·달서구·달성군, 울산 중구·동구, 강원 강릉시·동해시, 경북 청도군·영천시·안동시·경산시, 경남 의령군·함양군·남해군
2006	경기 광주
2007	서울 노원구, 경기 남양주시·포천시, 강원 춘천시·원주시, 전북 익산시·임실군, 경남 산청군
2008	경북 상주시
2009	충북 옥천군, 경북 영덕군, 충북 단양군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997년까지는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2004년 경남, 경북지역 및 중부지방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어 2006년 말에는 전국 62개 시·군·구에서 재선충 피해가 발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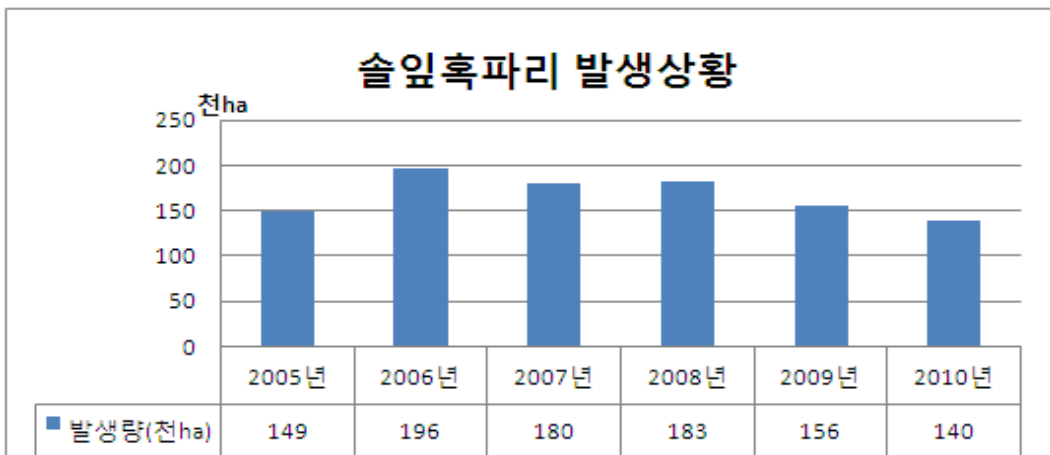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2005.5월) 이후 2006년부터 집중방제 체계가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방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6년부터 피해면적이 감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어 2009년 말 현재 51개 시·군·구, 피해면적은 5,633ha, 방제면적은 32,293ha에 이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제방법도 매우 어려우나, 적극적인 방제노력으로 2006년부터 감소로 전환, 2009년도에는 감염목 발생 본 수가 42천 본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는 2005년 최고 발생 대비 93% 감소라는 괄목할 만한 방제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솔잎혹파리 방제

솔잎혹파리는 1988년 327천ha 발생면적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도에는 73천ha까지 감소되었으나 2005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여 2005년 149천ha, 2006년 196천ha의 발생량을 나타냈다. 그러나, 적극적 예찰·방제정책 추진으로 2008년도부터 뚜렷한 감소추세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2009년 156천ha 대비 10% 감소된 140천ha로 발생추정하고 있다.

[그림 4-7] 솔잎혹파리 발생상황(2005년 ~ 2010년)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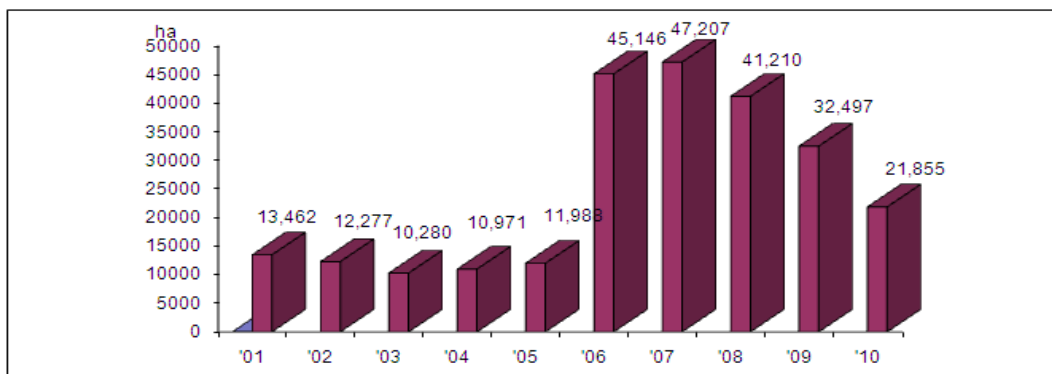
(3)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의 우량한 해송림에 발생하고 있다. 1983년 솔껍질깍지벌레로 판명된 이래 1996년(16천ha 발생)을 정점으로 2004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발생량이 45천ha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7년 47천ha가 발생하였으나 2008년에는 41천ha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9년도에는 충남 보령군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원면 모항리에서 신규로 발생되어 확산 우려가 있었으나, 항공방제, 나무주사, 임업적 방제 등의 노력으로 2009년도에는 32,497ha로 약 21%가 감소하였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제방법을 고도화하고 적기 예찰과 방제를 통하여 2006년 대비 51%가 감소된 22천ha가 발생량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인 방제노력에 따른 성과 결과를 높이 평가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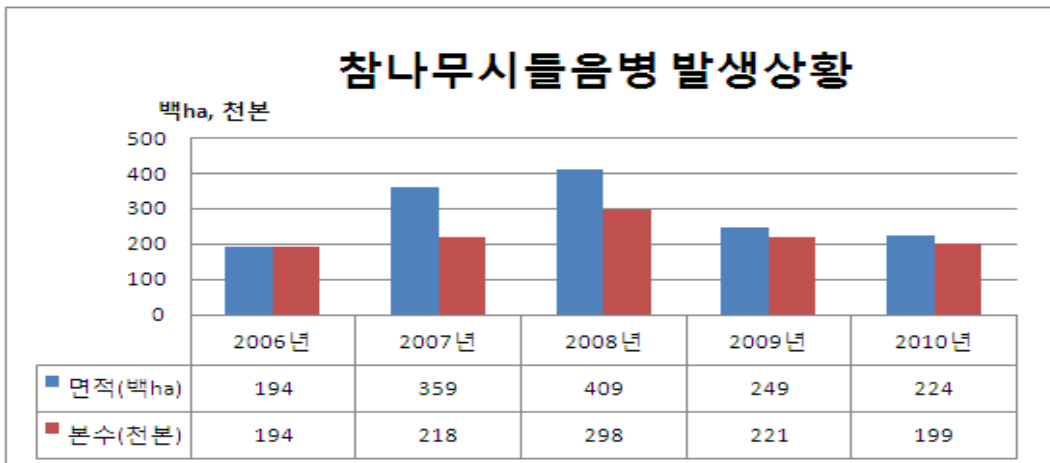
[그림 4-8] 솔껍질깍지벌레 연도별 발생현황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4)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도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전국 61개 시·군·구에서 3.5천ha가 발생되고, 2008년에는 4.1천ha가 발생되어 최고 정점을 이루었으나, 2008년 소구역모두베기를 시범실시, 그 방제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2009년 30%, 2010년 40%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매개충의 서식지가 대폭 감소되었고, 매개충의 생활사에 따른 끈끈이롤트랩, 전기충격 도입, 유인목 설치 등 복합방제도 함께 실행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2010년도에는 2008년도 발생대비 45% 감소한 2.2천ha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앞으로는 2010년도 일반 산림병해충의 방제전략은 5년 내 총 발생면적의 50%를 감소시킨다는 목표이다. 먼저 “사후 방제방식”에서 “선제적 사전예방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선제적 방제를 위한 소나무림 재해 저감 사업 확대와 예찰방제단을 통한 신속·정확한 예찰·방제체제를 정착시킨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 집중관리 체계로 매년 절반 이상의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을 줄여 갈 예정으로 2013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목표로 재선충병이 발생된 모든 지역을 청정지역화하여 세계 최초로 재선충 완전방제 성공국이라는 신화와 방제기술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솔잎혹파리·솔껍질각지벌레는 매년 10%씩 감소 목표로 소나무림 위생간벌 등 임업적 방제 사업 확대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나무주사 내실화 및 적기방제 추진, 각지벌레 확산 축선인 동·서해안 선단지 정밀조사 및 집중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5년내 50% 감소 목표로 확산 저지를 위하여 근원적 방제방법인 소구역모두베기를 40%로 확대 시행하고, 발생지역(리·동)별 특별관리체계 구축 및 끈끈이 롤트랩, 전기충격법, 유인목 설치 등 다양한 방제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병해충 및 외래·돌발 해충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확산 저지를 위해 조기발견 및 공동방제 등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

(1) 사후방식에서 선제적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

산림병해충 총 발생규모의 10% 감소를 목표로 가뭄·병해충에 취약한 소나무림에 대한 재해 저감 대책사업 본격추진(5천ha, 20만^m 수집활용), 예찰방제단(250개단, 1천 명)을 통한 신속한 예찰 방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06) 390 → ('07) 372 → ('08) 353 → ('09) 291천ha → ('10) 262천ha

(2) 참나무시들음병 총력대응

참나무시들음병의 확산 저지를 위한 소구역모두베기 목표제(40%)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발생지역별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여건을 반영한 복합방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5년 내 50% 축소를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 ('08) 68ha 5천^m → ('09) 273ha 34천^m → ('10) 995ha 54천^m

(3)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방제전략

나무주사 대상지에 대하여는 「간벌 후 입목기준본수」로 사전에 입목 밀도를 조절하는 임업적 방제를 의무적으로 실행토록 함으로써 입목의 성장조건 개선 및 활력도를 높여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제효과도 제고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임업적방제 확대 : ('08) 5천ha → ('09) 21천ha → ('10) 30천ha

(4) 병해충별 맞춤형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25% 감축 및 일반병해충 발생 10%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해충별 생활사를 적용한 맞춤형 방제를 적기에 실행하고 또한 임업적 방제를 통한 피해지의 환경을 병해충의 발생 및 증식에 불리하게 조성함은 물론, 피해 확산의 근원을 제거하는 등 복합적이고 과학적인 방제방법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방제작업시 천공기 등 기계장비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존함을 감안하여 방제작업 착수 전 필히, 안전교육과 작업요령 시연 등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작업에 대한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산림청 치산복원과 기술서기관 이한섭)

가)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산림 모양의 대부분이 풍화침식이 쉬운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의 경사도가 급하며, 약 1,300~1,500m가 되는 연평균 강수량의 60%가 여름철인 6~9월에 내리는 자연조건으로 인한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과거 전쟁에 의한 피해와 남벌, 화전 등으로 인해 195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10%인 68만 ha가 황폐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를 복구하여 치산녹화가 성공하게 된 이면에 ‘사방사업’이 있었으며 1907년 근대적 개념의 사방사업이 서울 창의문(현 청운동)에서 적묘공(積苗工) 약 5ha를 처음 실시하였고 1962년 사방사업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사방사업 실시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최근에는 엘니뇨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케틸라성 집중호우 및 많은 비구름을 동반한 태풍도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근래의 사방사업 시공은 재해방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주요 계곡과 경사면 등에 사방댐 및 계류보전 등 예방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사태가 하류의 농경지와 주택,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695개소, 산지보전 70ha, 산사태예방 35ha, 계류보전 61km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재해예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2004년 시범실시 3개소에 이어 2009년까지 총 69개소를 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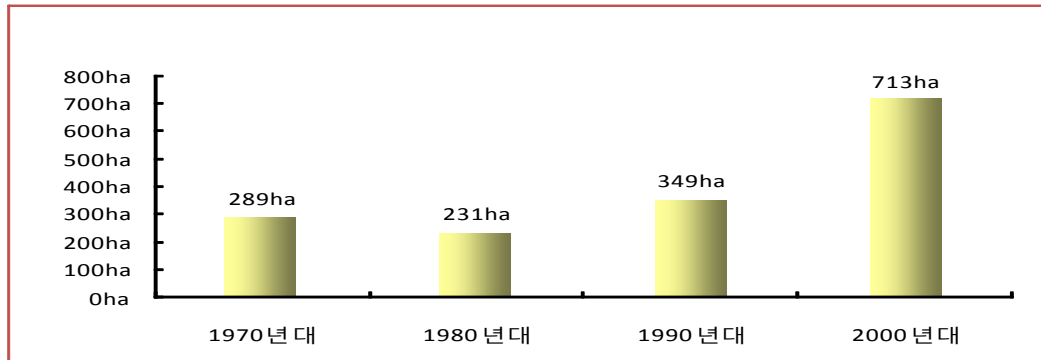
<표 4-22> 사업시행 실적

년도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해안방재림조성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준설
2009	83ha	60ha	10ha	62km	800개소	517개소

※ 산림유역관리사업(2009)15개소는 별도임

다) 향후계획

10년 단위 연평균 산사태 발생은 2000년대부터 급격히 산사태 발생이 증가·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수해피해 유형을 보면, 계곡부에 발생된 토양 붕괴가 갑자기 불어난 계류수와 같이 유입, 확대 재생산되면서 하류의 농경지와 가옥을 매몰시키는 대형 토석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09년은 7.7-16일 집중호우로 부산, 전남 등 지역에 산사태 250ha 등 피해발생

사방댐의 주요기능은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밀려 내려오는 토석을 차단함으로써 하류의 범람을 방지하는 토석차단,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뿌리 짚 뽑혀 내려오는 유목을 차단함으로써 교량과 배수관이 막혀 대형피해가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목차단, 가뭄 등에 대비하여 상류의 물을 저장함으로써 산불 취수원·농업용수·산림휴양 등에 활용하는 물 저장 효과가 있다.

<표 4-23> 사방댐의 효과성 입증사례

시설연도	개소별	재해방지효과
'02	강원 평창 봉평 흥정	가옥 93호, 인원 190명, 밭 1ha, 마을도로 3km 보호
'04	" 덕거	가옥 116호, 인원 305명, 밭 20ha, 마을도로 4km 보호
'05	인제 인제 인제읍 원대	가옥 12호, 인원 40명, 밭 10ha, 마을도로 1.5km 보호

따라서 황폐지 복구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대형화·빈발화 됨에 따라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사방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4-24> 사방댐 시설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개소)

구분	목표	실적	잔량	연도별 추진계획			
				2011	2012	'13~'17	'18~'25
일반사방댐	16,000	4,218	11,782	800	800	4,000	6,182
물가두기 사방댐	160	15	145	20	20	105	

※ '실적'은 '10년도 계획물량 포함

아울러 2004~2005년 동안 추진한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산사태 위험지를 과학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및 사방댐 등 사방사업 시행 예정지 선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연계시킨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재해예방업무를 한층 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4)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 김명중)

가) 시행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의 보전·확보·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1992. 6월 브라질 리오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자생식물자원의 보존과 상업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생식물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우리나라도 최근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식물이 곧 자원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청은 21세기 생물자원확보 경쟁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수목원 조성 및 육성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21세기는 생물유전자원의 양적 및 질적인 확보가 국부의 척도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전·확보·이용 등을 둘러싼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집·보전·이용 및 자원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을 적극 진흥 및 조성·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에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가 확립되는 등 수목원 조성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보전 및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감소하고 있는 고산식물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북 봉화군에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을, 광주, 안산, 파주, 화성, 예산, 구례에는 공립수목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2009년 말 현재 국·공립수목원 32개소, 사립수목원 13개소, 학교수목원 6개소를 비롯하여 총 51개소를 조성·운영 중에 있다.

<표 4-25> 수목원조성·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4년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51	34	3	2	3	2	7
국립수목원	2	1					1
공립수목원	30	18	1	2	1	2	6
사립수목원	13	9	2		2		
학교수목원	6	6					

(2)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사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국 국·공립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분야 역사서적 및 전통 산림문화 등과 관련된 각종 산림사료에 대한 전시시설과 식물·곤충·수석·화석·석엽 등의 표본을 보존하는 표본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관, 각종 산림 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영상자료실, 산림사료의 보존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실은 물론 관람객들을 위한 방문자 안내센터 등이 있다.

1987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산림박물관은 2009년에는 여주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2009년 말까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재 국립산림박물관을 비롯하여 춘천, 공주, 순창, 안동, 진주, 대구, 청원, 오산, 완도, 아산, 여주 등 총 12개소에 산림박물관을 건립·개관 중에 있다.

<표 4-26> 산림박물관건립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별	계	2004까지	2005	2006	2007	2008	2009
산림박물관 건립	12	9	1		1		1

(3) 생태숲 조성

지구온난화, 사막화, 산림파괴 등으로 매년 열대우림 생물의 0.5% 상당이 멸종되고 있으며, 세계자연연구소(WRI)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전체 생물의 약 33%가 멸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종 감소로 자국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유출방지 및 배타적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자생식물자원 보존은 단순히 소극적인 보호 측면을 벗어나 자생지조사 및 보존·증식·복원 등 보다 능동적인 보존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희귀·특산 식물을 포함한 자생식물 위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경쟁력 있는 숲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 내 보존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인위적·자연적 위협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나

아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 복원 기법을 개발하는 등 산림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생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장수, 영암, 울진, 의령, 김해 등 5개 시·군에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 식물을 현지 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을 신규 조성하는 등 2009년 말 현재 한라생태숲 등 총 38개소의 생태숲을 조성·운영 중에 있다.

<표 4-27>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별	계	2004까지	2005	2006	2007	2008	2009
생태숲 조성	38	11	5	5	5	7	5

다) 향후계획

(1) 수목원 조성 및 육성

국내 수목원은 식물종 보유 등 규모나 수량 면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인구 50만 명당 수목원 1개소를 목표로 총 90여개소의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의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식물유전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증식·보존·관리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자연체험 및 식물학습과 정서문화함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목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민여가·휴양·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녹색시설 조성을 위해 세종시국립수목원을, 부산 해운대, 남양주, 원주, 홍천, 보령, 당진, 진안, 순천, 창원, 합천에는 국립수목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2)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박물관을 국·공립수목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연학습과 산림역사에 관한 볼거리 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영광군 등에 산림박물관을 신규 건립할 계획이다.

(3) 생태숲 조성

생태숲 조성사업은 수목원 조성사업과 같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희귀·특산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과 멸종위기 식물을 환경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멸종방지 및 감소속도를 완화하여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부산 해운대, 함평, 담양, 김천, 고령, 진주 등에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 식물을 현지 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으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5)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조준규)

가) 시행배경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약 1/8수준이며,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산악지형으로 인한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커 물 관리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강수량의 65%가 최상류 수원인 산림지역에 내리지만 산림내 저장량은 14%에 불과하여 홍수, 가뭄,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수자원 저장량 확대를 위한 녹색댐 기능제고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 및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에 따라 용수개발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전국의 댐 유역과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양림 조림은 넓은 면적의 모두배기(개벌)를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식재,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깊게 들어가는 상수리, 굴참 등 참나무류, 자작나무 등 심근성 수종을 조림하고 초본류, 관목류 등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함으로써 녹색댐 기능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사업 추진과 5대강 및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이 양호한 활엽수 중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조림은 ha당 5,000본을 식재하고, 상수리 파종조림은 ha당 5,000상을 파종하는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매년 추진하였다.

녹색담 기능 제고를 위한 수원함양림의 숲 가꾸기 사업은 임지 여건에 따라 침엽수 인공림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슈아베기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복층림, 혼효림으로 유도하였고 불량한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과 개량사업을 실행해 건강하고 우량한 천연림으로 유도하여 수원함양기능과 산사태 방지 기능을 높였다.

또한 산림청은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38개 담유역 산림을 대상으로 간벌 및 천연림보육사업 등을 통해 녹색담으로 조성하는 「녹색담 조성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27개담 유역 산림에 대한 숲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녹색담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표 4-28> 전국 녹색담 조성사업 추진실적

구 분	실행연도 및 담 이름			
	2003년~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기본설계	2003년~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숲 가꾸기	2006년~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이후
	21개	5개	1개	11개
38개담	안동, 임하, 횡성, 소양강, 달방, 광동, 부안, 보령담, 영천, 안계, 사연, 대암, 구천, 선암, 대청, 용담, 밀양, 섬진강, 평림, 연초, 수어담	운문, 합천, 주암, 주암조절지, 남강	충주담(강원북부)	충주담(강원남부), 신규담(11개)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다) 향후계획

2010년에는 충주댐 강원남부유역 266천ha의 산림을 대상으로 숲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 기본설계가 완료된 전국 27개댐 유역 37천ha의 숲을 가꾸어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유역 전역과 새로 댐건설이 추진 중인 화북댐, 부항댐 등 11개댐에 대해서도 2011년 이후 연차별로 녹색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 4대강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에 산림전문가 참여를 추진하여 물 관리 기관 등의 비용 분담을 통한 수계지역 지자체와의 산림사업 추진 등 녹색댐 기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9]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① 홍수조절기능		o 나지 대비 홍수기에 28.4톤/일·ha 더 머금음
② 갈수완화기능		o 불량림 대비 갈수기에 2.5톤/일·ha 더 흘러보냄
③ 수질정화기능		o 질소 14.3ppm의 물을 1.7ppm으로 정화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사무관 이낙형)

가) 시행배경

국유림을 대부(貸付)하는 행위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빌려 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이를 법률적으로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라고 한다.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국유림의 대부행위와는 구분된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대부·사용허가 실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2008년 말 대비 건수는 56건이 증가되고, 면적은 2,932ha가 감소된 8,562건, 59,005ha이다. 전체 건수는 전년도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면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국가 직영 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립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 지역 내 사유 임목을 매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임야가 아닌 유휴 국유재산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단위 : ha)

구 분	합계		대부		사용허가		분수림(조립대부지포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07년	12,148	64,334	7,408	8,055	4,202	23,460	538	32,819
'08년	8,506	61,937	3,680	7,424	4,326	23,854	500	30,659
'09년	8,562	59,005	3,524	7,129	4,605	24,257	433	27,619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기존의 대부지 등은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중단, 타 용도 사용 등으로 대부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을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지를 관리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는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2,833건 중 85.6%에 해당하는 2,425건이 '양호', 250건(8.8%)은 '경고', 158건(5.6%)은 '불량' 판정을 한 후 '경고'와 '불량' 판정을 받은 대부지 등은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대부지 등은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5건)한 바 있다.

(단위 : ha)

구 분	합계		양호		경고		불량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07년	2,985	34,307	2,706	28,489	169	4,562	110	1,255	취소 : 8
'08년	2,280	12,213	1,958	8,201	120	975	202	3,307	취소 : 10
'09년	2,833	32,640	2,425	26,702	250	4,448	158	1,490	취소 : 5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다) 향후계획

과도한 산지 전용을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광업·스키장 등의 용도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지 전용을 전제로 한 대부·사용 허가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유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용도의 대부·사용 허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2006년 8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용 또는 공공용,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등 기반시설용,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공익시설 등과 함께 주민이 산촌개발사업이나 약초류·산나물류·버섯류 재배 등으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요존국유림에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요존국유림에서는 용도에 제한이 없이 산지 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부(貸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산림청 치산복원과 사무관 박병성)

가) 시행배경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1,400km(남한 684km)에 이르는 국토의 등줄기이다. 또한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서식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대간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성,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적 가치를 제고하여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12월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9월에는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토지 263,427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29>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구분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면적(ha)	%	면적(ha)	%	면적(ha)	%
면적(ha)	263,427	100	169,950	65	93,477	35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산림자원, 자연환경, 문화자원의 계획적인 보호·관리·이용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2005년도에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백두대간의 주요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과 현장분석을 통해 자연생태계 및 인문사회 자원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들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백두대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인터넷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263천ha로서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 684km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백두대간 자원의 변화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물리적 환경, 동·식물상, 식생 등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 환경,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이다.

2009년은 자원실태조사 1단계 4년차 조사로서 덕유산 권역 154km 구간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 경상북도 상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등 3개 도, 6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30,074ha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30> 백두대간 보호지역 자원실태조사 현황

년도	1연차	2연차	3연차	4연차	5연차
권역별	설악산권역 (향로봉~양양)	태백산권역 (강릉~태백)	속리산권역 (봉화~문경)	덕유산권역 (보은~무주)	지리산권역 (거창~지리산)
조사거리	100km	157km	172km	154km	101km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 남한지역 정맥 자원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백두대간 중심의 보전·관리정책을 확대하여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축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과 생태적 지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남한지역 정맥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맥의 보전·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가치를 큰 산줄기로 대간과 연계한 생태축이고 백두대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녹색휴양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맥의 명확한 실체나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환경훼손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국토의 주요 생태축으로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남한지역 6개 정맥에 대해 5년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각 정맥에 대한 생태적 가치 분석과 생태적, 인문적, 휴양적 가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정맥 보전의 기본방향 및 합리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남한지역 전체 정맥에 대한 통합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식생, 동·식물상, 훼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정밀조사를 2009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우선 개발수요가 비교적 많은 낙동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 삼척시부터 부산의 다대포 물운대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서 4개 시·도, 25개 시·군·구에 걸친 419km 구간(25,140ha, 마루금 양안 평균 300m 기준)에서 실태조사가 완료 되었다.

<표 4-31> 남한지역 6대 정맥 자원실태조사 현황

년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권역별	낙동정맥 매봉산(태백)~ 봉화산(부산)	호남정맥 영취봉(장수)~ 장계산(광양)	호서정맥 속리산(보은)~ 중대산(서천)	낙남정맥 옥산(하동)~ 봉화산(김해)	한남·금강정맥 칠장산 (안성~문수산(김포)) 조약봉(진안)~ 장계산(군산)
조사거리	367km	525km	379km	193km	311km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추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와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생태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인문지리·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시설로 구성되며, 국민 홍보·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 도 중 보호지역 전체가 국립공원지역인 전남을 제외한 5개 도에 각 1개소씩 백두대간보호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모두 5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충청북도 괴산군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2009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의 폐교 부지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 1년차 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4)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복구사업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07년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이미 훼손되어 경작하고 있는 고랭지 밭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친환경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에 따른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의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부분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에 위치한 고랭지 밭은 자연경관 훼손과 유기질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및 농약 살포로 백두대간 지역의 토양과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 및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고랭지 밭의 생태적 관리방안”으로 백두대간 경작지 중 매도희망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의 사유토지 등을 매수하여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설치 관리방안은 신규 훼손이 수반되는 곳은 개발행위 사전 협의 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설치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신청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개발행위 사전협의 세부기준에 따라 엄격한 사전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이 아닌 해안 지역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백두대간 지역은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과 산림자원의 보고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절되고 훼손된 백두대간을 일시에 복원·복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기술적

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복원공사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 훼손지의 유형을 지형, 식생, 인공구조물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복원모델 개발이 완료 되었다. 복원모델 주요 내용은 훼손지 복원방향 수립, 생태적 특성평가, 복원모델 개발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이다. 복원사업은 2006년도 4개소, 2007년도 4개소, 2008년도 7개소, 2009년도 8개소 등 총 23개소에 21ha를 복원·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5)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 추진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였으나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 보호지역 등이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2015년까지 보호지역 내와 보호지역 연접지 등의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연접지 및 보호지역이 통과하는 읍·면·동지역을 포함한 사유토지를 매년 6,000ha씩 매수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아 매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2007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토지가격의 상승추세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기대심리 때문에 토지 매도를 기피함으로써 매수 실적이 낮았다. 그러나 사유토지 매수 확대를 위해 백두대간보호 지역 내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과수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9.3.5)하였고,

<표 4-32> 백두대간지역 사유토지 매수실적

(단위 : ha, 백만 원)

연도별	합계	보호지역 내			연접 지역	보호지역 포함 읍·면·동	금액
		계	핵심	완충			
합계	9,694	1,667	563	1,104	1,211	6,816	48,974
2005	2,393	364	123	241	208	1,821	10,660
2006	3,397	566	162	404	576	2,255	14,189
2007	1,292	164	54	110	94	1,034	7,742
2008	1,296	106	84	22	131	1,059	6,862
2009	1,316	467	140	327	202	647	9,521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20/100)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개정(2010.1.1)이 되었으며, 또한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2008.9.22)한 바 있어 앞으로 사유지 매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추진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5년도 72억 원, 2006년도 115억 원, 2007년도 107억 원, 2008년도 96억 원, 2009년도 86억 원 등 총 476억 원을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하였다.

<표 4-33>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유형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47,601	7,200	11,473	10,697	9,600	8,631
저온저장고	13,317	1,530	2,654	2,821	3,359	2,953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1,153	3,430	3,220	2,123	844	1,536
생산기반 조성(가공)	6,832	1,110	2,097	1,797	1,105	723
산채재배시설	7,036	718	1,535	1,194	2,482	1,107
농림소득장비(관수)	2,356	-	437	123	524	1,272
표고재배시설	3,307	412	959	1,205	403	328
임산물직판장·집하장	3,600	-	571	1,434	883	712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또한 2007년부터는 백두대간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육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를 유보한 삼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감소분은 입목 벌채 예상수익금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 53백만 원, 2008년 63백만 원, 2009년 39백 원 등 총 155백 원을 지원하였다.

다) 향후계획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는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분야와 대상지역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산림자원의 변화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조사된 자료의 DB화를 통한 백두대간 보호·관리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과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은 자원실태조사 1단계 5년차 조사로서 지리산 권역 101km 구간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등 3개 도, 6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35,285ha(핵심구역 23,912, 완충구역 11,373)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제1단계 조사가 완료한 인문·사회, 역사문화자원, 산림자원, 자연환경, 정책제언 등의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2단계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남한지역 정맥조사는 백두대간 상 남한지역 정맥들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원 실태, 생태적 가치 및 훼손실태 등에 대한 조사로서 남한지역 6개 정맥에 대해 5년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각 정맥에 대한 생태적 가치 분석과 인문적, 휴양적 가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정맥 보전의 기본방향 및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남한지역 전체 정맥에 대한 통합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식생, 동·식물상, 훼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호남정맥(금남호남정맥 포함) 525km에 이어 2011년 호서정맥(379km), 2012년 낙남정맥(193km), 2013년 한남·금강정맥(311km)에 대한 자원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 지역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의 홍보 및 체험을 통한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청소년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 도 중 보호지역 전체가 국립공원지역인 전남을 제외한 5개 도에 각 1개소씩 백두대간보호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모두 5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의 폐교 부지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 1년차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또한 2010년도에는 강원도, 전라북도에서 1년차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13년에는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조성·추진할 계획이다.

2007년도 백두대간 내 훼손지 조사결과, 식생훼손만 이루어진 곳이 전체 훼손지 173개소 중 129개소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형훼손이 이루어진 곳은 26개소로 15.0%, 인공구조물에 의한 훼손이 발생한 곳은 18개소로 10%로 조사되었다. 이중 백두대간 생태계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폐군사시설, 폐광산, 고랭지 경작지 등에 대하여 주변식생 및 경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복원·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을 연결하여 한반도의 남북을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복원,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복하여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재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고유기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당시 지역특성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접된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5년까지 보호지역 내와 보호지역 연접지 등의 사유지 60,000ha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 될 수 있으며,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사유림)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으로 산림소유자의 불만 해소와 백두대간의 생태적·자연경관 등의 보호로 자연환경·경관의 자원화 도모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격차해소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1)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산림청 치산복원과 사무관 이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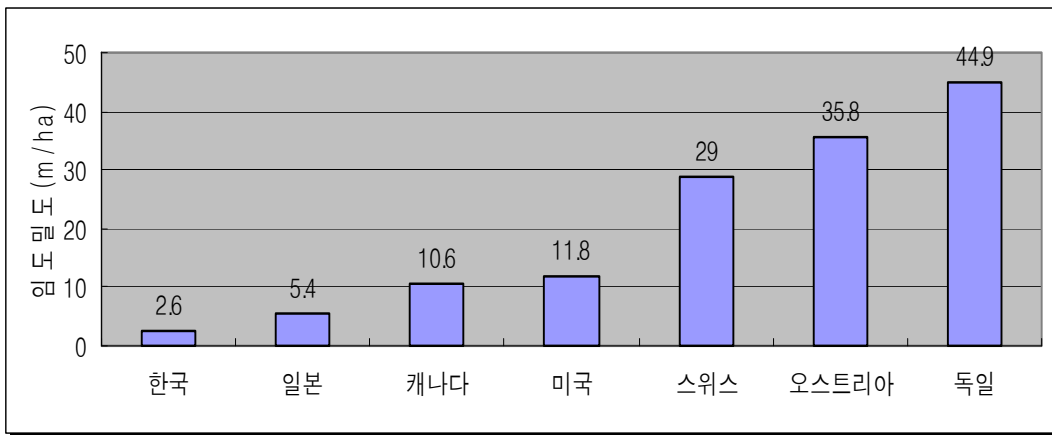
가) 시행배경

임도는 임산물 운반·조림·숲 가꾸기·임목생산 등 산림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또한 임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불·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탐방로·산악레포츠·산책로 등 국민의 보건·휴양 목적으로 임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되고 있어 임도의 다목적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내 임목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9년 말 현재 총 사업비 967,717백만 원을 투자하여 16,617km의 임도를 시설하여 ha당 임도밀도가 2.61m에 이르고 있으나 임업선진국인 일본 5m/ha, 미국 12m/ha, 독일 44m/ha와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림 4-10]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자료 : 산림청 산림기본통계(2010)

산림녹화가 성공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부족한 임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임도밀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1998년까지는 “품질” 유지보다는 “물량” 확대에 치중한 결과 낮은 시공단비에 따른 안정구조물이 부족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시 일부 임도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산림상태, 토양특성 등 현지 산림여건에 따라 피해방지·경관유지 등 가능한 공종을 반영하여 설계·시공토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구축에 목표를 두고 “간선임도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유림간의 연계는 물론, 지역 간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예정 노선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평가와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부합된 지역에 한하여 임도시설을 추진하여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임도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개량사업 계획을 세워 낮은 단비로 시공되어 안전성과 경관성에 문제가 있는 기존 임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량사업을 실행하여 2009년 말까지 10,165km를 완료하였으며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임도(1,690km)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임도의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임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우리나라 산림지형에 적합한 SOC개념의 기본 임도밀도는 8.5m/ha이므로 2030년까지 41,600km를 시설하는 것으로 장기목표를 정하고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34> 임도시설 장기계획

구분	계획	추진실적 ('68년~'09년)	2010년 계획	2011년~2017년	2018년~2030년	누 계
	사업량 (km)	계	16,617	579	3,842	20,562
국유임도		4,040	331	1,400	4,229	10,000
민유임도		12,577	248	2,442	16,333	31,600
사업비 (백만 원)	계	976,567	71,466	722,296	3,864,528	5,634,857
	국유임도	210,277	32,455	263,200	794,488	1,300,420
	민유임도	766,290	39,011	459,096	3,070,040	4,334,437
ha당밀도(m)		2.61	2.70	3.36	8.50	8.50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과거에 낮은 단비(73백만 원/km)로 설치한 임도의 경우 일부는 재해발생 위험과 경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같은 기존 임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구조개량을 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로 만드는 등 유지·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5>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km)

구분	임도시설 현황	총대상 물량	구조개량사업 실적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소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6,617	11,855	10,165	8,452	640	583	490	442	1,248
국유임도	4,040	2,758	2,282	2,013	77	102	90	113	363
민유임도	12,577	9,097	7,883	6,439	563	481	400	329	885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아울러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 짐에 따라 임도의 설계, 시설기준과 설계심사·시공 감리제 도입·준공검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마련·강화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해 산림관련 법령·훈령을 개정하고, 우기 전·후,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임도를 집중 점검·보수하는 “임도관리원”을 배치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설치와 재해로부터 튼튼하고 안전한 임도의 개설·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가고 있다.

2) 임업 기계화 촉진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업사무관 조용철)

가) 시행배경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와 임업생산성 향상, 벌채작업 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화 고가이고 험준한 지형조건, 영세한 경영규모, 낮은 임도밀도, 전문 기계운전원의 부족, 기계화 시업의 경험부족, 기계화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임업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력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점차 늘어나는 산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기계화는 중요한 산림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제5차 산림 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운영자(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 말 현재 임업기계 보유대수는 총 27,164대로 지방산림청이 3,959대(15%), 지방자치단체가 14,263대(52%), 산림조합이 8,942대(33%)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업기계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6>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단위 : 대)

장비 구분	계	지방청	시·도	산림조합
계	27,164	3,959	14,263	8,942
임 도	474	89	97	283
임목생산	9,871	1,659	5,091	3,121
조림·육림	5,748	841	2,913	1,994
목재가공	819	85	501	233
산림보호	7,533	807	4,437	2,289
양 묘	878	154	482	242
행 정	1,841	324	742	775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국, 2009년도 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 지원센터를 7개소(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순천시산림조합, 평창군산림조합, 청주·청원산림조합, 산청군산림조합)를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2008년에 비하여 가동률이 향상되고 있으나, 기능인훈련원과 청주·청원산림조합은 기계운전원의 이탈 및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미흡 등으로 가동률이 감소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4-37>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설치년도	기관명	소재지	보유장비
계	7 개소		188대
2001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타워야더 외 8종 13대
2002	임업기술훈련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타워야더 외 7종 11대
2003	임업기계훈련원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타워야더 외 9종 11대
"	순천시산림조합	전남 순천시 연향동	타워야더 외 8종 32대
2004	평창군산림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HAM200 외 6종 18대
2005	청주청원산림조합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북부집재기 외 7종 29대
2006	산청군산림조합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타워야더 외 11종 74대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국,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임업기계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운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2007년 10월부터 임업기계 대여수수료를 평균 18% 인하하여 산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또한 산주가 임업기계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지, 임업신문 등의 전문지 및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 임업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종을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업용 기계장비 10종에 대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표 4-38>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단위 : kl)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2,652	2,823	2,790	2,812	2,524	3,522
휘발유	2,335	2,515	2,477	2,532	2,264	3,240
경 유	316	308	313	280	260	282
윤활유	1	-	-	-	-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임업용 면세유 공급실적

다) 향후계획

앞으로 임업기계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고 실용성이 높은 임업 기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의 트랙터나 굴삭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개발·보급으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계톱·예불기 등 수요가 많고 저렴한 장비는 자체 개발 또는 기존 보급장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적용이 가능한 타워야더 등 외국의 고성능 임업기계를 선별하여 시범사업용으로 도입한 후 적용시험을 거쳐 실용성 높은 기종은 벤치마킹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표 4-39>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개발 현황

(단위 : 종)

구 분	기종수	기 계 장 비 명
계	35	
산림과학원	19	2드럼윈치, 자동수간주사기, 밤수집기, 동력식 가지치기톱, 원목자동천공기, 표고재배기, 다목적집재차, 소형윈치, 농용운반차 탑재용 윈치, 미니포워더, 원목조재기, 제조장비, 시비장치, 방제장치, 케도식 소형임내차, 호두과피탈피기, 수실류채취기, 휴대형식혈기, 진동식 호두수확기
민 간	7	톱밥제조기, 목재과쇄기, 원목집계, 썰매형윈치, 산불진화차, 농림방제차, 2드럼케이블윈치
공 무 원	5	굴삭기소형윈치, 세레스윈치, 버켓교체형 굴삭기윈치, 북부집재기, 춘천집재기,
임업기계 훈 련 원	1	HAM200
산·학·연	3	밤박피기, 타워·원목 집재기, 타워야더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한편, '09년도에는 남부지방산림청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시범설치하고 지역 산림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에 기계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타 지방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업의 기계화에 대비하여 '09년 말 현재 26개단에 불과한 기계화영림단을 '12년까지는 95개단(국유림 71개단, 지자체 24개단)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계화영림단에 대하여는 산물수집이 용이하도록 임업기계장비를 세트화(트랙터집재기 1대, 우드그랩 1대, 윈치 2대) 하여 보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사무관 한동길)

가)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약 53%가 II~III 영급에 속해 있다. 또한, I 영급까지 포함하면 약 59% 정도가 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면적에 대해 숲 가꾸기 작업을 해 주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 가꾸기 사업량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산림사업은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임업기능인 양성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영림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림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기능인력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09년까지 837개단 7,941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43단 1,854명, 산림조합 392단 4,275명, 산림사업법인 302단 1,812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4-40>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림단 조직 현황

구 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계	757	7,286	800	7,595	837	7,941
국유림 영림단	146	1,712	142	1,681	143	1,854
산림조합 영림단	376	4,164	393	4,324	392	4,275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235	1,410	265	1,590	302	1,81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 임업노동력 확보 및 후생복지

임업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림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개단 240명의 영림단이 신규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신설 영림단에 대하여는 직업인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을 통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기계톱 등 산림사업 장비 1,469점(170백만 원)을 신규 영림단에게 지원하였다.

신규로 양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중심 및 현장 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업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 시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업기능인 기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임업기능인 축제의 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종목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산림작업 기술능력이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전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능인영림단에게 충분한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시기별로 적정 배분토록 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임업기능인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기능인교육에 참여하는 영림단원 1,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교육훈련 보조비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산림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에는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산촌 인력 감소가 심화될 전망으로, 전문노동인력의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산림경영 기반 시설인 임도시설의 확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 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4)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철중)

가) 시행배경

임업의 장기성(40~60년)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산림에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산림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임산물 총생산액 4조 8,314억 원 중 단기임산물 생산액이 2조 6,576억 원으로 임산물 총생산액의 55%에 달하는 등 단기소득원개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표 4-41>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단기임산물 생산액	10,471	15,467	17,081	18,328	19,267	19,849	20,090	21,464	26,576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육성 방안 및 고소득 품목인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한·미 FTA 및 중국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실류의 경쟁력 강화 및 수실류의 재배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실류 작업로 지원, 노령목 갱신, 밤나무대체작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한 시장개방을 대비한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밤나무 토양개량, 조경수·분재토양 개량, 산양삼이력제지원, 친환경 밤생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밤, 표고, 산채류 등 60개의 지역특화품목 단지를 주생산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생산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규모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생산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4-42>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밤	대추	호도	잣	표고	송이	머루	산채	장뇌	
주산단지	60	7	4	1	1	22	10	3	10	1	1

한편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지 326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43>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산림복합경영	326	15,567	218	11,699	30	1,304	40	1,744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 산채류,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15개 단지에 대하여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산약초 등 10개 단지에 대하여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소득 전략품목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최근 청정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대책 추진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하여 임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및 임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도록 임산물표준재배 지침서를 발간(2009, 27품목)하였으며, 2014년까지 꽃송이버섯, 산마늘, 목이버섯 등 61품목에 대해 임산물표준재배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뇌 등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을 산양삼으로 일원화 하고 청정 산양삼의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청정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국산과의 차

별화를 통한 신뢰 확보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국회의결 2009.12.30)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임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생산 이력제 도입, 친환경도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품 유도를 위한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를 추진하여, 양양 송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개 품목이 등록되었다. 또한 임산물 명품화를 위해 2009년 8품목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다) 향후계획

단기임산물 소득원화 정책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국산재 이용 촉진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업사무관 김종선)

가) 시행배경

그 동안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국산재를 공급하여 생산량이 증가되었으나 국내 목재 소요량의 약 9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재는 원목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 운임비 상승, 자국 원자재 보호 등으로 수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벌기령에 도달한 주벌 임지의 부족, 대부분의 벌채가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시기적 집중화 문제로 목재 업체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목재는 대부분 간벌 소경재로 섬유판, 펄프·칩 등 산업용재, 표고 자목, 톱밥 등 농·임업용 자재, 루바·몰딩재 등 건축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산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수입산 목재에 비하여 떨어져 국산 목재 고부가 가치화 및 임도 시설 확충, 임업기계화 등 산림 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산 목재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 협약에 대비하고 웰빙, 국민건강 증진, 임분 구조 개선과 목재산업 육성, 목재문화 확산, 다변화하는 용도별 목재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 말 현재 수입 목재를 포함한 총 목재 수급량은 26,607천m³으로, 이 중 국내재는 2008년 대비 17.5% 증가한 3,176천m³가 공급돼 국산재 자급률은 11.9%로 전년보다 1.8% 증가하였다. 특히 당초 산업용재 공급 목표량의 111%인 1,920천m³을 공급하여 국내 목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산재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집하장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동해에 설치된 목재유통센터는 각각 낙엽송과 소나무를 주원료로 원주재, 내장재, 판재 및 각재 등 건축 자재를 생산하여 직거래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목조 주택, 건조·방부목 등 목 제품 개발·보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4-44> 2009년 목재 수급 실적

(단위 : 천m³)

공급 수요	합 계			국내재 (원목)	수입재			자급율(%)	
	합계	원목	제품		소계	원목	제품	원목	총목재
계	26,607	8,190	18,417	3,176	23,431	5,014	18,417	38.8	11.9
제 재 용	5,852	4,926	926	412	5,440	4,514	926	8.4	7.0
합·단판용	3,061	500	2,561	0	3,061	500	2,561	0.0	0.0
펄프·칩용	11,013	797	10,216	797	10,216	0	10,216	100.0	7.2
보 드 용	2,518	1,122	1,396	1,122	1,350	0	1,396	100.0	44.6
갱 목 용	39	39	0	39	0	0	0	100.0	100.0
기 타	4,170	806	3,364	806	3,364	0	3,364	100.0	19.3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09년도 목재수급실적

아울러 목재틀 옹벽, 목재 가드레일, 데크로드 등 친환경 국산재를 활용한 시설 보급 사업에 9억 원으로 3개 지방청 국유림에 시범 설치하였고, 연간 4,000톤의 친환경 목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1개소를 지원하여 수입산 대체 및 국산재 사용처를 개발하고,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에 프리컷 장비 등 목재 가공 장비 구입

비 5억 원, 원자재 구입 자금을 30억 원 지원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재체험 프로그램(목재체험교실 16개, 목재 체험행사 2회, 지도자 양성 과정 1개) 등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목재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목재문화 체험장을 3개소 신규 조성,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책자를 발간하였다.

다) 향후계획

앞으로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산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목재 산업과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2010년은 2009년보다 국산목재 공급량을 120% 늘여 360만^m 공급하여 자급률을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산업용재 적기 공급을 위해 용도별 목재 생산을 추진하여 산업별 목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산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가공품을 시설하는 국산재의 활용 촉진사업 예산을 9억 원으로 3개소 추가 신설하여 국산재 이용을 홍보하고, 국산 원자재 구입 자금을 50억 원, 목재 가공장비인 목재 건조기, 제품 포장기 등 3종의 장비 구입비 4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지속적인 목재 공급이 가능토록 벌채 규정을 정비하여 친환경 벌채 제도를 마련하여 국내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6)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업사무관 김종선)

가) 시행배경

지속적인 국산목재 공급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입목 벌채 감소, 자국 원재료 보호 등으로 인한 수입 여건이 악화되어 원목 및 제재 부산물이 감소하였다. 임지 폐잔재, 사업장 또는 건설 폐목재는 파티클 보드의 원료, 열병합발전소 등의 목질 에너지원으로 재활용 되며 양질의 폐목재는 톱밥으로 가공하여 목재 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하여 목질 자원은 순환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폐목재 감소와 수입재 감소 등에 따른 제재 부산물 감소로 인한 원자재 경합으로 산업용 원료의 부족난이 심각하여 목재 재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섬유관, 파티클 보드 원료인 폐목재 구입을 위한 정책 자금을 35억 원,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 시설의 신·증설 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자금을 35억 원 규모로 지원하여 목재의 재활용 촉진을 추진하였다. 목재 이용 연장을 위한 보존처리 목재 품질 인증 및 친환경 보존처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목재 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다) 향후계획

2010년에는 폐목재 구입을 위한 정책 자금을 4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드류 시설 현대화 자금을 4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지 내에 버려지는 임목 부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전 목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공정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그 동안 경제성의 원리로 방치해 둔 임지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석 연료 대체를 통한 녹색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라.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사무관 이광호)

가) 시행배경

국토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 지역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생산기반의 미비, 생활환경의 열악, 인구의 과소화 등 도시 및 농촌에 비해 낙후 지역으로 전락됨에 따라 산촌 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농산어촌 현대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산촌생태마을 조성(구 산촌종합개발사업)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3개 산촌마을에 사전 설계비를 지원하였다. 지암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 마을이 설계되어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까지 총 2,943억 원을 투자(지방비, 용자포함)하여 204개 마을을 조성 하였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산촌 소득수준 향상, 인구감소의 둔화, 생활의 편리 등 직·간접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 원)

구분	계	2001년 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전설계	270	93	15	10	20	15	18	33	36	30
마을조성	204	47	12	34	15	10	20	15	18	33
투자비	294,352	85,059	24,327	26,852	16,225	20,364	25,683	29,391	31,392	35,059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다) 향후계획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예산편성권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녹색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촌생태마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목재이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시범 조성 중인 산림탄소순환마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사무관 조병철)

가) 시행배경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야외 휴양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산림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을, 도심에서 가깝고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자연휴양림은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33개소를 조성하여 이용자 수가 869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에는 1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개장할 예정으로 있다.

산림욕장은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 근교에 위치한 산림 안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탐방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과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9년에 1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146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0년에도 8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표 4-46>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운영 현황(2009년 말)

(단위 : 개소)

구 분	지 정 현 황		조 성 현 황		운 영 현 황	
	개소 수	면적(ha)	개소 수	면적(ha)	개소 수	면적(ha)
계	248	183,172	133	127,896	124	126,545
국유자연휴양림	85	182,753	39	107,221	38	107,042
공유자연휴양림	108	24,266	77	19,087	69	17,915
사유자연휴양림	55	6,415	17	1,588	17	1,588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표 4-47>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계	2004년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2,386	38,953	5,076	5,775	6,264	7,627	8,691
국유 자연휴양림	18,746	8,393	1,371	1,814	2,048	2,361	2,759
공유 자연휴양림	46,730	26,657	3,094	3,321	3,718	4,749	5,191
개인 자연휴양림	6,910	3,903	611	640	498	517	741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09년 말까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과 2010년도 조성 계획, 2017년까지 장기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48>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9년까지 조성	2010년 조성	2011년 이후
계	430	279	20	131
자연휴양림	180	133	12	35
산 립 욕 장	250	146	8	96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또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친환경적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기본계획은 중앙단위 10년 계획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 자원의 현황조사, 휴양패턴 및 수요예측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수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은 첫째 산림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확립, 둘째 자연휴양림 운영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농·산촌 등과 연계 강화, 셋째 다양한 투자주체를 통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넷째 공·사유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활성화 도모, 다섯째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프로그램 중심

으로 전환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품격 있는 맞춤형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ISO 9001/14001 시행 등 자연휴양림 운영절차를 표준화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 충족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림휴양포털시스템 ‘숲에 On’과 자연휴양림 예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휴양정보, 마일리지, 웹회원 마이페이지 구현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모두가 보다 질 높은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 향후계획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증가하는 국민의 산림휴양수요에 맞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자연휴양림 내 경관 상으로 표현되는 Hardware와 숲체험 등 운영프로그램 등 Software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통하여 산림휴양정책이 산림청의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으로 국민의 포지셔닝을 제고시키고, 한국형 산림휴양시설의 모델을 구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사무관 권태원)

가) 시행배경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른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격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유지하고 있는 산림 관련 문화 행사는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 교육·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과거 운영되었던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대중과 획일적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대상이 가족, 학생, 소외계층, 장애우 등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는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프로그램,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악스키·오리엔티어링 등의 산악레포츠 대회,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녹색교실 및 산림학교 운영, 숲속음악회, 숲과 문학의 만남 행사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산의 날’ 행사는 제9회를 이어오면서 지자체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산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국민들이 직접 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산림박람회, 숲 올림피아드, 우드락 페스티벌, 단풍 문화 축제 등을 통해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는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후원하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질의 산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 포털시스템(www.foreston.go.kr)을 산림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하여 전면적으로 재편하였다. 산림문화휴양 포털시스템 ‘숲에On’은 국민들이 산림휴양 정보와 백두대간·100대명산 등의 산악정보, 산촌관광 및 수목장림, 유·무형 산림문화자산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즐기는 숲해설서비스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숲에On」, 외국인을 위한 숲에On 영문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보 그리고 각 지역 및 테마별 각종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산림문화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방문자수가 3년 만에 평균 3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푸른숲선도원 육성 및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등 산림 교육·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산림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산림 내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고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림을 단순한 휴양공간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초·중·고교 학생 등 청소년과 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에게 올바른 산림관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녹색교육센터인 “숲체원”을 운영하여 월 평균 4,800명에게 다양한 숲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

며,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실행으로 산림 교육·문화 전문가의 자질 향상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교 시절부터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과서 내 산림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현행 교과서 및 새롭게 개발되는 교과서를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한편, 앞으로 개편될 교과서에 산림에 관한 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를 마련하여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사, 청소년 단체와 일선 학교 교사 등에게도 제공하였다.

다) 향후계획

산림청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을 통하여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산림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임업사무관 이상인)

가) 시행배경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은 우리나라 국민이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한국갤럽,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40% 정도가 한 달에 1회 이상 등산을 하고 있으며, 연인원 462백만 명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순위에서 등산이 최근 10년간 1~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산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등산 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등산로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무관심과 예산부족 등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등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말 연휴나 봄·가을철 등 등산 성수기에 지역의 유명 산을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되면서 많은 등산로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에

는 1,735개의 산에 4,290개 노선, 17,598km의 등산로가 있고, 이중 약 33%인 5,837km의 노선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인 등산로 이용패턴을 보면 등산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과다 이용은 등산로의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 등산로의 상태가 보행에 불편을 주게 되면 등산객은 그 노선의 주변에 샛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 산림훼손이 주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등산로의 이용 증가로 토양답압과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 자연적인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인위적인 수단을 활용한 등산로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산림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백두대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등산로를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 백두대간의 국유림지역 등산로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사업 범위를 이용도가 높아 훼손이 심한 도시 근교의 생활권 서비스 등산로까지 확대하여 2008년까지 총 828km의 등산로를 정비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총 1,173km의 등산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2) 등산로 정비공법 개선안 마련

친환경적인 등산로 정비를 위해 가급적 인공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지형지물을 충분히 활용하며, 경관보전과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산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인공적인 시설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계단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 토론회를 거쳐 확인하고 시행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등산로 정비공법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3) 등산로 공공디자인 개발·보급

등산로의 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이정표), 위치표지판 등 등산 관련 시설물들이 관리주체별로 디자인, 재질, 규격이 다를 뿐 아니라 정보의 내용도 제각기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산 관련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4) 등산로 실태조사의 지속추진

정확한 등산로 정보의 조사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숲길조사관리원 360명을 선발하여 전국 주요 산의 각종 등산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였다. 숲길조사관리원들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를 이용하여 등산로 전체 노선을 현지 측량하고 편의시설·훼손지 등 중요한 지점의 위치 데이터를 취득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등산로 분포현황 및 이용 빈도를 비롯하여 등산로 주변의 생태·역사·향토문화 등 관광 자원조사도 병행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국민들에게 등산로 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로 개발되어 국민들이 쉽게 찾고 알기 쉬운 사이트인 「숲에On」(www.foreston.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5)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등산학교 운영

자연친화적이고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등산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2008년까지 일반, 전문, 청소년 등 6개 과정, 총 7,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총 2,999명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10개 구간으로 확대하여 실시된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은 각 구간별로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산악회 등산전문가, 산림청 산악구조대원 등의 인솔로 400명의 중·고등학생이 4박5일간 백두대간을 답사하며,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6) 등산안내인 배치·운용

최근 지역산악회 등 모집산악회가 주관하는 단체산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등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은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적극적인 등산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늘어나는 등산인구 만큼이나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등산객이 안전한 등산을 지원하는 등산안내 서비스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등산안내인을 주요 명산에 배치하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산안내인은 등산학교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등산 관련 우수한 소양을 지닌 자 80여명을 우선 선발·배치하여 등산로 안내와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7) 한국등산지원센터 운영

등산교육 및 등산지원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설립한 한국등산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장애인·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등산교육과 등산로 모니터링, 셋길등산로 실태조사, 등산시설의 표준화,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등산지원 사업을 펼쳐,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등산 활동을 돕고, 안전한 등산 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8) 등산문화캠페인 전개

등산인구의 급증에 따른 산림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국 각 지역의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민·관, 교육계까지 합동으로 실시하여 범국민 확산에 주력함으로써 국민들이 산행활동 시 지켜야할 등산문화 인식을 제고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보전적 활용’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에서부터 등산교육 등 등산문화에 이르기까지 등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문의 정책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자연체험형의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을 오르내리는 수직적 개념의 등산이 아닌, 자연의 생태·향토 문화 등을 체험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걷기 문화로 발전하는 수평적 개념의 숲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리산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산림휴양등산과 서기관 염종호)

가) 시행배경

전국의 묘지는 2천여만기로 국토의 1%에 해당하는 998km²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주택부지 면적(2,177km²)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마다 서울 여의도 크기만한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묘지들은 주로 경관이 좋은 산자락에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해 산림훼손은 물론 산사태, 토양 침식,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파괴로 연결된다.

따라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수목장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수목장은 장묘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인공시설물이 필요 없는 장묘제도로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고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고려대학교 연습림에서 치러지면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수목장을 장사제도의 하나로 도입하게 되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는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시간과 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사제도를 바꾸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우선은 제도적 틀을 갖추어 놓고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목장 제도를 우리 장사제도의 하나로 제도화하는 한편, 국가가 직접 시범사업을 통해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다.

(1) 수목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5.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목장이 장사제도의 하나로 도입되어 2008.5.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동안 수목장의 난립 방지와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조성허가 면적,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제도화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4호에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하여 녹색자금으로 수목장림의 조성·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산지관리법」을 개정(2007. 7)하여 임업 및 공익용 보전산지 안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2008.7.24)하여 산지전용 허가 대신 산지전용 신고만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완료하였다.

(2)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 개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수목장림의 조성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묘지 관련 재단법인에서 수목장림을 성급히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수목장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산림의 파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에 위치한 55ha의 국유림 중 일부인 10ha에 모델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2007년 5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안내센터, 임도개량, 추모로 및 추모광장 조성 등과 함께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의 설치, 추모목 선정 및 DB 구축 등을 2년여 공사 끝에 2009. 5. 20일 개원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산림청에서는 하늘숲추모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정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2009. 2. 26일에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또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국유 수목장림을 운영할 수탁자로 산림조합중앙회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국민공모를 통해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을 『하늘숲추모원』으로

제정하고 이를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하늘숲추모원』은 ‘사후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추모목 2009그루의 37%를 차지하는 749그루가 사용계약 체결되었고 이 중 609그루에 776위의 골분이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견학한 사람만 3만여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사용계약 완료시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앞선 것으로 수목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향후계획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조성한 하늘숲추모원을 조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장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고 최초로 국유 수목장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료집을 만들 계획이며, 하늘숲추모원의 조성메뉴얼을 정리하여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을 발간하여 수목장림을 보다 쉽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늘숲추모원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서는 그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수목장전문가, 사단법인 수목장실천회 회원뿐 아니라 일반시민, 산림관계 종사자 등이 참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수목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와 함께 수목장 실천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무허가 사설수목장림을 뿌리 뽑아 건전한 수목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가)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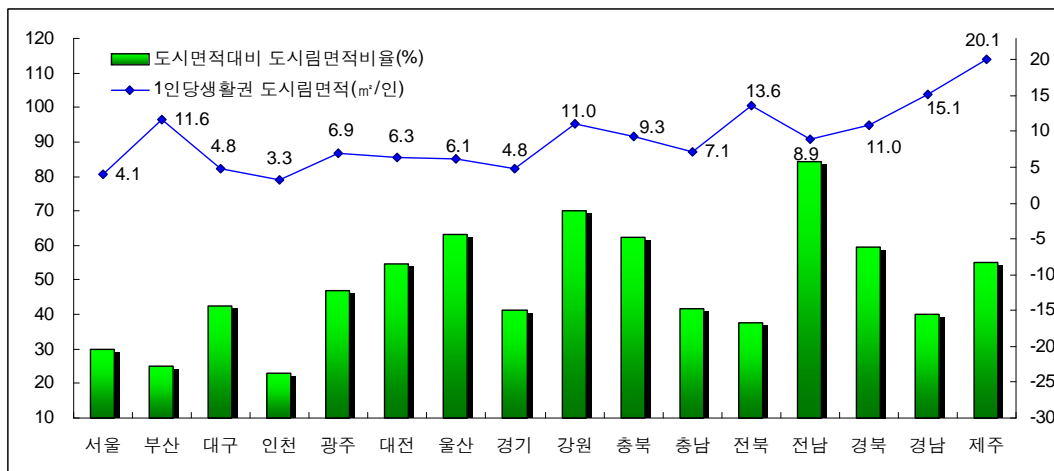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조백수)

(1) 시행배경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생활권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광역시인 경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평균 5.4m²로 런던(27m²), 뉴욕(23m²), 파리(13m²) 등 선진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웰빙문화 확산과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도시녹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숲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심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녹색쉼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 내 녹색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11] 생활권 도시숲 현황(2007년 말)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그러나 도시지역은 높은 지가(地價)등으로 도시 내 숲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 자투리땅,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새로운 숲 조성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도시숲의 관리·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서비스업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하여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도시지역의 숲은 생육환경악화, 대기오염, 무분별한 사용·관리 등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대다수 도시숲은 각종 개발로 인해 콘크리트 건물들 속에서 고립·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하여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한계가 있었

<표 4-49>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성요소

요소	형태	종류	기능
핵	대규모 숲	산림, 공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권 도시 경관·환경 개선 ·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 · 시민들의 당일 체재형 휴식공간
중거점	중·소규모 숲	학교숲, 녹지, 비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권 도시 환경 개선 · 소형생물종의 서식처 또는 휴식처 ·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소거점	독립된 수목 또는 소규모 숲	정원수, 자투리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거주 환경 개선 · 생물종 휴식처 ·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선 통로	선형의 폭과 넓이	가로수, 하천변녹지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의 연결 요소 · 경관의 개선, 미기후의 조절 등 · 생물종의 이동통로, 생물 서식처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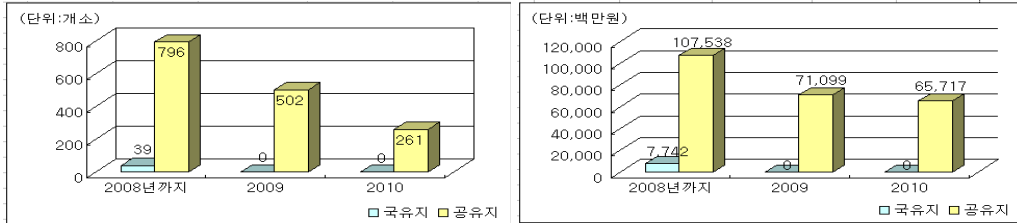
다. 따라서 도시숲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곽의 산림을 선적 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야 한다.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이처럼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숲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시내부와 도시외곽의 산림을 선적 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를 통해 연결하고, 도심지 내부에는 도시숲, 산림공원, 학교숲 등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과 유기적 상호연결성을 가지게 하여 순환형 녹색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국유지 도시숲은 2008년도까지 3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은 매년 사업량이 확대하는 추세로 2009년까지 1,298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그림 4-12]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현황(2009년 말 현재)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3) 향후계획

도시숲 조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수립 등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 중이다. 특히, 도시숲조성 확대를 위해 산림서비스팀을 매수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부지마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정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모델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나) 가로수 조성·관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임원필)

(1) 시행배경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도시내 녹색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형녹지이다. 가로수는 도시숲과 하천·공원 등 흩어진 녹지공간을 수렴대로 연결하여 동물이동통로 및 생물서식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도심지 내 녹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녹음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며 소음 방지 및 유해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등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가로수는 그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로수 관리업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부속물로 관리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02.1.2. 산림청 예규499호)’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 왔다. 또한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적 충돌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제정·고시(2006.8.8, 산림청 고시 제 2006-58)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10년 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도시의 선형녹지축으로 녹지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표 4-50> 최근 4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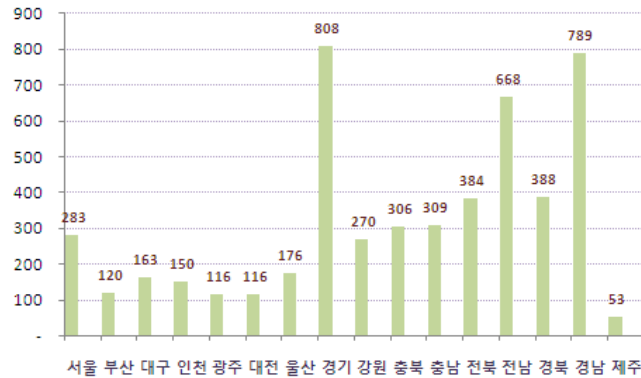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장거리(km)	4,930	1,002	1,150	1,478	1,300
본수(천본)	1,030	253	206	292	279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가) 가로수 조성

전국의 가로수는 2009년 말 현재 5,098천 본(33,809km)으로 2008년 대비 279천 본(1,301km)이 증가하였으며, 수종별로는 벚나무 23%, 은행나무 20%, 버즘나무 6%, 느티나무 6% 등이며, 경기도가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경남, 전남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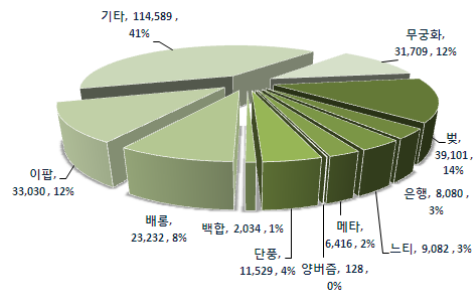
[그림 4-13] 가로수 시도별 현황(2009년 말 현재)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신규조성은 2003년 이후 매년 약 1,000km²씩 증가하고 있으며 조성 시 가장 많이 식재하는 수종은 벚나무 14.0%, 이팝나무 11.8%, 무궁화 11.4%, 배롱나무 8.3% 순이었다. 은행, 버즘, 느티 등 기존의 주요 수종의 식재가 감소하는 반면, 이팝나무, 무궁화, 백합나무 등의 식재가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는 추세이다.

[그림 4-14] 수종별 신규조성(2009년 말 현재)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나) 생육환경 개선 등 사후관리

가로수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조성된 가로수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협소한 생육공간 및 부적절한 토양으로 뿌리발달 및 생장이 극히 저조하여 가로수로서의 정상적인 기능발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수목생장을 도모하고 투수층의 확대 및 관목식

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2007년부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대상지에 대하여는 2008년 9월 공모를 통하여 9개 시·군·구의 지원 대상지를 확정하였다.

[그림 4-15]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다) 가로수 수형관리 등 가로경관 창출

산림청에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앞으로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표지판과 간판 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의 가지치기를 실시해 몸통만 앙상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상가 간판가림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09년 '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지역 랜드마크화 방안이 행안부 주관 국민생활공감 정책과제로 채택('09. 7)되어 가로수가 도시환경의 하나의 요소를 넘어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미관과 경관을 살리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도시랜드마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핵심공간으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6] 특색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해외사례



[그림 4-17]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모식도

자연형	준자연형	인공형

(3)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가로 녹지의 양과 질 증진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로수의 관리주체가 되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 학교숲 조성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조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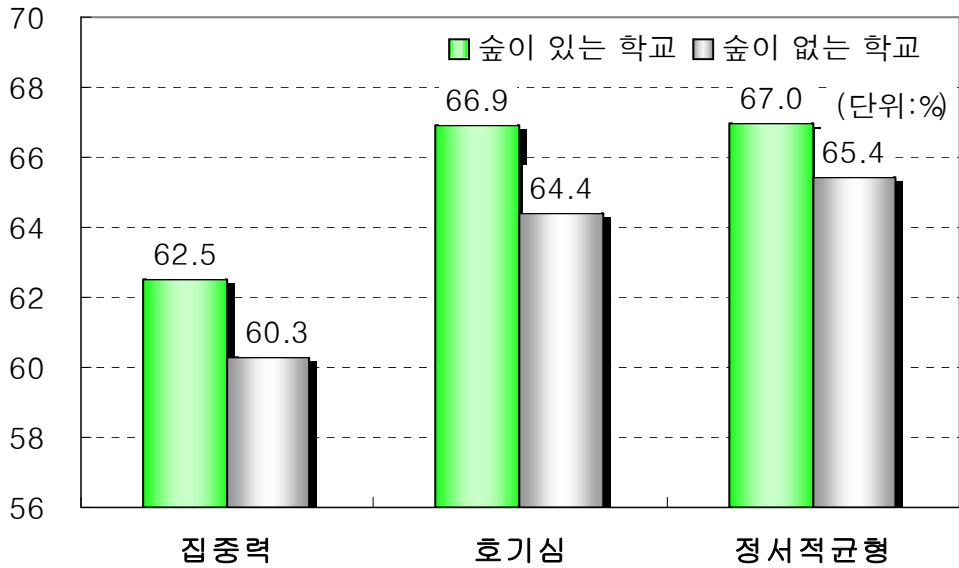
(1) 시행배경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공간을 활용한 숲을 조성하여 학교육외 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량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환경친화적인 태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학교숲은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는 최적의 공간이며, 생활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숲을 조성하여 녹색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18] 학교숲이 미치는 영향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 시행내용 및 성과

학교숲 조성사업은 1999년 민간단체인 (사)생명의숲에서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산림청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총 810개 교에 학교에 숲을 조성하였다.

학교숲 조성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단순한 녹지조성의 개념을 벗어나 학생,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숲의 운영·관리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학교구성원과 지역구성원의 연대 강화로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표 4-51> 학교숲 조성 실적

(단위:개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규학교	10	20	24	15	127	105	79	116	120	85	109
누적학교	10	30	54	69	196	301	380	496	616	701	810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생명의 숲에서 대행해오다 희망학교의 증가와 더불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전국 조직망을 갖춘 산림조합중앙회로 사업 대행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생활권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늘려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서기관 이치명)

가) 시행배경

WTO(세계무역기구)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이어 제9차 다자간 통상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통상협상이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DDA 농업협상은 UR협상 타결 당시 UR 협상 종료 후 자동으로 재협상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비농산물(NAMA: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환경, 지재권,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분야에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2002

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4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DD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9월 칸툰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 한동안 협상이 공전되기도 하였으나 2004년 8월 자유화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 Agreement)이 합의되면서 협상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를 홍콩에서 개최하여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시도했으나 농업협상은 수출·수입국간의 대립, 비농산물(NAMA)협상은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 인도·브라질 등 개도국 간 입장차로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2006년 7월에는 국내보조 감축에서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세부원칙 도출이 불가능해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모든 분야에서 DDA 협상 중단(suspend)”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소규모각료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DDA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재개되었다. 2007년 4월에는 농업, 비농산물(NAMA), 규범 의장들이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의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개정하면서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진전을 기초로 2007년 7월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2008년 2월, 5월, 7월, 12월 4차례에 걸쳐 의장 수정안이 배포되었다.

특히, 2008년 7월말 라미 사무총장이 전격 소집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몇몇 쟁점에 대해 인도, 미국 등 일부 국가 간의 의견대립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어온 상당수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2009년 상반기에는 미국 Obama 행정부 출범, 인도 총선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G8 확대 정상회의(7.8-10, 라퀼라) 및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9.24-25)에서 2010년 DDA 타결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OECD, APEC 등 일련의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9월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DDA 고위급 회의에서는 '09년 말까지의 협상 분야별 작업계획(Road Map)을 도출하고 10~12월 매월 1주일씩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잔여 쟁점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11.30~12.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활동전반을 점검하고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구하였으며, 153개 WTO 회원국들은 결집된 정치적 의지와 분야별 작업 계획을 기초로 '10년 DD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향후 계획

DDA 협상 임산물 품목은 354개(HSK 2006)이며 농업협상 대상품목은 1류~24류에 포함된 단기임산물 108개, 비농산물협상(NAMA) 대상품목은 25류~94류에 분류된 목재류·석재류 246개가 협상대상 품목이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 폭, 관세상한 설정, 민감품목, 특별품목 인정,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등이, 비농산물(NAMA) 협상에서는 관세감축공식, 미양허 품목(합관, 섬유관, PB 등) 처리문제, 분야별 무세화(Sectoral Liberalization) 논의(임산물 sectoral 협상), NTB 신속해결메카니즘, 수출허가 투명성, 수출세 등 비관세장벽(NTBs) 해소 문제가 주요 협상쟁점이다.

산림청은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협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업인, 학계, 단체·협회, 생산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 대만 등과 공조하며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 FTA 협상에 적극 대응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서기관 이치명)

가) 시행배경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로 특정국가 간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통상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FTA를 확대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02.10월 한·칠레, '04.11월 한·싱가포르, '05.7월 한·EFTA, '06.4월 한·아세안 FTA를 타결한 후, '07.4월 한미, '09.7월 한·EU FTA, '09.8월 한·인도 CEPA를 타결하였다. '09년 현재 뉴질랜드, 호주, 페루, GCC,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0년 상반기에는 한·터키 FTA 및 한·중·일 FTA 산관학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다) 향후 계획

임산물 협상 대응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영향을 분석하고 생산자, 전문가, 학계, 임업단체 등 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임산물 FTA 협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 등에서 국내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상품 및 원산지분과, 해외조림 등 투자 활성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분과, 임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협력 확대 및 원목 등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협력분과 등에 앞으로도 적극 참가할 계획이다.

3) 해외조림 확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사무관 한창술)

가) 시행배경

1992년 리우환경회의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천연림의 벌채규제 강화로 목재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 시장안정을 위한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목재의 단순수입 의존은 국민경제의 기본적인 수요가 외국자원에 종속됨으로써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조림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목재수요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조림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을 목표로 1993년부터 해외조림 정책자금 용자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 11개국에 18개 기업이 진출하여 207천ha의 조림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조림 확대를 위해 해외조림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조림 및 육림 사업비로 2009년까지 846억 원을 용자지원 하였으며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 144백만 원이던 해외조림 사전투자환경조사비 지원을 2008년도부터 250백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조림한 지역에서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등 속성수의 생산이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까지 펄프용 칩 366천 BDT(845천m³) 물량이 국내로 도입되었다.

아울러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해 산림자원 부국이며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2006년 8월 1일 「한·인도네시아 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등의 임업협력 강화를 통해 50만ha의 조림대상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하여 2009년 3월 6일 「한·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조림대상지로 20만ha를 제공 받아 2010년 현재 5개 기업이 23만ha에 대하여 사업허가 취득을 진행 중이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1만ha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중이다. 이와 같이 산림청은 해외조림 사전투자환경조사비 지원, 용자금리인하(3%→1.5%) 및 산림자원보유국과의 양자협력 확대(2009년 현재 11개국), ODA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실시를 통한 산림녹화기술 전수 등과 같은 해외조림 투자 지원정책 확대를 통해 해외조림 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다) 향후 계획

해외조림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2008~2017)」을 수립하여 해외조림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정책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기반구축을 통하여 2017년까지 25만ha의 해외조림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의 목재공급을 위한 산업조림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조림 등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삼성물산, LG상사 등 대기업의 사업 참여로 해외

산림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원료와 탄소배출권 확보 등 친환경 자원개발의 새로운 수요처인 해외조림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6. 수산업

가. 연근해어업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어업정책과 사무관 권용철)

가) 시행배경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조 4,711억 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5,399척을 감척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어선세력은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10~37% 정도 과도한 실정에 있다.

수산동·식물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 감척사업으로 연안어선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4,706억 원을 투입하여 12,896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3,562억 원을 투입하여 2,503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 원을 투입 1,308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국제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인 반면, 감소추세에 있던 어업자원량

과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1994년 이후 적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 연근해어선 척수 : ('00) 68,629척 → ('09) 53,799척으로 21.6% 감소
- ※ 자원량 (만 톤) : ('90)835 → ('94)801 → ('00)768 → ('05)783 → ('09)831
- ※ 어획량 (만 톤) : ('90)154 → ('94)149 → ('00)119 → ('05)110 → ('09)123

적당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17.3M/T이었으나 2009년에는 22.9M/T으로 32.3% 증가하였으며, 적당 어로수입은 2000년도 3,390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6,770만 원으로 99.7% 증가하였다.

- ※ 적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적당 생산량 : ('00) 17.3M/T → ('09) 22.9M/T
 - 적당 어로수입 : ('00) 33.9백만 원 → ('09) 67.7백만 원

다) 향후계획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어업구조조정 참여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52>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소요

(단위 : 척)

구 분	연 안	근 해	계
총어선척수('93년 기준)	63,046	5,564	68,610
적정 어선세력	37,995	2,342	40,337
적정 감척 척수※	25,051	3,222	28,273
'10년 이후 필요 감척수	12,000	719	12,719

- ※ 적정 감척 척수 : 연구용역 이전 실제 감척수 + 연구용역 이후 필요 감척수
 - 1) 연안 필요감척수 : 13,771척('08년 말 53,792척의 26%) 감척 필요('10년 연구용역)
 - 2) 근해 필요감척수 : 1,280척('06년 말 3,622척의 35%) 감척 필요('07년 연구용역)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어업정책과 주무관 오성현)

가)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동·서·남해가 해양환경 특성이 상이하고 어구어법도 지역별·해역별로 다양하여, 동일 수역에서 여러 업종이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른 지역간·업종간 어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UN해양법 발효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가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수산자원관리법을 마련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2009년까지 8,475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207천ha를 시설하였고,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09년까지 878억 원을 투자하여 1,150백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또한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 15개 국·도립 배양장에서 신품종 종묘생산기술 및 방류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배양장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2006년부터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에 대해 과학적인 자원조사·평가를 토대로 어업인 등과의 협의를 통해 동 어종에 적합한 자원회복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2009년에는 411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4.7ha를 시설하고 국·도립 배양장에서 지역특산종묘를 생산·방류하였으며, 151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종묘 약 104백만 마리를 매입하여 연안에 방류하였다.

또한, '94년부터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감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연근해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여 어업구조개선 시책과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매 5년마다 어업자원과 어업경영 실태 등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금번조사는 2008년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2010년도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시도별·어선규모별·어업별 어획실태, 어장이용 수준 및 어기별 어획상황

에 대한 조사와 어종별 주 조업어장, 어업별 사용어구 규모, 어구·어법 변화상황, 어획물 체장조성, 생식소 속도지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추정(ABC) 등의 어업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다) 향후계획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어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및 어린고기 보호, 혼획을 저감방안 등 어종별 관리방식에 의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으로 추진코자 연구 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어·혼획을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어구·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업에서 발생된 폐어구에 의해 어업자원이 감소하고,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틸렌 등) 재질의 친환경어구(PBS, Polybutylene succinate)를 개발하여 2007년부터 자망 및 통발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2007년 대비 90% 확대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후, 친환경어구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어구의 성능과 품질 및 생산단가를 최소화하여 저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아울러 친환경어구의 사용에 따른 경제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원관리 증대효과 및 사용 후 어구처리에 대한 정책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5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 명)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획
소요예산	20	43	39	40
지원척수	150	200	253	262

나. 해면양식어업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중건)

1) 시행배경

세계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 생태계 기반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면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이 쇠퇴하고 외해의 대규모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내만중심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한 새로운 양식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외해양식어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2005년부터)와 경상남도(2006년부터), 전라남도(2007년부터), 강원도(2008년부터), 경상북도(2009년부터), 전라남도(2010년부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총 6개소 시험어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개(전남, 제주)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친환경 고부가가치 외해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외해양식어업 6개소(참다랑어 4개소, 일반어류 2개소)를 개발하고 참치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만들었다.

한편,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9년도에 42,958백만 원(일반회계 7,313 농특회계 18,502, 광특회계 4,034, 수발기금 13,109)을 지원하였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7,000백만 원,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지원 5,100백만 원, 기타 수산물 위생관리 등 18,502백만 원이었다.

광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및냉동망보관시설 1,000백만 원,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지원 550백만 원, 적조방제사업 808백만 원,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626백만 원 등 4,034백만 원이었다.

수발기금 사업내용은 양식어업시설지원 8,105백만 원, 생계소득및안정자금 99백만 원, 출하조절 4,200백만 원 등 13,109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3) 향후계획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원-원 전략으로 내만은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과 천혜의 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써 WTO,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0년도에는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 및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55,628백만 원(일반회계 9,742 농특회계 30,268, 광특회계 4,039, 수발기금 11,579)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다. 내수면어업

(자원환경과 서기관 임남철)

1) 시행배경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추세에 있다. 점차 양식수산물의 양식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HACCP)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남획과 수질오염, 골재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어류가 멸종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낚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 활동의 공간으로써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향후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업화와 휴식공간으로써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표 4-54> 낚시어업권 현황

(단위: 권)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허 가	550	522	498
신 고	192	175	211
무신고	146	137	144
합 계	888	834	85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2) 시행내용 및 성과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시설 지원, 토종 종묘보급을 통하여 어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2009년도에 4개도 15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19]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 인제군 남면 상하수내리(소양호)



▶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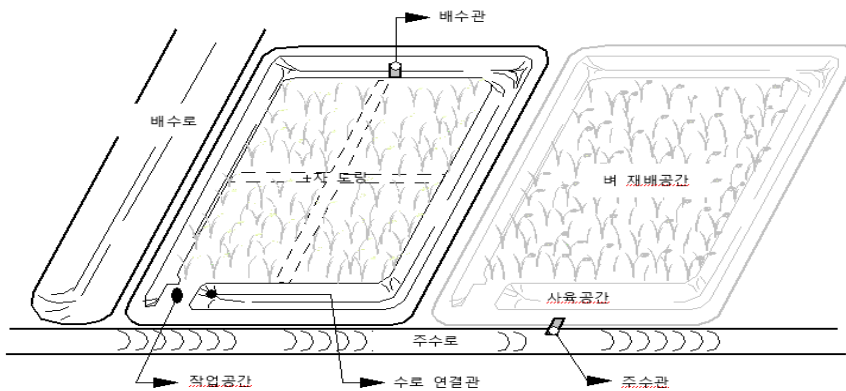
나)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지원

회·매운탕 등 1차 소비에 한정된 내수면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훈제, 분말, 죽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민물고기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어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식품산업 육성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어 2009년도에 전라북도 익산에 자라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였고, 향후 메기, 뱀장어 등의 가공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 토종종묘보급사업 추진

수입산 종묘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어류에 대하여 외국산과의 가격우위를 점하고 양식어가에 저렴한 종묘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양식어류의 안정된 가격과 생산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민물고기를 접하고 어업인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우선 미꾸라지 종묘생산을 위한 개발을 시작으로 참게, 붕어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을 시범 추진하여 물고기를 키우면서 친환경농업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20] 논 생태 양식 개념도



2007년부터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강·하천의 레저인구가 늘어나고, 내수면 어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수산자원 증강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내수면 양식기술의 지속적인 개

발로 더욱더 고품질의 양식어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3) 향후계획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민물고기의 멸종위기까지 초래하였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건강보양식으로 선호한 민물고기가 소비가 부진하고 소비층이 다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보양식인 민물고기 명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내수면어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어업인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 원양어업

(원양정책과 사무관 박영호)

1) 시행배경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변국가와의 경쟁심화, 어업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 및 인프라 약화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 명예수산물 지정·운영, 원양산업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원양산업 통계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수산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어업인프라 확대를 통해 원양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 연안국과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연안국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맞춤형 자원외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식량자원 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수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새우양식장 건설을 용자지원 하였으며, 원양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교민 4명을 명예수산물관으로 위촉하여 연안국의 각종 수산정책 및 투자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3) 향후계획

그간 일부업체들에 의해 소규모 해외수산자원개발 등이 추진되었지만 생산·가공·유통이 융·복합화된 해외수산자원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며, 보유 원양어선의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원양어선들의 노후화도 심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도 2개소의 해외수산시설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며, 명예수산물관을 확대·운영하여 어업자원보유 연안국들에 대한 수산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한편, 원양산업에 대한 현황, 생산량, 종사자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 실시될 원양산업 총 조사에 대비할 계획이다.



제 5 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수열)

1) 시행배경

2000년대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수 개의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권역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 시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 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고자 한다. 지원 금액은 권역당 3~5년간 40~70억 원(국고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행정리 수, 가구 수 등 권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총 5,821억 원(국고 4,541, 지방비 1,280)을 투입하여 176개 권역

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고, 45개 권역은 2010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5-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권역, 억 원)

구 분		합 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사업비 계		5,821	2,310	1,639	1,872
기본계획수립	사업량	221	136	40	45
	사업비	324	196	60	68
사업시행	사업량	176	96	136	176
	사업비	5,497	2,114	1,579	1,804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 방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권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권역별로 현장에서 자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마을개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사업참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발전방안을 토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2009년도는 2007년도에 착수한 20개 권역에 대하여 1단계(1~3년차)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 결과 상향식 사업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열정적인 마을리더 등장과 쇠퇴하였던 지역공동체가 부활하고, 새로운 스타권역 등장과 소규모 상향식 사업 추진 경험을 인근 마을로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어 방문객 및 인구증가로 권역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부족과 경험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업참여 주

체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계획

앞으로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처음 착수한 36개 권역이 2009년에 준공됨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준공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마을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신지역발전정책에 따라 204개의 지역개발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각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지역개발과 서기관 김동권)

1) 시행배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정비·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부터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해오다 2008년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정주면 개발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205개 면 지역 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61개 오지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 53개 면 및 무인·무면사무소면 10개 면을

제외한 781개 면과 광역시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추진 기간 및 지원액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23,910억 원을 투자하여 796개 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에 면당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오지면 개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1990년부터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여 왔으며, 제1차 10개년계획(1990년~1999년), 제2차 5개년 계획(2000년~2004년)을 거쳐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였다. 2005년부터 361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2005~2009)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다) 정주면과 오지면 개발사업의 통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각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2006년도 8월 관계 장관의 업무이관에 합의함에 따라 2007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3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여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정주면 개발)과 유사한 오지종합개발사업(오지면 개발)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어촌 1,142개 면 지역과 광역시내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마을 내·마을 간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마을기반정비 부문, 세천 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등 경관개선부문, 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복지부문에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550개 면 지역에 3,14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 내 도로 434km, 상수도시설 16개소, 하수도시설 85개소, 마을 간 도로 267km, 교량 57개소, 승차장 3개소, 공동주차장 19개소, 마을·복지회관 등 95동, 공동이용시설 49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켰다.

아울러,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의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였다.

3) 향후계획

2009년까지는 농촌주민의 기초생활여건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1,157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기본수요 차원의 기초생활환경정비를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현행 면 단위 균등지원방식을 일반농산어촌개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0개 시·군 단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군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408개 면 지역에 2,35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 내 도로 569km, 상수도시설 9개소, 하수도시설 72개소, 마을 간 도로 130km, 교량 45개소, 승차장 5개소, 공동주차장 34개소, 마을·복지회관 등 113동, 공동이용시설 31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개발과 서기관 김동권)

1) 시행배경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7.2%를 크게 상회하는 18.7%를 나타내고 있으며, 86개 군 중에서 57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심각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워진 한편,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및 삶의 질 중시 경향이 대두되면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농촌의 도시인구 유입수요를 연결하여 농촌인구를 증가시킬 시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의 농촌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300지구를 조성하여 8,400세대를 유치 할 계획이다.

<표 5-2> 도시민의 연도별 귀농현황

(단위: 세대)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귀농세대 수	880	885	1,302	2,384	4,08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통계자료

2) 시행내용 및 성과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 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규모에 따라 10~30억 원(국고 70%, 지방비 30%)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으로 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국고 212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인구 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원마을 계속사업 50지구와 신규 착수 14지구를 포함한 64지구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사업의 내실화 강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을 제안 할 경우에는 전원마

을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종전에 20가구이상 49호 이하까지 추진 할 수 있던 것을 2009년 신규 사업지구부터 주택을 일괄건축하고 주택건축 관리, 시공 회사의 사업이행 보험가입 등 사업의 안정성 담보계획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마을기반조성과 주택건축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가 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였다.

나) 제도개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에서 마을정비조합 등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수용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5-3> 전원마을조성사업 연차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 원, 개소)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자 사업비	1,682	27,710	26,000	23,063	10,272	21,177
조성마을 수	2(2)	22(24)	24(48)	11(59)	32(91)	14(105)

※ (괄호) : 누계

3) 향후계획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3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82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105개소의 전원마을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전원마을 계속사업 42지구와 신규 착수 17지구를 포함한 59지구에 223억 원을 투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 등을 적극 유인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가) 모니터링 추진

2010년부터 교수 등 민간전문가에 의한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구는 사업을 취소하는 등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나)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시·군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계획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업무, 자격, 임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계획이다.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수열)

1) 시행배경

면 단위 농어촌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우물·계곡수 등 자연수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해결 의존하고 있으나, 우물·계곡수 등은 가뭄 시 쉽게 건천화되고, 생활오수·축산폐수·기타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양질의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면 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 지하수를 개발하고 정수시설, 송·배수관, 물탱크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 시 농업용수까지 공급하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2004년까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1994~2004)사업으로 4,751개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20호 이상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2,309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제2단계(2005~2012)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자연마을 총 7,060개소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367억 원(국고 294, 지방비 73)을 지원하여 219개소를 개발함으로써, 2009년까지 6,061개소를 완공, 388천 가구, 1,173천 명에게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24,300ha에 공급할 예비 수자원을 확보하여 가뭄 시 한해 대책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표 5-4> 상수도 보급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총대상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전 국		50,394	46,733	72.7	
도시	특광역시	22,825	22,762	99.7	99.1
	시지역	18,013	17,702	98.3	
농촌	읍지역	4,245	3,738	88.1	65.6
	면지역	5,311	2,531	47.7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연보, 2008년

3) 향후계획

2010년부터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신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204개의 지역개발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따라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도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각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환경부 생활하수와 사무관 조석훈)

1) 시행배경

최근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가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하수도 서비스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그간 대도시 중심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미흡하여 도·농간 하수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5> 하수도 보급률

(단위: %)

연도	2006	2007	2008
전국평균	85.5	87.1	88.6
농어촌 지역	42.9	45.7	49.2

자료: 환경부 생활하수과, 하수도통계 2009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하수처리 시설계획 중에서 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소하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07~'10년 4년 간 1,491개 시설에 대해 국고 8,170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마을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를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하천 수질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표 5-6> 연도별 예산 반영현황(국고)

(단위: 억 원, 개소)

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비	8,170	1,910	1,825	2,402	2,033
개소수	1,491	452	408	356	275

3) 향후계획

'09.12월 수립한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09.12)'에 따라 2020년까지 26,268백만 원을 투자, 소규모 하수도 시설 3,707개소(신설, 개량 포함)를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바. 읍 지역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중추 소도시로 육성

1) 시행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읍 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의 자족적 생산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읍 지역의 특성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간 전국의 194개 소도읍에 총 12조 원(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 부처 국비와 민자 8조)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사업, 유통시설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지역경관정비, 중심상가현대화, 관광활성화사업 등을 시군 자율계획에 의한 수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에는 55개 읍에 4,078억 원(국비1,322, 지방비 1,995, 민자 등 761)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개선사업, 농수산물 유통센터조성, 근린생태공원정비, 중심상가 정비, 지역경관조성, 녹색 도시환경 조성, 해양박물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에 선정된 경기도 장호읍 등 23개 소도읍을 완공하고, 전남 담양읍 등 32개 소도읍은 추진되고 있다.

소도읍사업은 최근 5년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 평가 결과 지역개발 분야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되어 지고 있다.

3) 향후계획

소도읍육성사업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광형·자원보유형·해안어업형, 교육·문화형, 접경지역 등 콘텐츠를 개발하여 읍을 경제, 사회, 문화 등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 관련법률(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추진하던 것이 2010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포괄보조금의 기초생활권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로 나누어 사업추진을 주관하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기 지정되어 종합육성계획이 완료된 읍을 대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추진은 3개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의 할 것이다.

189개 지방 소도읍 부처 간 분담 현황

- 행정안전부 : 특수상황지역 17개 읍(완공 5, 추진 중 6, 미선정 6)
-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농산어촌지역 158개 읍(완공 58, 추진 중 50, 미선정 50)
- 국토해양부 : 도시활력증진지역 14개 읍(완공 3, 추진 중 2 미추진 9)

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학조)

1) 시행배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976년부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7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조정제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이관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운영하여 2008년에 총 6,000동(사업비 2,40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물량을 확대하여 총 7,000동(2,800억 원)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지원하였다.

<표 5-7>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동, %, 백만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물량	5,600	6,000	7,000
세대당 용자한도액	40	40	40
용자재원	224,000	240,000	280,000

3) 향후계획

2010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용자한도액 및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총 8,000동 (사업비 4,000억 원)의 자금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 당 용자 한도를 확대하여 농어촌의 노후 또는 불량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는 세대 당 5,000만 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 또는 증축 시에는 세대 당 2,5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조건으로 용자할 계획이다.

향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김경호)

1) 시행배경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사업은 농촌주택의 전통성을 유지·보전하면서 현대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 농촌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체류형 관광객의 민박활용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사업추진

2009년도 사업추진은 6개 마을 33농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300백만 원으로 마을 당 50백만 원 지원하였다. 방, 화장실, 싱크대 설치 등 주택 내부의 기본적인 리모델링과 온돌설치, 단열보완, 화목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사용을 최

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강원 삼척, 충북 옥천은 공동 설계용역 후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고 기존의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는 본 사업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담장 개보수, 맷돌 디딤돌 및 텃밭 울타리설치 등 주택 외부의 옥외공간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였다.

나) 현장교육 및 컨설팅 추진

전문가 현장컨설팅은 2009년 5월 18일~27일 6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시공업체,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시공 시 일반사항 및 감독요령과 환경친화적인 건축재료 사용, 에너지와 자원절약을 위한 신기술, 고품화를 감안한 건축 활용요소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수혜자 만족도 및 사업효과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91%, 공간이용의 편리성이 100%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90%이상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답변했으며, 시공비용에 대해서는 저렴하다 30.3%, 보통이다 45.5%, 비싼 편이다 9.1%로 나타났다.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사업은 농촌주택을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갖추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농가의 주거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농촌 체류형 관광객들의 민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향후계획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쾌적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은 편안한 삶과 즐거움 그리고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2004~2009년 총 47개 마을 252농가로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2010년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등의 심층조사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 저에너지 농촌주택에 대한 확대를 고려하여 농촌주거환경

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1)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주무관 남궁선)

가) 시행배경

농어촌 지역에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확보하고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정액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2,172억 원(국비 기준)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01억 원을 지원하여 13개 지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율(소각, 매립, 재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각열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회수로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급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2014년까지 449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83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62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를 추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사업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주무관 박대현)

가) 시행배경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하여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

질오염을 방지하고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988년부터 2009년까지 1,201억 원(원인자 포함)을 투자하여 132개 처리시설의 설치(시설개선 포함)를 지원했으며, 2010년에는 202억 원을 투자하여 24개소 추진중(총인시설 11억, 7개소 포함)에 있다.

다) 향후계획

2013년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신규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2012년에는 30개소(계속사업:14개, 신규 사업:16개)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3)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주무관 김현주)

가) 시행배경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정 처리 배출하거나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환경부에서는 동 공공처리시설의 신규설치 및 노후 시설 개선 시 사업비를 국비 지원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총 6,897억 원(국비 기준)을 투자하여 전국에 68개소(11,570m³/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26개소(2,615m³/일)의 시설을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아울러, 상주 등 14개소의 퇴·액비화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2012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화 처리형 공공처리시설을 2012년까지 20개소('09년 말 6개소 운영 중)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김영아)

1) 시행배경

우리 농촌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농촌고령화 대책이 절실하다.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상부상조 공동체 문화를 이용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농촌노인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였다.

<표 5-8> 연도별 65세 이상 농가인구 고령화율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 감	증감률
농가인구	3,304	3,274	3,187	3,117	-69.4	-2.2
65세 이상 농가인구	1,018	1,052	1,060	1,067	7.2	0.7
농가 고령화율※	30.8	32.1	33.3	34.2	0.9%p	
전체 고령화율	9.5	9.9	10.3	10.7	0.4%p	

※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자료 : 통계청, 농어업조사결과, 2009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조성을 위하여 농촌 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평생학습·사회활동,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 노인의 체력과 능력에 알맞은 소득활동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이 사업을 신청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고,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마을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추

진을 위해 교육, 연찬회,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우수실천마을 경진, 평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05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44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1,0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노인의 여가 활동을 촉진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연찬회 및 컨설팅 추진

사업 추진의 효율화와 정보교환을 위한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수 등 전문가, 중앙·도·시군의 사업담당자가 합동으로 마을 단위로 사업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연 2회, 29개소)

다) 홍보활동

한·중·일 노인친선문화예술제 참가, 우수실천 경진대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실크공예품 홍보 등 13건, 성공사례집 등 2건의 책자를 발간하는 등 사업의 장단점과 노인들에게 미치는 주요 효과 등을 홍보하였다.

라) 경진 및 성과평가

건강장수문화 우수실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사기를 증진시키고 우수 실천 사례를 확산·보급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촌건강장수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노인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5년 55.4%에서 2009년 69.5%로 마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 사업의 프로그램에 노년층, 젊은 층 등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마을주민이 단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삶의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 생활만족도 결과>

(’05) 55.4 → (’06) 57.6 → (’07) 64.2 → (’08) 65.2 → (’09) 69.5%

※ 농촌 노인의 자긍심 함양 및 삶의 비전 제공

3) 향후계획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게 되었으며, 노년층, 젊은 층 등의 참여로 마을주민들이 협력하고 활기를 찾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사업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마을회관에 모여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예산회계를 광특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공모델 마을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학선진화와 사무관 송선진)

1) 시행배경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학년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96학년도 도입 시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선발 가능하였으나, '97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의 3%, 2006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4%로 확대하였으며, 학생선발 여부 및 자격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표 5-9>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단위: 개소, 천 명, 억 원)

연 도	학교수	모집인원	선발인원
2007학년도	193개교	13,303명	11,857명
2008학년도	186개교	13,270명	11,363명
2009학년도	190개교	12,580명	10,859명
2010학년도	192개교	12,793명	11,449명

3) 향후계획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학생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계

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농산어촌의 학령인구, 특히 우수한 학생의 유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교협과 협의를 통해 농어촌특별전형이 실질적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촌사회과 사무관 전병순)

1) 시행배경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농어업인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등록금 인상률은 6~9%에 달하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도 '08년 기준 평균 등록금이 4백여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위해 정부는 매년 융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졸업 후 1년 후부터 1학기 융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며, 직전 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2009년도에는 정부가 475억 원을 출연하여 28,966명을 대상으로 929억 원(상환금 채용자액 포함)을 융자 지원하였다.

<표 5-10> 학자금 용자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 원)

구분	출연금	용자현황	
		인원수	금액(재용자액 포함)
'94	8,000	1,724	1,712
'95	22,000	19,177	19,089
'96	20,000	19,301	19,252
'97	12,400	19,936	19,849
'98	15,100	19,563	19,396
'99	17,300	20,123	19,579
'00	30,550	20,650	20,476
'01	18,000	18,017	25,023
'02	15,000	15,911	23,764
'03	4,000	19,649	36,698
'04	2,100	26,424	60,652
'05	12,733	25,206	63,702
'06	48,288	24,964	67,664
'07	44,097	26,333	76,942
'08	41,260	26,721	83,843
'09	47,500	28,962	92,916

3) 향후계획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업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청년 실업률 및 첫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사무관 정재범)

1) 시행배경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농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농림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서 2004년까지는 농어촌특별회계,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지원되며 2009년에는 농어촌공공도서관 17개관 건립에 114억 원을 지원하였다. 농어촌공공도서관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 서비스,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들의 문화향수권 및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 11개관을 선정하여 도서관 건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공공도서관 건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설립·운영 전략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2009년 말 기준 전국 읍면 지역에 245개관의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5-11>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5	45	40	25	25	20	20	20	35	112	99	101	56	97	114

3) 향후계획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향후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요자 예측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적정 규모의 건립을 유도하고 중소형·접근성 높은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을 권장하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친환경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농촌사회과 사무관 전병순)

1) 시행배경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는 2009년 현재 월 평균 230천 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제고하였다.

<표 5-1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1995.7~ 2002.12	2003.1~ 2004.6	2004.7~ 2005.12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준등급 (기준소득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 의 1/2	12등급 (440천 원)	13등급 (480천 원)	14등급 (520천 원)	620천 원	730천 원
지원금액 (월/원)	2,200~ 4,400	4,400~ 7,700	8,8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5-1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실적

(단위 : 억 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21	293	271	399	502	605	673	731	793	888

3) 향후계획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농업인 부부 중 소득원이 분명한 상대 배우자나, 부부 중 한 쪽이 연금수급으로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연금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및 선납·분기납제도 등 납부편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농촌사회과 사무관 전병순)

1) 시행배경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민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표 5-1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연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고지원율	8 %	18 %	28 %	28 %	28 %	28%
월평균지원세대	606천세대	603천세대	521천세대	504천세대	484천세대	457천세대
지원예산(원) (전년대비 증감)	340억	666억 (95.8% ↑)	1,339억 (68.4% ↑)	1,431억 (6.9% ↑)	1,559억 (8.9% ↑)	1,559억 (-)

농어민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3) 향후 계획

고령화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차등 지원을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사무관 김유석)

가) 시행배경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령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 및 사망률, 교통사고 및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는 매우 높는데 반해 민간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의 대부분은 공공보건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은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작 하였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만성질환관리, 장기요양서비

스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지원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620억 원을 확보하여 225개소, 2008년에는 675억 원으로 226개소, 2009년에는 625억 원으로 196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율이 51.6%('09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다)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농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미 개선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유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미 충족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기울일 것이다.

2)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사무관 김유석)

가) 시행배경

의료시설 및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도서, 오·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균점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리' 단위에 본격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1,909여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노인인구의 증가, 다문화 가정,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백형학)

가) 시행배경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무의촌지역 해소와 국민의 의료균형을 통한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병역법에 의거해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나) 시행내용 및 성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주로 배치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1차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009년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5,289명(의과 3,397명, 치과 852명, 한의과 1,040명)으로,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3,745명(70.8%), 국공립 병원에 480명(9.1%)이 근무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진료 및 응급처치 뿐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다) 향후계획

향후 지속적인 농어촌지역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취약성 및 보건의료 수요 분석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5.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사회과 사무관 장현아, 전병순)

1) 시행배경

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보육여건과 양육부담에 따른 젊은 층의 출산 기피 및 탈농현상에 따른 과소화·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04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사고 및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인해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05년에 관련 용역 실시 후, '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시행내용 및 성과

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4년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필두로 '06년에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 미이용 아동(자가보육)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08년부터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과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의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향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표 5-15>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변동 추이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11년
지원 대상 (농지소유요건)		1.5 ha미만	2.0 ha미만	5 ha 미만	5 ha 미만	5 ha 미만
지원수준 (지원율)	시설이용	50%	50%	50%	70%	70%
	시설 미 이용	-	-	25%	35%	45%

※ 지원율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에 대한 지원 비율임

나) 영농 · 가사도우미 사업

영농도우미는 농어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52천 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08년에는 69세, 5ha 미만, '09년은 70세 이하, '10년은 75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10년부터는 10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함으로써 조건을 완화하였다. 2009년도에는 12천 농가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고령 가구,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 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19천 농가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5-16>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단위 : 천 호, 백만 원)

연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08	28	5,792	13	4,732	16	1,060
'09	31	5,992	12	4,732	19	1,260

3) 향후계획

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고령화·과소화 되어가는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시설이용 및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건복지부의 양육비 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의 확대를 추진하고, 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일 수 증가, 대상 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2010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10년 월 일 인쇄
2010년 월 일 발행

발 행·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 소·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 화·(02)500-1709
디자인 및 인쇄·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